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II

- 조례 입안심사기준 정비방안 연구 -

차 현 숙



입법평가 연구 16-17-⑤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Ⅱ

- 조례 입안심사기준 정비방안 연구 -

차 현 숙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Ⅱ
- 조례 입안심사기준 정비방안 연구 -
Study 2 on Support for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 Study on Improvement of Legislative
Manuals of Municipal Ordinances -

연구자 : 차현숙(연구위원)

Cha, Hyun-Sook

2016. 11. 30.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2015년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사업을 통하여 수행된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I」에서는 2013년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되어 확산되고 있는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범 조례(안)을 도출하여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음
- 2015년의 연구에 이어 조례 입법평가 지원을 위한 후속연구로서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개정시 활용하고 있는 조례 입안심사기준을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조례 제·개정시 세부적인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조례 입안심사기준의 정비 방향을 지자체 조례 입법 실무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제시함으로써 사전적 입법평가 지원 및 조례 입법평가 수행시 실질적으로 참고 가능한 자료로 정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현행 조례 입안심사기준에 대한 분석
 - 행정자치부 조례 입법실무의 주요내용 분석
 - 법제처 조례 입안매뉴얼의 주요내용 분석
- 조례 입안 실무전문가 대상 실태조사 및 분석
- 조례 입안심사기준 정비방안 제시

Ⅲ. 기대효과

- 조례 입안심사기준 정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부처의 조례 입안심사기준 개선시 기초자료로 활용함
- 조례 입안심사기준 정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조례를 대상으로 한 사전적 입법평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자료를 제시하여 조례 입법평가 정착에 기여함

▶ 주제어 : 입법평가, 조례 입법평가, 사전적 입법평가, 조례 입안심사기준

Abstract

I . Backgrounds and Purposes

- In 2015, KLRI conducted legislative evaluation research project. “Study 1 on Support for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from this project conducted the study on the proposal of “exemplary municipal ordinance(bill)” that might be utilized by local governments which intended to legislate “ordinances on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which had been institutionalized and spread in some local governments since 2013.

- As a follow-up study followed by a study in 2015, to support for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this study intends to propose the improvement of legislative manuals of municipal ordinances that local governments utilize when enacting and amending ordinances.

-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present the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of legislative manuals of municipal ordinances, working as a detailed standard when enacting and amending ordinances, which i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which reflects the opinions of the staffs in charge of enacting or-

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to support ex-ante legislative evaluation, and to propose the direction in order to improve as reference data available when conducting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II. Major Content

- Analysis of the existing legislative manuals of municipal ordinances
 - Analysis of the main contents of legislative practices of ordinances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 Analysis of the main contents of legislative manuals of ordinances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Analysis and fact-finding survey based on responses of experts of legislative practices of ordinances
- Proposal of the improvement of legislative manuals of municipal ordinances

III. Expected Effects

- By presenting improvement of legislative manuals of municipal ordinances,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o utilize as the basis

for the improvement of legislative manuals of municipal ordinances of related ministries.

- By presenting the improvement of legislative manuals of municipal ordinances, the standard data available in the ex-ante legislative evaluation targeting the existing ordinances are provided, whi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settlement of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 Key Words : legislative evaluation,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ex-ante legislative evaluation, legislative manuals and aids of municipal ordinances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5
제 1 장 서 론	1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I. 연구의 범위	12
II. 연구 방법	13
제 2 장 현행 「조례 입안심사기준」 분석	15
I. 법제처 발간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분석	15
II. 행정자치부 발간 「조례 입법실무」 분석	25
III. 현행 조례 입안심사기준의 보완 사항	27
제 3 장 전문가 의견조사	29
제 1 절 전문가 조사 - 정성조사	29
I. 전문가 정성조사 개관	29
II. 전문가 정성조사 결과 분석	30
III. 전문가 정성조사 분석 결과 조례 입안심사기준의 문제점	44
제 2 절 전문가 대상 정량조사	47

I. 전문가 설문조사 개관	47
II. 전문가 설문조사의 주요내용	51
제 4 장 「조례 입안심사기준」 정비방안	113
제 1 절 전문가 조사결과 분석	113
I. 전문가 정성조사 결과	113
II. 전문가 정량조사 결과	114
제 2 절 「조례 입안심사기준」 정비안	117
I. 「조례 입안심사기준」 전반적인 정비방안	117
II.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세부 정비방안	120
참 고 문 헌	129
[부록1] 정성조사 질문지	131
[부록2] 정량조사 질문지	137
[부록3] 정량조사 통계표	14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2015년 입법평가연구사업의 중점수시과제로 진행한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I(이하 “2015년 중점수시과제”라 한다)”은 조례 입법평가 정착을 위한 모범조례안 제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진행된 바 있다.¹⁾ 즉 2015년 중점수시과제는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조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입법평가 모범조례(안)’을 제시하는 것은 주된 연구의 성과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2015년 중점수시과제 수행시 사전적 입법평가의 필요성이 높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조례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1% (매우 필요하다 16%+필요하다 65%)로 대다수의 전문가가 조례 입안시 사전적 입법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²⁾ 이러한 의견에 따라 사전적 입법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2016년의 연구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조례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에서 “사전입법영향분석”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경기도의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실시하며, 소관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³⁾ 즉 경기도의 경우 사전적 입법평가 도입에 관해서 지방의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1) 차현숙,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I-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조례 입법평가 모범조례(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13~14면.

2) 차현숙, 앞의 책, 60면.

3)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경기도조례 제4677호, 2014.1.10., 제정 제5조.

조례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적 입법평가 도입이 활발하지 아니한 현실을 반영하여 사전적 입법평가 도입이 확대되기 전까지 조례 제·개정시 사전적으로 활용가능한 「조례 입안심사기준」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례 입안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법제처와 행정자치부에서 각각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과 「조례 입법실무」이다. 이 두 권의 책자는 조례 입안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 두 권의 책자를 통칭하여 「조례 입안심사기준」으로 부르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입안시에 실제 활용하고 있는 「조례 입안심사기준」의 정비방안을 제시하여 조례 제·개정시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 입안심사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하도록 기초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자 의견을 반영한 「조례 입안심사기준」 정비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정비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조례 입안 전문가들이 조례 제·개정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례 입안심사기준」 정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조례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I. 연구의 범위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안 전문가들이 조례 제·개정안 입안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조례 입안심사기준」의 정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현행 「조례 입안심사기준」인 법제처에서 발간한 「자

치법규 입안 매뉴얼』과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조례 입법실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분석하여 문제점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안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실태조사의 결과를 활용한다. 전문가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조례 입안심사기준」의 정비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아래의 연구 방법을 통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II. 연구 방법

「조례 입안심사기준」의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현행 「조례 입안심사기준」에 대한 분석 및 관련 선행연구 분석과 전문가 실태조사를 통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먼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과 행정자치부의 「조례 입법실무」의 주요내용을 비교·분석하여 1차적인 문제점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1차 분석의 내용이 적절한지 및 「조례 입안심사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등을 기반으로 한 전문가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다. 전문가 실태조사는 표적집단심층면접법(FGI)을 우선 실시하고 FGI 및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된 정량조사 설문지를 기반으로 정량조사(지방자치단체 조례 입안 전문가 100명)를 실시한다. 양자를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조례 입안심사기준」의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현행 「조례 입안심사기준」 분석

I. 법제처 발간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분석

1.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구성 체계

법제처에서 2013년 12월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은 3편, 407면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이다. 주제별·조문별로 “자치법규의 입안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입안 매뉴얼을 작성하였음”⁴⁾을 발간사에서 밝히고 있다.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목차]⁵⁾

편	장	세 목
제1편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제1장 자치법규 입안의 의미	
	제2장 입법의 필요성 판단 및 입법형식의 선택	자치법규 관계 법령
		자치법규의 종류
		입법의 필요성 및 가능 여부 판단
		입법형식의 선택
	제3장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개정·제정방식의 선택
		소관사무의 원칙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의 일반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4)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발간사, 법제처, 2013.

5) 법제처, 앞의 책, 2013의 목차를 표로 구성함.

제 2 장 현행 「조례 입안심사기준」 분석

편	장	세 목	
제2편 세부 입안기준	제1장 총칙규정	개관	
		목적규정	
		기본이념에 관한 규정	
		정의규정	
		해석규정	
		시장 등의 책무·책임 등에 관한 규정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	
	제2장 본칙규정	지방공무원(소속직원)	
		보조·출연	
		공유재산관계	
		기금	
		사용료·수수료	
		위원회	
		행정절차	
		법인·공기업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장 부칙규정	개관	
		시행일에 관한 규정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을 폐지하는 규정	
		조례 또는 규칙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적용례, 특례 및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다른 조례 및 규칙의 개정에 관한 규정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제3편 자 치법규의 체제 및 문장작성 의 원칙	제1장 자치법규 의 체제	의의
			자치법규의 제명
본칙 및 부칙의 체제			
자치법규 조항의 구성방법			
별표나 별지 서식의 사용 방법			
자치법규 작성 형식			

I. 법제처 발간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분석

편	장	세 목
	제2장 자치법규의 개정방식과 폐지방식	개정방식의 기본원칙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의 선택
		전부개정과 폐지·제정방식의 선택
	제3장 법령문장 작성 원칙	법령 문장의 중요성
		법령 문장 바르게 쓰기
	제4장 법령 용어 사용 원칙	적절한 법령 용어 사용의 중요성
		세부기준
		법령 조항의 인용·표시방법
		약칭과 준용 등 특수한 법령 표현
	제5장 제·개정문 작성방법	일부개정방식
		전부개정방식
		폐지방식
		관련성 있는 법령을 함께 개정하는 방식
부록 1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부록 2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		
부록 3 자치법규 입법 절차		
부록 4 법령 해석의 기준		
부록 5 법령안 편집기 소개 및 활용방법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은 크게 입안의 기본원칙, 세부적인 입안기준 그리고 자치법규의 체계와 문장작성 원칙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편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본다.

2.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주요내용

(1)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제1편인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은 자치법규 입안의 의의, 입법의 필요성 판단 및 입법형식의 선택,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의 총 3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⁶⁾ 제1장 “자치법규 입안의 의의”에서는 자치입법권이 무엇인지, 자치법규 입안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 있다.⁷⁾ 제2장 “입법의 필요성 판단 및 입법형식의 선택”에서는 자치법규 관계 법령인 「대한민국 헌법」,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치법규의 종류와 입법의 필요성과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⁸⁾ 또한 입법형식의 선택과 관련하여 사무의 성격과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야 하며,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경우와 상위법령에서 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한 경우에 각각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⁹⁾ 제3장에서는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을 장 제목으로 하여 소관사무의 원칙,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법의 일반원칙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¹⁰⁾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제1장에서는 자치입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는 것과 자치법규의 종류와 각각의 입법형식 및 자치법규 제·개정시 기준이 되는 법의 일반원칙 등 자치입법에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6) 법제처, 앞의 책, 1면, 2013.

7) 법제처, 앞의 책, 3면, 2013.

8) 법제처, 앞의 책, 5면~9면, 2013.

9) 법제처, 앞의 책, 11면~13면, 2013.

10) 법제처, 앞의 책, 14면~59면, 2013.

(2) 세부적인 입안기준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제2편인 세부적인 입안기준은 총칙규정, 본칙규정, 부칙규정의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규정은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에 총칙에 해당되는 부분인 목적규정, 기본이념에 관한 규정, 정의규정, 해석규정, 책무·책임 등에 관한 규정,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에 대하여 각각의 규정방식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다.¹¹⁾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제2편 제1장에서는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경우와 고유의 사무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제정되는 경우 등 입법목적에 따라 관련된 규정의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제2편 제2장은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에 본칙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공무원, 보조·출연, 공유재산관계, 기금, 사용료·수수료, 위원회, 행정절차, 법인·공기업,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과 판례 및 해석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¹²⁾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제2편 제3장에서는 자치법규 제정시 부칙에 해당하는 부분의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시행일, 유효기간,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을 폐지하는 규정, 조례 또는 규칙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적용례, 특례 및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다른 조례 및 규칙의 개정에 관한 규정,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¹³⁾

11) 법제처, 앞의 책, 63면~84면, 2013.

12) 법제처, 앞의 책, 85면~198면, 2013.

13) 법제처, 앞의 책, 199면~238면, 2013.

(3) 자치법규 체계와 문장작성 원칙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제3편은 “자치법규 체계와 문장작성 원칙”이라는 편명을 두고, 제1장에서는 자치법규의 체제, 제2장에서는 자치법규의 개정방식과 폐지방식, 제3장에서는 법령문장 작성 원칙, 제4장에서는 법령 용어 사용 원칙, 제5장에서는 제·개정문 작성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¹⁴⁾ 제3편은 자치법규 제·개정시 활용할 수 있는 입법형식과 같은 입법기술적인 면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것이다.

3.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분석

앞에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일반적인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세부적인 사항을 분석해본다.

(1) 2013년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발간 이후의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보완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제2장에서는 입법의 필요성 판단 및 입법형식의 선택이라는 장명 하에 설명을 하고 있다. 이 중에서 “입법의 형식”과 관련해서 11면~12면에서 <「지방자치법」상 입법형식에 관한 규정 예시>를 표로 제시하고 있다. 2013년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발간 이후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개정이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상 입법형식에 관한 규정 예시표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이러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법」상 입법형식에 관한 규정 예시표는 「지방자치법」에서 조례, 규칙, 의회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각 조문별로 표시하고 있는데, 일부 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오류가 있어서 개정이 필요하다.

14) 법제처, 앞의 책, 241면~345면, 2013.

<「지방자치법」상 입법형식에 관한 규정 예시¹⁵⁾>

입법형식	입법내용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행정동의 설치, 행정동·리에 두는 하부조직(「지방자치법」 제4조의2) •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지방자치법」 제6조) •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지방자치법」 제27조) •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 의원의 상해·사망 등의 보상 지급기준(「지방자치법」 제34조제2항) • 다른 직을 가진 지방의회의원의 서면신고 방법과 절차(「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금지범위(「지방자치법」 제35조제6항) •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지방자치법」 제35조제6항) •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지방자치법」 제42조제3항) •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 •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 • 지방의회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제62조) •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지방자치법」 제66조의3) • 시·도의회 사무처 등 설치(「지방자치법」 제90조) •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지방자치법」 제91조) • 사무의 위임, 위탁(「지방자치법」 제104조) •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 •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

15) 법제처, 앞의 책, 2013, 제11면.

제 2 장 현행 「조례 입안심사기준」 분석

입법형식	입법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 직속기관의 설치(「지방자치법」 제 113조) •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자문기관, 하부행정기구의 설치(「지방자치법」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 제116조의 2, 제120조) • 특별회계의 설치(「지방자치법」 제126조) •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지방자치법」 제139조) • 기금의 설치(「지방자치법」 제142조) •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지방자치법」 제144조) •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지방자치법」 제149조제6항) • 감사청구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제8항) •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 의정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법」 제34조제10항)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의 위임, 위탁(「지방자치법」 제104조) •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인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0조) •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2항) • 위임전결사항(규칙이나 훈령)(「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1항)
의회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지방자치법」 제15조의2제3항) • 지방의회 내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법」 제43조) • 조례안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법」 제66조의2제2항)

입법형식	입법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법」 제71조) • 방청인에 대한 단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법」 제85조제3항) • 지방의원의 징계(「지방자치법」 제89조) • 지방의회의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에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법」 제60조)

위의 「지방자치법」상 입법형식에 관한 규정 예시표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제15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시·도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9세 이상의 주민 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주민의 수를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어서 추가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의 직접적인 위임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의 정비가 필요하다.

나아가 이 책자 발간 후에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시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 사무개편 관련 법령 미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개편에 관하여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16면 각주 12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책자 제정 당시 국회에 계류 중이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으로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의 구분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정안의 내용은 최종적으로는 반영되지 못하였다.

2012. 9. 19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의 구분체계를 개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와 법정수임사무로 이분화하고, 단체위임사무는 자치사무로 전환하며, 기관위임사무는 사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국가로 환원 또는 법정수임사무로 전환하거나 지방이양을 통해 자치사무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정수임사무란 국가사무이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가 수입한 사무로, ① 현재 기관위임사무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에 의한 신설이 가능하나, 법정수임사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법정수임사무 목록을 명시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일방적인 법정수임사무 증설이 방지되고, ②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조례제정이나 행정 조사 또는 감사가 불가능하나, 법정수임사무는 지방의회의 조례제정이나 행정 사무 조사 또는 감사가 가능해진다. 또한 ③ 기관위임사무는 규칙으로 하부행정기관, 보조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위임할 경우 위임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법정수임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재위임시 사전승인절차를 폐지하고 있다.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작성 당시의 논의가 현재 법령에 반영되지 못한 사례인데, 향후 매뉴얼 개정시에는 당시의 논의에 대한 현재의 변화를 반영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사항을 전제로 한 논의인가의 문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등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참고하는 기초자료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입법에 대한 기초교육에도 활용되는 등 자치입법에 있어서 중요한 책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매뉴얼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전부 담고 있는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II. 행정자치부 발간 「조례 입법실무」 분석

1. 행정자치부 발간 「조례 입법실무」의 구성체계

행정자치부(당시 행정안전부)에서 2012년 12월 발간한 「조례 입법실무」는 총 8장, 232면에 이르는 자료이다.

「조례 입법실무」의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 : 「조례 입법실무」의 구성]

장	절
제1장 자치입법개요	제1절 자치입법권
	제2절 자치법규의 종류
	제3절 자치법규의 효력
	제4절 자치입법 관계 법령

제 2 장 현행 「조례 입안심사기준」 분석

장	절
제2장 자치법규의 규율범위와 한계	제1절 개요
	제2절 조례의 규율범위
	제3절 규칙의 규율범위
제3장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및 기준	제1절 개요
	제2절 조례의 입법절차
제4장 자치법규의 입안형식	제1절 자치법규의 구성 형식
	제2절 자치법규의 조문 형식
	제3절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안 작성 방식
제5장 조례의 재의요구 및 제소	제1절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제2절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제소
	제3절 재의요구 및 제소의 유형별 사례
제6장 조례의 제정·개폐청구제도	제1절 개요
	제2절 청구권자 및 청구요건
	제3절 청구 및 처리 절차
제7장 국제통상협정과 조례와의 관계	제1절 개요
	제2절 조례 제·개정시 주요 유의사항
제8장 자치법규의 정비	
참고자료 1. 관계법령 발췌	
참고자료 2. 자치법규 입법 등에 관한 지침	

2. 「조례 입법 실무」의 주요내용

「조례 입법 실무」는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자치입법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제2장은 자치법규의 규율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조례와 규칙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제3장은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 제4장은 자치법규의 입안형식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조례의 재의요구 및 제소에 관하여, 제6장에서는 조례의 제정·개폐청구제도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국제통

상협정과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제8장에서는 자치법규의 정비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관련된 참고자료로 관계법령 발췌, 자치법규 입법 등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설명하고 있다.

3. 「조례 입법 실무」 분석

행정자치부가 발간한 「조례 입법 실무」에서는 조례 입안에 필요한 사항도 일부 담아서 설명하고 있지만 조례 입안시 실제 참고할 수 있는 조례 입안에 관한 사항의 비중이 법제처에서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비하여 크지 않다. 다시 말하자면 조례 입안심사기준으로서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에는 그 비중이 적어서 실제 조례 입안시에 활용은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조례 입법의 전후와 관련된 실무의 전반적인 사항 즉, 조례의 재의요구 및 제소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아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따라서 조례 입안 당시 보다는 조례 입안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로서의 역할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Ⅲ. 현행 조례 입안심사기준의 보완 사항

1. 조례 입안심사기준 관련 책자 발간 후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미반영

조례 입안심사기준을 살펴본바, 양 책자는 각각 2012년과 2013년에 발간되었다. 이후 지방자치 관련 법령은 많은 개정이 있었다. 예를 들자면 「지방자치법」은 2013년 12월 12일, 2014년 1월 21일 일부개정이 있었으며, 2013년 이후 5차의 타법개정이 있었다. 「지방재정법」은 2013년 이후 10회의 일부개정을 포함한 17번의 개정이 있었다. 이와 같은 주요한 지방

자치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에 대하여 조례 입안심사기준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의 현행화를 위해서 해마다 개정판을 발간하는 것이 어렵다면 중요한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제정 시에 추록 형태로 추가된 부분을 발간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 조례 입안 전반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단권화

양 책자는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법제처에서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은 자치법규 입안에 강점을 가지는 반면에 행정자치부가 발간한 「조례 입법 실무」는 조례 관련 실무 전반에 걸쳐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망라하고 있다. 양자의 특성을 통합하여 하나의 책자로 발간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즉, 입법지원에 관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 입안심사기준을 단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입법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양자의 비교분석에 기반하여 매뉴얼의 정비의 방향 및 필요한 경우 세부적인 정비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제 3 장 전문가 의견조사

전문가 의견조사는 정성조사와 정량조사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 장에서는 전문가 의견조사를 정성조사와 정량조사로 그 결과를 분석한다. 제1절에서는 전문가 정성조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서술하고 제2절에서는 전문가 정량조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서술한다.

제 1 절 전문가 조사 - 정성조사

I. 전문가 정성조사 개관

전문가 정성조사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조례 입안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입안 전문가는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하였다.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시 반영되는 경우가 많고,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조례 입안에 대한 지원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 조사는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기간으로 진행되었으며, 먼저 표적집단 심층면접방식인 FGI(Focus Group Interview)를 2회 실시하였다. FGI는 13명의 전문가그룹을 2회에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FGI 결과를 반영하여 서면질문지를 보완·확정하여 정량서면 인터뷰를 추가로 수행하였다. 세부적인 진행사항은 다음 표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표 3 : 전문가 정성조사 개관]

모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개 광역자치단체 조례 입안 전문가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입안 관련 전문가 42명 • 서면응답: 29명, FGI: 13명(2회)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GI 좌담회: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해진 설문지에 따라 이야기를 나눔 • E-mail 서면조사: 사전 전화 연락을 통해 조사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이메일로 설문지를 발송하고 응답 내용을 회신 받음
조사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12월 01일 ~ 12월 30일(한 달간)
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국리서치

II. 전문가 정성조사 결과 분석

전문가 정성조사는 총 42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2차에 거쳐,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FGI를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설문지를 확정하여 두 번째로 서면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질문의 주요 쟁점에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전문가 정성조사의 결과는 FGI와 서면 인터뷰의 내용을 함께 분석하였다.

1. 전문가 담당업무

질문 1) 자치법규 입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지요?

○ 총 42명의 전문가들 중 1명의 전문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직접 자치법규 입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과거에 담당 경험이 있었다. 참여 업무로는 조례 조문 작성, 조례 입안 관련 자문, 조례 내용에 대한 평가, 조례 제·개정 참여 및 조례 정비안 마련 등으로 응답하였다. 1명의 전문가는 전문가 자문 및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치법규 입안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표적인 응답사례는 다음과 같다.

⇒ “정책자문위원의 역할 중 하나가 의원발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제·개정(안) 작성을 지원하는 것임. 이에 따라 의원 요구 시 조례 제·개정(안)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는 별도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례 제·개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안)으로 작성하기도 하고 있음”(전문가28)

⇒ “간접적으로 전문가 자문 및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자치법규 입안에 참여”(전문가24)

2. 보조자료 활용

질문 2) 자치법규 입안 지원 시 어떠한 보조 자료를 활용하시는지요?

○ 자치법규 입안 지원시에 어떠한 보조 자료를 주로 활용하는 가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법제처, 행정자치부의 발간 자료나 온라인 제공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거나, 법제처의 해석례, 조례 대상 판례의 유사한 사례, 타 시·도의 입법 사례를 참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 “기본적인 자료로 기존의 법률 검토, 자치단체의 개정방향을 검토, 자치법규정보 시스템, 기타 법률입안과 관련된 입법안이나 서적 참고”(전문가21)

⇒ “법제처 발간 주제별 조문별 자치법규 입안매뉴얼,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회법제실 발간 법제실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등”(전문가2)

⇒ “솔직히 참고 자료는 없어요 워낙 들어오는 사안들이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들어와서 그냥 검토하면서 제가 가진 법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하는거지 참고하는 거는 없고 그냥 판례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보고 법제처 해석이 있는지 그 동안 참고한 것 같아요.” (전문가36)

3. 행정자치부, 법제처 발간 자료 활용

질문 3)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입안에 도움이 되는 기준을 책자형태(행자부: 자치법규 입법실무, 법제처: 주제별·조문별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평소 업무에 이 책자들을 활용하시는지요?

-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입법실무」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평소 업무에 활용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문가 대부분 발간 자료를 활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때 주로 입안 혹은 제·개정 시 조례의 형식, 입법의 원칙, 조례 입안 체계, 법령 용어, 사례 등을 참고한다고 응답하였다.

⇒ “조례 제·개정(안) 작성 시 올바른 입안형식을 취하고 있는지를 검증할 때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작성할 때, 형식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살피는 데 활용하고 있음”(전문가28)

- ▷ 입법의 내용과 절차 등 전반적인 개념을 알기위해 교육 자료로도 활용한다고 응답한 의견이 있었다.

⇒ “자치 입법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이 없어 자주 활용하고 있음”(전문가8)

- ▷ 신입사원 참고자료용으로 권장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했으며,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발간 자료에 대해 모르고 있었거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실제 입안 시 사례가 부족하여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 “자치법규 입안 시 궁금한 점이 있을 때만 참고 및 보조자료로 활용하고 있지만, 실제 자치법규 입안 시 사례 중심의 내용이 부족하여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편임”(전문가20)

⇒ “개정 등 그 형식이 정해진 경우에는 형식을 확인하거나 지시문을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음”(전문가 9)

⇒ “기준 표를 제시하고 있거나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 적용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부족한 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전문가33)

4. 자치법규 입법실무 입안 지원 효과성 여부

질문 4)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입법실무」는 2012년 12월에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자 제3장은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및 기준에 대하여, 제4장에서는 자치법규의 입안형식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자치법규 입법실무」, 67~102p). 즉 자치법규 입안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을 적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 책자의 제3장과 제4장의 내용은 자치법규 입안에 필요한 사항을 망라하여 담고 있는지요?

○ 개괄적으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입안 업무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에게는 적절하지만, 기본만 서술되어 있어 실제 업무 사용에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 “자치법규의 큰 체계적인 틀 내에서의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개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자치법규의 입안업무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에게는 입안매뉴얼로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임”(전문가12)

▷ 실무에 적용이 쉽도록 쟁점·사례 위주 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구체적인 정보가 있지는 않지만 조례와 관련된 판례 등을 살펴보는 데 활용하고 있음. 다만, 세부적인 사례들 및 최근 검토 사례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전문가 10)

⇒ “조례 다툼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해석예가 많이 소개되었으면 좋겠고, 사례 중심과 실질적인 예시 등이 포함되었으면 하며,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교과서 편제보다는 실무중심으로 발간되었으면 함”(전문가14)

▷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발의 별로 조례를 구분하여 제시하거나 입법평가(입법영향분석) 관련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 “조례안 입안의 발의절차에 대한 부분을 의원발의 조례, 지방자치단체장 발의 조례, 주민의 청구에 의한 조례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 필요. 입법 절차가 다소 다르므로, 다른 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전문가11)

⇒ “의회 의원발의나 위원회 발의 조례의 경우 집행기관장(단체장) 발의에 비해 절차적으로 간단하나 지방의회별로는 내부적으로 입법예고와 관련된 조례도 있고, 비용추계와 관련되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지방의회도 있으므로 상술할 필요가 있으며, 입법영향분석(사전평가, 사후평가) 관련 부분도 부연 설명할 필요가 있음”(전문가15)

▷ 한자어 투 등 입법에 사용되는 용어 정리와 조례 제·개정시 문안, 서식 등 구체적인 작성방법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 “사용하는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입법에 있어 사용하는 용어들이 통일 되지 않아 매번 개정 때마다 용어의 정리부분도 많이 논의되고 있음”(전문가21)

- ▷ 유형별로 분류된 자치법규 전문이나 자치법규의 입법절차를 부록으로 수록 요망
 - ⇒ “대표적인 실제의 자치법규의 전문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부록으로 첨부해 준다면, 자치법규의 입안에 보다 편리하게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임”(전문가22)

5. 주제별 · 조문별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입안지원 효과성 여부

질문 5-1) 법제처의 「주제별 · 조문별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은 2013년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행정자치부의 책자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자치법규 입안 시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자의 세부 입안기준은 자치법규 입안에 필요한 사항을 망라하여 담고 있는지요?

- 입안에 필요한 사항을 망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는 응답도 다수 존재한다. 행정자치부 발간 「자치법규 입법실무」 대비 영역별로 내용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나 사례 중심 위주 보완, 개별 영역에 대한 설명 보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 ⇒ “본칙에 들어가는 내용이 다 있는 거 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전문가36)
 - ⇒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있다고 보임. 몇몇 입법 사례안을 제시하여 사례검토가 가능해 보임. 행정자치부 내용 대비 영역별 고려사항들이 명기되어 있음”(전문가13)
- ▷ 입법절차, 조례 제·개정, 폐지 등에 대해 더 구체적인 사례, 예시 필요하며, 관련 판례가 풍부하게 작성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다.
 - ⇒ “조례 제·개정, 폐지 등에 대한 방식 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구체적인 개정방식 등에 대한 내용 추가 필요”(전문가11)
 - ⇒ “조례 입안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율할 수 있는 보다 풍부한 주제별 예시가 있었으면 함”(전문가2)
 - ⇒ “관련 판례를 좀 넣어주시면 좋겠어요.”(전문가36), “판례집과 유사하게 판례가 유형별로 소개되면 좋겠음”(전문가38)

- ▷ 상세한 규정 설명 및 용어의 개념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기관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필요함.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자치단체가 설립하지 않더라도 제4조에 따라 설립조례를 제정해야 하는지, 혹은 설립의 개념 등”(전문가7)
 - ⇒ “총칙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시책 수립규정 등의 보강이 필요. 부칙 규정에서 업무규제, 자격부여, 부관, 취소, 가산금, 연체금, 재정·회계, 행정지도, 보고, 출입·검사, 공청회와 관련한 규정의 설명이 따로 표시되었으면 함. 또한 경과조치 규정 보강 필요”(전문가15)

질문 5-2) 이 책자의 제3편은 자치법규의 체제 및 문장작성의 원칙에 관하여 적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다양한 법령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의 방식이 조례 입안 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조례 입안 시 참고자료로 도움이 되나, 내용 구성에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 “최근 입안 과정에서의 사례들을 보완하는 등 풍부한 예시를 포함하도록 정비되면 좋을 것 같음”(전문가 11)
 - ⇒ “자치법규의 유형(제정, 개정)별로 나눠 설명이 있으면 도움이 더욱 될 것 같고, 개정안의 경우 폐지 조례안, 수정안, 대안, 위원회 안 등으로 나눠서 설명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듯함”(전문가15)
- 조례를 예시로 하여 설명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 ⇒ “법령을 사례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 조례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 조금 더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전문가 13)

6. 지방자치 관련 중요 법령 개정에 따른 발간 자료 활용도

질문 6) 최근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등 주요한 법령들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자치법규 입안과 관련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변화에 위의 책자들을 활용하여 입안 지원이 가능한지요?

- 일반적 흐름과 형식적인 측면을 참고하는데 도움이 되나, 최신 이슈와 관련이 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사례 동향 파악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례 및 관련 사례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 “최근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개정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기적인 개편이 이뤄지지 모세 최근 법령집을 다시 검색해야 하는 사례가 많음.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수준에서는 활용도가 높지만 적시성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임”(전문가1)
 - ⇒ “지금까지 조례 입안 일반론적 관점에서 관련 자료들이 출간되었다면 앞으로는 개별 영역 내지 쟁점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집들이 일련의 계획에 따라 출간되었으면 함”(전문가29)
- ▷ 제·개정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 “법 개정사항의 중요한 부분, 즉 쟁점사항을 사례로 넣어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됨”(전문가 8)
 - ⇒ “입안지원을 위하여 제·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입안 내용을 PDF 등으로 온라인 제공이 6개월 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규제 등의 적용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 꼭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함”(전문가24)
- ▷ 재정법제 부분의 입안원칙 및 기준에 관련한 사항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 “재정·회계제도, 조세법 규정에 대한 입안원칙 및 기준을 추가하여야 하고, 보조금, 출자·출연, 공유재산관리부분은 다양한 사례제시와 좀 더 세부적인 항목별 입안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완이 필요함”(전문가19)

▷ 중요한 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방의회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와 관련된 중요한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조례의 일괄개정이 추진되기도 함. 이 때 이러한 일괄개정은 집행부를 중심으로 진행됨.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받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항이 지방의회에는 잘 전달되지 않는 경향이 있음. 행정자치부 및 법제처의 협업을 통해서 지침을 한번 더 정치하게 검토하여 내려주도록 체계화되면 좋겠고 의회와의 협업도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됨”(전문가 9)

7. 새로운 조례 입안심사기준 마련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질문 7) 새롭게 조례 입안심사기준을 마련한다면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입법평가조례, 심사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 및 주로 사용되는 입안기준에 대한 구체적 내용 제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심사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예시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한다면 실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흔히 잘못 작성할 수 있는 예시문을 주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를 설명해 주는 방식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전문가4)

⇒ “기존과 변화된 체계에 있어서 비교체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서도 비교표로 차이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전문가27)

⇒ “자치법규의 입법한계를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고,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한 설명 필요”(전문가18)

▷ 현재 수요에 맞는 조례 입안심사기준의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중앙정부가 법령 제·개정 시 재정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pay go 원칙에 입각한 ‘비용추계’를 강화하고 있음. 따라서 새롭게 조례 입안심사기준을 추가한다면 새로운 재정 수요를 발생시키고 있는가?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은 있는가? 라는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봄”(전문가28)

▷ 기타의견으로 내용과 형식을 분리해서 책자를 제작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 “조례 입안 심사기준을 새롭게 정비한다면 조례 입안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적인 부분과 조례 작성에 관련된 형식적인 부분을 별책으로 나누어 책자를 제작하면 업무시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됨”(전문가10)

8. 조례 입안심사기준 마련 시 기타 필요한 사항

질문 8) 그 밖에 조례 입안심사기준을 마련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요.

○ 실질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입안심사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중복적으로 제시되었다.

⇒ “많은 지자체에서 자치법규의 미정비에 따른 근거 법령과 불합치, 위임사항 부적정, 실효성 부족, 용어선택 부적정, 맞춤법 및 띄어쓰기, 오기, 사문화된 문구 등을 분석 검토할 수 있는 분석틀을 입안기준에 맞도록 제작하여 지자체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전문가20)

⇒ “위헌 위법 조례 중심의 입안심사기준보다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유형별 사례별 모범적인 조례 예시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임”(전문가1)

⇒ “개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반영되었으면 함”(전문가14)

⇒ “입법(영향)평가를 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남에 따라 입법(영향)평가에 대한 사항 설명 및 입법례를 포함하였으면 함”(전문가7)

○ 예산이나 기금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 “예산이나 기금과 관련된 부분은 전문적인 해설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면 좋겠다.”(전문가27)

- 향후 입안심사기준 작업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 “조례 입안심사기준을 정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반영하면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임”(전문가1)

9. 법령의 내용을 유사하게 조례로 제정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

질문 9) 입안 형식 중에 법령에서 대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을 거의 유사하게 조례로 제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이러한 조례 입안 방식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로 조례의 완결성을 이유로 찬성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 법령이 담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게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정 조례만 숙지하면 관련 법령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도 법령을 상세히 명시해야 하며, 따라서 중복이 되더라도 조례의 완결성과 조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법령과의 중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찬성 쪽의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 “법령에서 대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을 거의 유사하게 조례로 제정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조례의 완결성 측면에서 찬성하며, 또한 조례가 실질적으로 적용 받는 주민입장에서 판단하건데, 조례를 보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법령을 찾아보지 않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중복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됨.”(전문가14)

⇒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의 경우도 수범자 입장에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법령에서 이미 작성된 내용이라고 이를 조례에서 다시 적지 않으면 수범자가 조례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을 모두 찾아봐야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됨. 조례의 적용대상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조례만 숙지하면 관련 법령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령에 있는 내용이라도 조례에서 다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전문가4)

▷ 반면에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자치 입법권의 확대를 위해 법령에서는 되도록 간소하게 다루고,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조례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 의견도 많이 제기되었다.

⇒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해야 하는 경우 법령에서는 큰 틀만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형식이 변화되어야 지방자치와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됨”(전문가2)

⇒ “법령에 조례처럼 너무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굳이 조례로 새로 만들 필요가 없도록 하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법령에 대강을 담고 조례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치의 실질과 자치권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라고 생각함.”(전문가5)

⇒ “법령에서 조례위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한이 축소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향해 표절조례를 지향할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법령에 지방사정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완결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 실제로 많은 법령사례에서 과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고,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 별로 다양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법령의 지방자치단체 수범자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법령을 입안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다소 포괄적으로 정하고, 그 구체적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의하도록 전환되어야 할 것임.”(전문가9)

▷ 반대 의견 중에서는 법령에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굳이 다시 조례로 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중복되는 내용은 차라리 조례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법령에서 대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를 지방정부가 재차 조례의 형식으로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법령이 대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집행과 집행기관이 특정되어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중앙행정기관의 하부 기관으로서 위임사무만을 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 집행기관의 종류, 책임, 범위, 한계 등을 정해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법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러한 범위에서 지방정부가 따로 이를 재차 반복하는 조례입법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전문가26)

10. 실제 조례 사례 위주의 조례 입안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제공의 필요성

질문 10) 조례 입안 매뉴얼을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 제공)과 유사하게 조례에도 그렇게 풍성하게 해서 실제 조례 사례들을 가지고 만들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제공을 하는 방식이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공무원들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법제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사례 위주의 매뉴얼 편찬에 대해서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며,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표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지방 공무원 중에는 법률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법제전문가가 조례담당 공무원에 대해 교육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전문가22)

⇒ “조례 입안의 초보자부터 숙련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가장 기초적인 사항부터 구체적이고 충분한 사례를 담아 편찬하는 것이 조례 입안 매뉴얼의 활용도의 측면과 자치법규 입안 실무의 측면 모두 도움이 될 것임. 현재 법제처에서는 자치법규 입안 실무를 기본과정 및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해당 교재도 달리하고 있으나, 입안 매뉴얼은 모든 공무원이 자치법규 입안에 대한 실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단권화하는 것이 교육 및 실무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임.”(전문가2)

⇒ “지금 법제처에서의 교육을 보면 상임위에서의 검토 보고서를 이렇게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는 실제 입안을 하는 부분이 같이 합쳐져서 교육이 실시가 되는 형태잖아요? 그거를 좀 소수라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좀 특화를 시켜서 입안을 하는 담당자들을 전국적으로 모으면, 그래서 중급 과정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특화를 시켜내면 저는 그거는 상당히 당장 저라도 가서 듣고 싶을 것 같습니다.”(전문가33)

▷ 특히, 타 시·도 조례와 관련법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실무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타 시·도 조례를 다양하게 제공해 주길 원하는 의견도 있었다.

⇒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타 시·도 조례와 관련법을 벤치 마킹하는 것이 실무에서는 도움이 된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수의 인원이 자치법규 재개정 지원 업무를 맡고 있으므로 중앙에서 실시하는 참여교육은 참석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실무자 위주의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사이버교육은 너무 추상적인 이론 위주인거 같음.”(전문가6)

▷ 한편, 매우 많은 양의 사례 제공 시 자칫 방만하게 될 우려가 있어, 대표적인 사례들을 추려서 요약 정리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의견과, 사례 자료나 교육 자료는 별도로 편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개인적으로는 풍부한 사례를 예로 드는 것도 좋지만, 자칫 방만하게 될 우려도 있는 바, 대표적인 사례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봄. 특히 현재 법제처에서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경우, 자치법규 입안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행 책자를 보다 보기 알기 쉽고 보기 편하게 하는 노력과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한 보완이 이뤄졌으면 함.”(전문가28)

⇒ “심사기준을 실제 사례를 통해 만든다면 당연히 더욱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사례자료나 교육자료는 따로 만드는게 어떻게 생각해 본다.”(전문가21)

11. 자치법규 입안 지원에 대한 필요 사항 기타 의견

질문 11) 그 밖에 자유롭게 자치법규 입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 조례 입안심사기준 상 참고 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 입안지원 외에 자치법규 심사 지원에 필요한 내용 필요(전문가11)

⇒ 각 조례마다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예시문을 적절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전문가4)

⇒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잘된 예, 잘못된 예를 제시해주면 좋겠다(전문가22)

- ⇒ 지방자치와 관련한 주요 법령 개정 시 주요 개정 내용과 이에 따라 조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월별로 모니터링하여 법제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료 제공 필요 (전문가28)
- ⇒ 자치법규 입안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구상해 낼 수 있는 참고 자료 필요(전문가15)
- ⇒ 자료에 실질적인 쟁점과 사례 등이 반영돼,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이 담기길 바라며, 표준 조례안 등이 반영되길 바람(전문가14)
- ⇒ 법조문 한글화로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이 있음. 한글보다 한자로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한자어 사용이 더 나옴(전문가16)
- ⇒ 자치법규의 입법한계와 처벌조항의 입법한계에 대해 상세한 설명 추가 필요(전문가18)
- ⇒ 위법, 위헌 사례에 대한 사전 인지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사례 제시 필요(전문가19)

○ 교육 시스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 ⇒ 동영상, 앱 개발 등 학습 및 사례에 대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필요(전문가10)
- ⇒ 동영상이나 교육을 통해 실전 교육 필요(전문가21)
- ⇒ 관련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자치법규 입안, 심사교육을 공개할 필요, 모범적 조례를 발굴해 positive 방식의 교육 실시(전문가1)
- ⇒ 더 자주 조례관련 교육 기회 필요. 법제처, 법제연구원 등 관련 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 가동 검토 필요(전문가3)
- ⇒ 법제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실정. 지자체 순시 교육이 절실히 필요(전문가9)
- ⇒ 자치법규 관련 전문소양 교육 지원 필요(전문가24)

○ 평가 체계에 대한 의견

- ⇒ 자치법규 사후 평가 체계 마련 필요(전문가6)
- ⇒ 조례제정에 대한 사전평가, 사후 평가 의무화 필요(전문가26)
- ⇒ 조례에 대한 심사 전담 기구 필요(전문가3)

○ 기타 의견

- ⇒ 자치법규 의견 제시를 위해 법령해석이 필요한 경우 법제처에서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듣고 법제처의 해석을 통해 의견을 제시해 주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전문가2)

- ⇒ 자치법규 지원을 위한 별도의 전문기구 설치 필요(전문가8)
- ⇒ 국가입법지원편집기와 같은 조례의 입법지원 시스템 구축(전문가12)
- ⇒ 지방의원 입장에서의 논의 구조가 보장되었으면, 상당수의 유권 해석들이 소극적 형태를 보여 이 부분에 대한 고민 필요(전문가13)
- ⇒ 지자체에 권한과 책임을 포괄적으로 부여하고 전문성 키울 수 있도록 노력(전문가20)
- ⇒ 법률에서 자치법규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노력이 필요(전문가23)
- ⇒ 지역별 입안전문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필요, 전문기관과 지속적 연계 구축 필요(전문가24)
- ⇒ 매뉴얼대로 자치입법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보강(전문가25)
- ⇒ 자치법규 입안 지원에 필요한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전문가27)
- ⇒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옛날 법령을 근거로 가지고 있는 경우 조례 또한 정비 필요(전문가36)

Ⅲ. 전문가 정성조사 분석 결과 조례 입안심사기준의 문제점

이상과 같은 전문가 정성조사의 결과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분석하여 조례 입안심사기준의 정비방향을 추려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관련 의견 분석 결과

1) 조례 제·개정시 참고가능한 전반적인 사항 포섭 필요

전문가 정성조사 결과 및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발간사에서 밝히고 있듯이 “법령의 구성체계에 따라 총칙과 본칙 그리고 부칙에 관한 세부기준들을 담았으며, 실무적으로 질의가 많은 공유재산 관계, 위임·위탁, 사용료·수수료, 위원회, 보조·출자 등에 관한 내용을 본칙 중에 우선 정리”하였다¹⁶⁾고 적고 있다. 조례의 본칙과 부칙 중에서 실무적으로 질의가 많은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입안 매뉴얼을 정리하였기 때문

16) 법제처, 앞의 책, 발간사, 2013.

에 법제처에서 법령에 대한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비하여 구성이 단출한 편이다. 따라서 조례 제·개정안 마련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서 빠져있는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최근 조례도 법령의 영역이 다양화되는 현상에 영향을 받아서 다양한 분야의 조례가 법령의 위임을 받아서 또는 자치입법으로 제정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본칙 규정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2) 실제 조례를 포함하는 다양한 사례 보강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은 자치법규 즉 조례를 입안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책자이다. 그런데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많은 부분은 법령을 작성하는 것을 사례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제3편은 작성의 원칙을 장의 제목으로 하여 기술되어 있는데, 이 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례는 법령을 중심으로 소개되어 있다. 법령은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규범임에는 분명하지만, 조례를 포함하는 자치법규를 입안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매뉴얼이라는 점에서 실제 조례를 사례로 들어서 소개하는 방식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이 책자가 작성될 때에는 법령문장의 작성 원칙을 소개하고 그것을 참고하여 자치법규를 작성하라는 의미로 기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는 시점에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도 자치법규에 적합하도록 정비가 될 필요가 있다.

3) 지방자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변화 필요성

지방자치가 시작되어 발전해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지방자치 관련 법령도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2014년 11월 29일 개정된 「지

방재정법」을 들 수 있다. 당시 「지방재정법」의 주요한 개정내용은 “목적세의 특별회계 운영 및 존속기한 도입(제9조)”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은 “① 목적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로 설치·운영하고,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회계 외에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보조금관련 조례는 전체적인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적으로 법령의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준비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은 개정된 지방자치 관련 법령에 따른 자치입법의 변화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였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조례의 정비와 같은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변화로 인한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조례 입법 실무」관련 의견 분석 결과

1) 자치입법 입안 관련 실무 활용성 제고

행정자치부에서 2012년 발간한 「조례 입법 실무」는 자치입법에 관련된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다양한 판례례를 소개하고,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및 기준, 입안기준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다. 또한 조례와 관련된 절차 및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까지 망라하여 소개하고 있다.

자치법규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헌권의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서 자치법규 입안에 관련된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설명은 부족한 편이다. 자치법규 입안에 관련된 형식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자치법규 입안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나 입안기준에 대한 설명이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지방자치 관련 법령 개정 등 변화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필요

「조례 입법 실무」에서는 지방자치 관련 법령에 대하여 14면부터 16면에서 개괄적인 소개를 하고 있다. 자치입법 관계 법령으로 「대한민국 헌법」,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절차법」, 「법제업무운영규정」, 「지방재정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 관련 법령은 이 밖에도 많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등 특정한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관련 법령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간단하게라도 소개한다면 자치법규 입안 업무를 시작하는 사람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서 보다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향후 「조례 입법 실무」를 보완하는 경우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 2 절 전문가 대상 정량조사

I. 전문가 설문조사 개관

제1절에서의 전문가 정성조사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17개 광역자치단체 조례 입안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기반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CAWI(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로 수행되었으며, 2016년 5월 26일 ~ 5월 31일 (6일간)의 기간에 이루어졌다. 설문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주)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세부적인 조사설계 사항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조사 설계

[표 4 : 전문가 정량조사 조사 설계]

모집단	• 17개 광역자치단체 조례 입안 전문가
표본추출	• 임의 추출
표본크기	• 유효표본 100명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 CAWI(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pm 9.8\%$
조사일시	• 2016년 5월 26일 ~ 5월 31일 (6일간)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

2. 주요 조사 내용

전문가 정성조사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된 전문가 조사(정량조사)의 설문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표 5 : 전문가 정량조사 세부항목]

구 분	세 부 항 목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법규입안매뉴얼 인지여부 및 인지 정도 • 자치법규입안매뉴얼 사전안내 및 교육 여부 • 자치법규매뉴얼 교육 주체 • 자치법규매뉴얼 활용경험 여부 및 활용 자료 유형 • 자치법규 입안실무, 매뉴얼 활용 정도 및 활용, 비활용 이유

구 분	세 부 항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법규매뉴얼 활용한 부분 • 자치법규 입안매뉴얼 이용정도 및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항목별 실용성 평가 •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항목별 비실용 이유 •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개정 및 보완 필요성 •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개정 및 보완 영역 • 행자부 자치법규 입법실무 망라성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매뉴얼 망라성 • 다양한 법령을 예시로 설명하는 방식의 도움 정도 • 자치법규 입법실무, 자치법규 입안매뉴얼의 실무 도움 정도 • 자치법규 입법실무, 자치법규 입안매뉴얼의 개정 및 보완 주기 • 조례 입안심사기준 마련 시 가장 중요하게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법령의 내용을 조례로 반복하는 자치법규의 입안 방식 의견 • 실제 사례 위주의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제공의 필요성 • 희망하는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교육 방식 • 적당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교육 시간

3. 응답자 구성

응답자 구성은 조례 입안 관련 업무 종사자 10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의 법제업무 담당자가 35명, 교육 담당자가 6명, 규제심사 담당자가 6명, 입법지원 담당자가 5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6 : 응답자 분포표]

Base=전체	사례수 (명)	비율 (%)
전체	(100)	100.0
성별		
남성	(67)	67.0
여성	(33)	33.0

제 3 장 전문가 의견조사

Base=전체	사례수 (명)	비율 (%)
연 령		
30대	(24)	24.0
40대	(47)	47.0
50세 이상	(29)	29.0
담 당 업 무		
법제업무	(35)	35.0
교육	(6)	6.0
규제심사	(6)	6.0
입법지원	(53)	53.0
근 무 경 력		
3년 미만	(63)	63.0
3~5년	(17)	17.0
5~10년	(10)	10.0
10년 이상	(10)	10.0
근 무 지 역		
서울	(10)	10.0
경기/인천	(21)	21.0
대전/세종/충청	(13)	13.0
대구/경북	(14)	14.0
부산/울산/경남	(9)	9.0
광주/전라	(17)	17.0
강원/제주	(16)	16.0

II. 전문가 설문조사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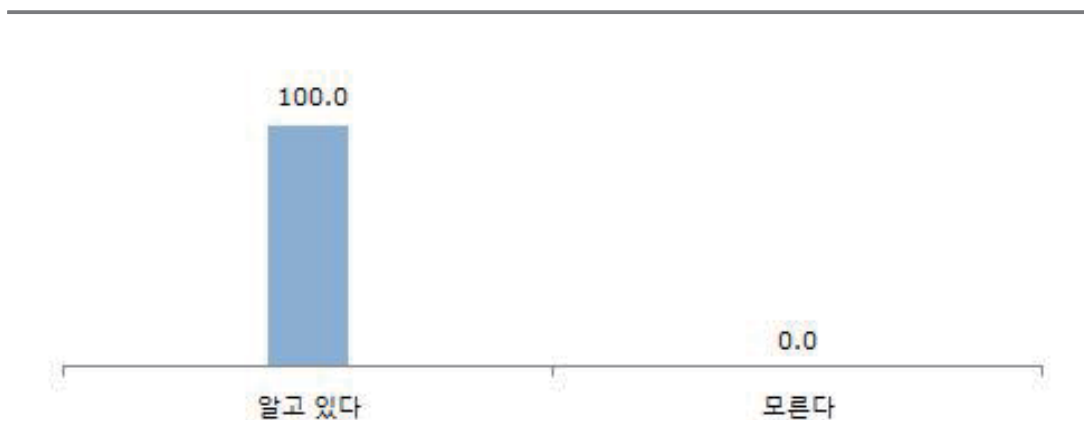
1.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 인지 여부

문1. 자치법규(조례) 입안의 기준이 되는 매뉴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 자치법규(조례) 입안의 기준이 되는 매뉴얼이 있는지 인지여부에 대하여 물었다. “모른다”고 응답하는 경우 조사를 중단하였다.

[그림1]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인지여부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 인지도는 100.0%로 응답자 전수가 모두 매뉴얼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모른다’고 응답하는 경우 조사를 중단하도록 설계되었고, 응답자 전수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입안 관련 전문가라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표 7 : 응답자 특성별 분석]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사례수(명)	알고 있다	모른다
▣ 전 체 ▣	(100)	100.0	0.0
성 별			
남성	(67)	100.0	0.0
여성	(33)	100.0	0.0
연 령			
30대	(24)	100.0	0.0
40대	(47)	100.0	0.0
50대 이상	(29)	100.0	0.0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100.0	0.0
교육	(6)	100.0	0.0
규제심사	(6)	100.0	0.0
입법지원	(53)	100.0	0.0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100.0	0.0
3-5년	(17)	100.0	0.0
5-10년	(10)	100.0	0.0
10년이상	(10)	100.0	0.0
현근무지역			
서울	(10)	100.0	0.0
경기/인천	(21)	100.0	0.0
대전/세종/충청	(13)	100.0	0.0
대구/경북	(14)	100.0	0.0
부산/울산/경남	(9)	100.0	0.0
광주/전라	(17)	100.0	0.0
강원/제주	(16)	100.0	0.0

* 사례수 30(명) 미만의 경우 해석시 유의해야 함(이하 동일)

- 전체 응답자 모두가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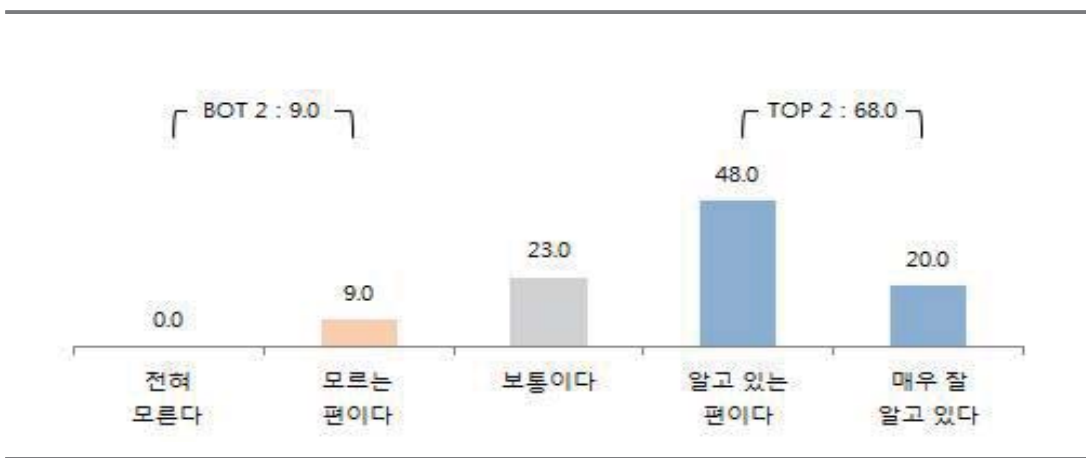
2.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내용 인지정도

문2.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 정도에 대하여 5점 척도로 물었다.

[그림2]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내용 인지정도

[Base: 자치법규 매뉴얼 인지자, 단위: %]



-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68.0%(매우 잘 알고 있다 : 20.0% + 알고 있는 편이다 : 48.0%)로 나타났다.
- 반면 ‘내용을 모른다’의 경우 9.0%(전혀 모른다 : 0.0% + 모르는 편이다 : 9.0%)의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 응답자의 업무 특성상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예측가능하다.

[표 8 : 응답자 특성별 분석]

[Base: 자치법규 매뉴얼 인지도, 단위: %]

	사례수 (명)	모르는 편이다	보통이다	알고 있는 편이다	매우 잘 알고 있다
▣ 전 체 ▣	(100)	9.0	23.0	48.0	20.0
성 별					
남성	(67)	6.0	22.4	50.7	20.9
여성	(33)	15.2	24.2	42.4	18.2
연 령					
30대	(24)	8.3	37.5	33.3	20.8
40대	(47)	10.6	17.0	59.6	12.8
50대 이상	(29)	6.9	20.7	41.4	31.0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5.7	14.3	48.6	31.4
교육	(6)	16.7	16.7	66.7	0.0
규제심사	(6)	33.3	0.0	50.0	16.7
입법지원	(53)	7.5	32.1	45.3	15.1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9.5	25.4	50.8	14.3
3-5년	(17)	5.9	23.5	41.2	29.4
5-10년	(10)	0.0	20.0	50.0	30.0
10년이상	(10)	20.0	10.0	40.0	30.0
현근무지역					
서울	(10)	0.0	30.0	60.0	10.0
경기/인천	(21)	0.0	9.5	47.6	42.9
대전/세종/충청	(13)	7.7	23.1	46.2	23.1
대구/경북	(14)	28.6	28.6	42.9	0.0
부산/울산/경남	(9)	11.1	0.0	66.7	22.2
광주/전라	(17)	5.9	47.1	41.2	5.9
강원/제주	(16)	12.5	18.8	43.8	25.0

- ‘내용을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50대 이상’ 연령대, ‘법제업무’ 담당, 종사기간 ‘5년 이상’, ‘경기/인천’ 근무자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 ‘알고 있는 편이다’ 응답의 경우 ‘40대 이상’ 연령대에서, ‘교육’, ‘서울’ 및 ‘부산/울산/경남’ 근무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모르는 편이다’는 응답은 ‘규제심사’ 담당, 종사기간 ‘10년 이상’, ‘대구/경북’ 근무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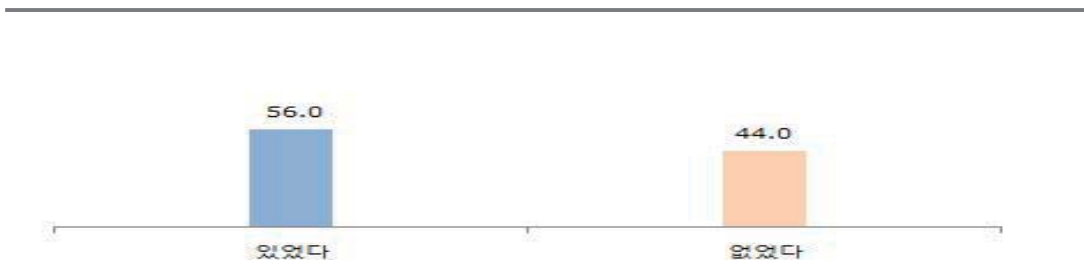
3.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사전안내 및 교육 여부

문3. 자치법규(조례) 입안 시 매뉴얼 이용·활용에 대한 사전 안내나 교육이 있었나요?

- 자치법규 입안 시 매뉴얼 이용 또는 활용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나 교육이 있었는지 여부를 물었다. 응답에 따라 다음 질문을 연결하도록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그림3]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사전안내 및 교육 여부

[Base: 자치법규 매뉴얼 인지자, 단위: %]



-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대한 사전 안내·교육이 있었다’는 응답은 56.0%, ‘없었다’는 응답은 44.0%로 나타났다.

[표 9 : 응답자 특성별 분석]

[Base: 자치법규 매뉴얼 인지도, 단위: %]

	사례수 (명)	있었다	없었다
▣ 전 체 ▣	(100)	56.0	44.0
성 별			
남성	(67)	59.7	40.3
여성	(33)	48.5	51.5
연 령			
30대	(24)	45.8	54.2
40대	(47)	53.2	46.8
50대 이상	(29)	69.0	31.0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77.1	22.9
교육	(6)	0.0	100.0
규제심사	(6)	66.7	33.3
입법지원	(53)	47.2	52.8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55.6	44.4
3-5년	(17)	64.7	35.3
5-10년	(10)	60.0	40.0
10년이상	(10)	40.0	60.0
현근무지역			
서울	(10)	40.0	60.0
경기/인천	(21)	71.4	28.6
대전/세종/충청	(13)	53.8	46.2
대구/경북	(14)	50.0	50.0
부산/울산/경남	(9)	66.7	33.3
광주/전라	(17)	47.1	52.9
강원/제주	(16)	56.3	43.8

- ‘사전 안내·교육이 있었다’는 응답은 ‘50대 이상’ 연령대, ‘법제업무’ 및 ‘규제심사’ 담당, ‘경기/인천’ 및 ‘부산/울산/경남’ 근무자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관련 사전 교육이나 안내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 반면, ‘없었다’의 경우 ‘30대’ 연령층, ‘교육’, 종사기간 ‘10년 이상’, ‘서울’ 근무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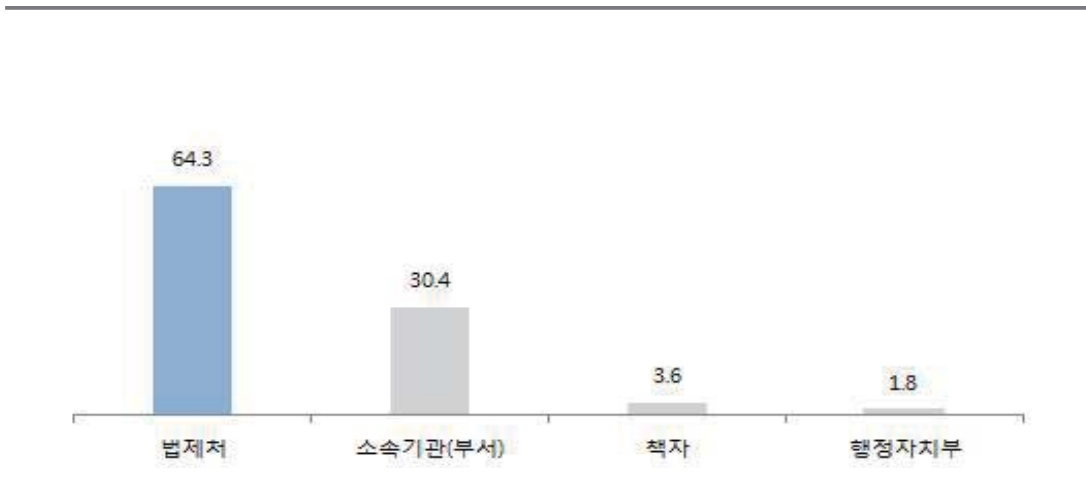
3-1. 자치법규 매뉴얼 교육 주체

문3-1. (문3에서 ①번 응답자만)있었다면 교육의 주체는 어디였나요?

- 만약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대한 사전 안내나 교육이 있었다면 그 교육의 주체는 어디였는지 물었다
- 이 질문을 통하여 실제 교육의 정도와 향후 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림4] 자치법규 매뉴얼 교육 주체

[Base: 자치법규 매뉴얼 사전교육 경험자, 단위: %]



제 3 장 전문가 의견조사

- 자치법규 매뉴얼 사전교육 경험자들(56명)을 대상으로 ‘교육 주체’ 조사 결과, ‘법제처(64.3%)’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어서 ‘소속기관(부서)’가 30.4%로 나타났으며, ‘책자(3.6%)’ 및 ‘행정 자치부(1.8%)’의 경우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 자치법규 매뉴얼은 법제처와 행정자치부에서 공히 제공하고 있지만 그 교육에 대해서는 법제처가 보다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인 접근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0 : 응답자 특성별 분석]

[Base: 자치법규 매뉴얼 사전교육 경험자, 단위: %]

	사례수 (명)	소속기관 (부서)	법제처	행정 자치부	책 자
▣ 전 체 ▣	(56)	30.4	64.3	1.8	3.6
성 별					
남성	(40)	30.0	62.5	2.5	5.0
여성	(16)	31.3	68.8	0.0	0.0
연 령					
30대	(11)	36.4	63.6	0.0	0.0
40대	(25)	32.0	60.0	4.0	4.0
50대 이상	(20)	25.0	70.0	0.0	5.0
담당업무					
법제업무	(27)	22.2	74.1	0.0	3.7
교육	(0)	0.0	0.0	0.0	0.0
규제심사	(4)	0.0	75.0	25.0	0.0
입법지원	(25)	44.0	52.0	0.0	4.0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35)	25.7	68.6	2.9	2.9
3-5년	(11)	54.5	45.5	0.0	0.0
5-10년	(6)	16.7	66.7	0.0	16.7
10년이상	(4)	25.0	75.0	0.0	0.0

	사례수 (명)	소속기관 (부서)	법제처	행정 자치부	책 자
현근무지역					
서울	(4)	50.0	50.0	0.0	0.0
경기/인천	(15)	46.7	53.3	0.0	0.0
대전/세종/충청	(7)	14.3	85.7	0.0	0.0
대구/경북	(7)	14.3	57.1	14.3	14.3
부산/울산/경남	(6)	33.3	50.0	0.0	16.7
광주/전라	(8)	25.0	75.0	0.0	0.0
강원/제주	(9)	22.2	77.8	0.0	0.0

- ‘법제처’의 경우 ‘규제심사’ 담당, 종사기간 ‘10년 이상’, ‘대전/세종/충청’ 근무자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 ‘소속기관(부서)’는 ‘입법지원’ 담당, 종사기간 ‘3-5년’, ‘서울’ 및 ‘경기/인천’ 근무자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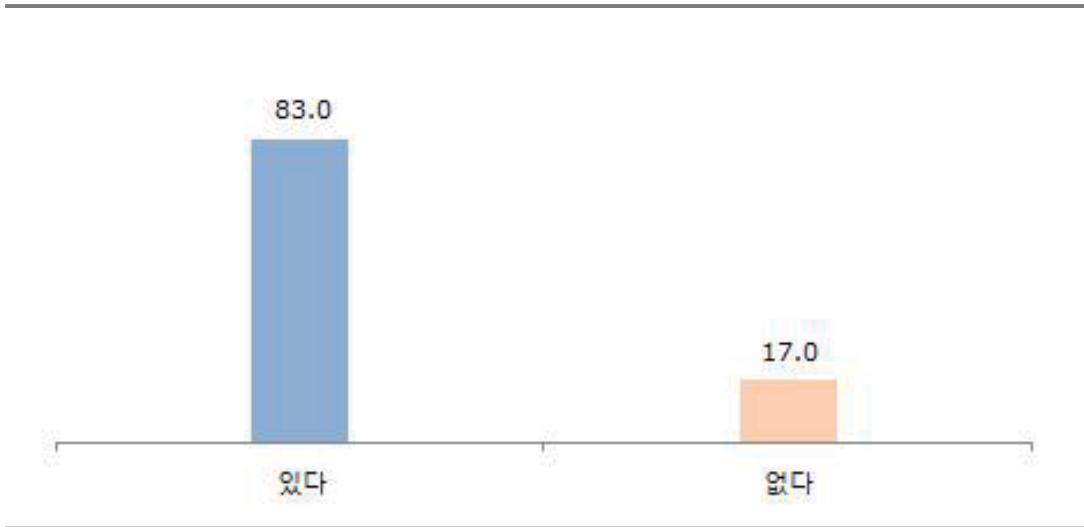
4. 자치법규 매뉴얼 활용경험 여부

문4.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을 활용해 보신 경험이 있었나요?

-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활용 경험에 대하여 물었다.
- 활용 경험 유무에 따라 추가적인 질문을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림5] 자치법규 매뉴얼 활용경험 여부

[Base: 자치법규 매뉴얼 인지자, 단위: %]



○ ‘자치법규 매뉴얼을 활용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83.0%로 나타난 반면, ‘활용해본 경험이 없다’의 경우 17.0%로 낮게 조사되었다.

[표 11 : 응답자 특성별 분석]

[Base: 자치법규 매뉴얼 인지자, 단위: %]

	사례수 (명)	있 다	없 다
▣ 전 체 ▣	(100)	83.0	17.0
성 별			
남성	(67)	82.1	17.9
여성	(33)	84.8	15.2
연 령			
30대	(24)	83.3	16.7
40대	(47)	85.1	14.9
50대 이상	(29)	79.3	20.7

	사례수 (명)	있 다	없 다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85.7	14.3
교육	(6)	66.7	33.3
규제심사	(6)	66.7	33.3
입법지원	(53)	84.9	15.1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82.5	17.5
3-5년	(17)	94.1	5.9
5-10년	(10)	90.0	10.0
10년이상	(10)	60.0	40.0
현근무지역			
서울	(10)	90.0	10.0
경기/인천	(21)	95.2	4.8
대전/세종/충청	(13)	76.9	23.1
대구/경북	(14)	64.3	35.7
부산/울산/경남	(9)	88.9	11.1
광주/전라	(17)	88.2	11.8
강원/제주	(16)	75.0	25.0

- ▣ ‘활용해본 경험이 있다’의 경우 종사기간 ‘3-5년’, ‘경기/인천’ 근무자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 ▣ 반면,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교육’ 및 ‘규제심사’ 담당, 종사기간 ‘10년 이상’, ‘대구/경북’ 근무자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 이러한 분석결과는 자치법규 관련 업무 종사기간이 짧을수록 자치법규 매뉴얼 활용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5. 활용 자료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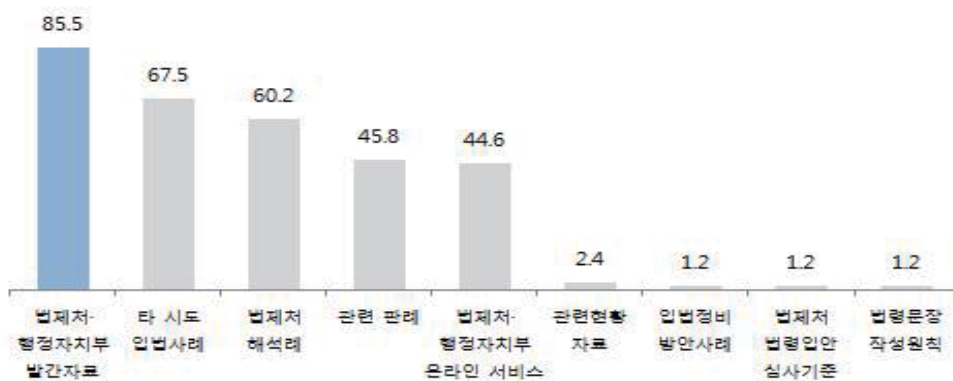
문5. 자치법규(조례) 입안 지원 시 어떤 자료를 이용하시는지요?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자치법규 입법실무 등 법제처, 행정자치부의 발간자료
- ② 법제처, 행정자치부의 온라인 제공 서비스
- ③ 법제처 해석례
- ④ 관련 판례
- ⑤ 타 시·도의 입법사례
- ⑥ 기타 (적어주세요:)

-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활용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 대하여 어떤 자료를 이용하였는지 선택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구성하여 응답을 받았다.
- 이와 같은 질문지를 통해서 실제 활용되는 자료의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그림6] 활용 자료 유형

[Base: 자치법규매뉴얼 활용경험자, 단위: %]



- 매뉴얼 활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83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자치법규 입안시 이용하는 자료의 유형’으로는 ‘법제처·행정자치부 발간 자료(85.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이어서 ‘타 시도 입법사례(67.5%)’, ‘법제처 해석례(60.2%)’, ‘관련 판례(45.8%)’, ‘법제처·행정자치부 온라인 서비스(44.6%)’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관련 현황 자료(2.4%)’ 및 ‘입법정비방안 사례’, ‘법령문장 작성 원칙(각각 1.2%)’은 낮게 나타났다.

[표 12 : 응답자 특성별 분석]

[Base: 자치법규매뉴얼 활용경험자, 단위: %]

	사례수 (명)	법제처· 행정 자치부 발간 자료	법제처· 행정 자치부 온라인 서비스	법제처 해석례	관련 판례	타시도 입법 사례
▣ 전 체 ▣	(83)	85.5	44.6	60.2	45.8	67.5
성 별						
남성	(55)	80.0	56.4	65.5	52.7	69.1
여성	(28)	96.4	21.4	50.0	32.1	64.3
연 령						
30대	(20)	80.0	40.0	70.0	55.0	75.0
40대	(40)	90.0	47.5	57.5	42.5	70.0
50대 이상	(23)	82.6	43.5	56.5	43.5	56.5
담당업무						
법제업무	(30)	96.7	50.0	66.7	43.3	56.7
교육	(4)	100.0	50.0	0.0	50.0	25.0
규제심사	(4)	75.0	75.0	50.0	75.0	75.0
입법지원	(45)	77.8	37.8	62.2	44.4	77.8

제 3 장 전문가 의견조사

	사례수 (명)	법제처· 행정 자치부 발간 자료	법제처· 행정 자치부 온라인 서비스	법제처 해석례	관련 판례	타 시도 입법 사례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52)	88.5	38.5	57.7	40.4	61.5
3-5년	(16)	75.0	56.3	68.8	56.3	87.5
5-10년	(9)	88.9	55.6	66.7	55.6	66.7
10년이상	(6)	83.3	50.0	50.0	50.0	66.7
현근무지역						
서울	(9)	100.0	55.6	55.6	66.7	66.7
경기/인천	(20)	85.0	50.0	80.0	65.0	70.0
대전/세종/충청	(10)	80.0	30.0	50.0	40.0	60.0
대구/경북	(9)	88.9	33.3	55.6	22.2	77.8
부산/울산/경남	(8)	87.5	37.5	62.5	25.0	37.5
광주/전라	(15)	80.0	40.0	46.7	33.3	73.3
강원/제주	(12)	83.3	58.3	58.3	50.0	75.0

* 상위 항목만 제시

- ▣ ‘법제처·행정자치부 발간자료’의 경우 ‘여성’ 응답자, ‘법제업무’ 담당, ‘서울’ 근무자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 ▣ 반면 ‘타 시도 입법사례’는 ‘입법지원’ 담당, ‘대구/경북’ 근무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법제처 해석례’의 경우에는 ‘30대’ 연령층, ‘경기/인천’ 근무자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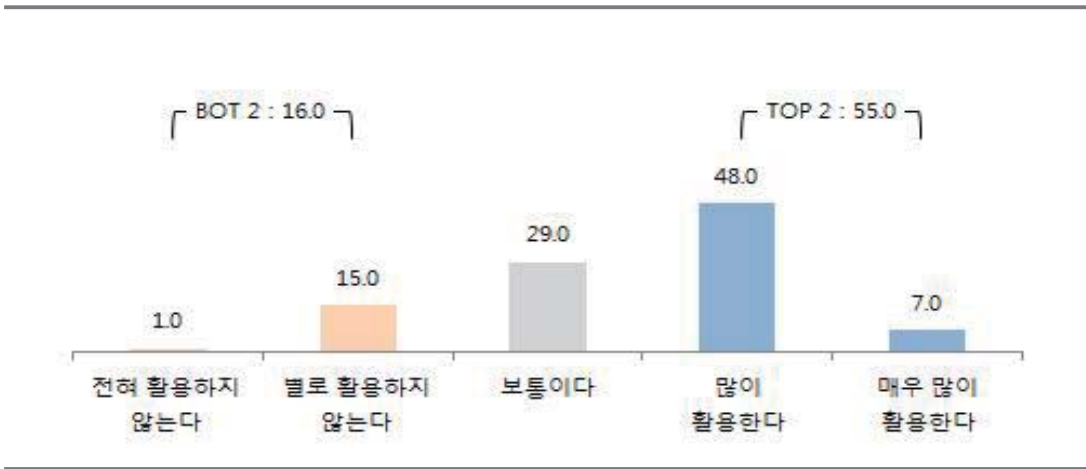
6. 자치법규 입안실무, 매뉴얼 활용 정도

문6. 현재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서 자치법규(조례) 입안에 도움이 되는 기준을 자치법규(조례) 입안 실무, 주제별·조문별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 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들을 얼마나 활용하시는지요?

- 자치법규 입안실무 및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활용정도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에게 물었다.

[그림7] 자치법규 입안실무, 매뉴얼 활용 정도

[Base: 자치법규 매뉴얼 인지자, 단위: %]



- ‘『자치법규 입안 실무』, 『주제별·조문별 자치법규 매뉴얼』 등의 책자를 많이 활용한다’는 응답은 55.0%(매우 많이 활용한다 : 7.0% + 많이 활용한다 : 48.0%)으로 나타났다.
- 반면 ‘활용하지 않는다’의 경우 16.0%(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 1.0% + 별로 활용하지 않는다 : 15.0%)로서 6명 중 1명은 관련 책자를 활용하지 않는 편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 특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 경력이 많을수록 『자치법규 입안 실무』, 『주제별·조문별 자치법규 매뉴얼』 등의 책자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분석결과를 볼 수 있다.

[표 13 : 응답자 특성별 분석]

[Base: 자치법규 매뉴얼 인지도,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별로 활용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많이 활용한다	매우 많이 활용한다
▣ 전 체 ▣	(100)	1.0	15.0	29.0	48.0	7.0
성 별						
남성	(67)	0.0	11.9	34.3	44.8	9.0
여성	(33)	3.0	21.2	18.2	54.5	3.0
연 령						
30대	(24)	4.2	16.7	41.7	37.5	0.0
40대	(47)	0.0	14.9	29.8	46.8	8.5
50대 이상	(29)	0.0	13.8	17.2	58.6	10.3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2.9	2.9	20.0	60.0	14.3
교육	(6)	0.0	16.7	50.0	33.3	0.0
규제심사	(6)	0.0	33.3	33.3	33.3	0.0
입법지원	(53)	0.0	20.8	32.1	43.4	3.8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1.6	14.3	22.2	57.1	4.8
3-5년	(17)	0.0	11.8	35.3	41.2	11.8
5-10년	(10)	0.0	0.0	70.0	10.0	20.0
10년이상	(10)	0.0	40.0	20.0	40.0	0.0
현근무지역						
서울	(10)	0.0	40.0	50.0	10.0	0.0
경기/인천	(21)	0.0	0.0	38.1	57.1	4.8
대전/세종/충청	(13)	0.0	7.7	30.8	53.8	7.7
대구/경북	(14)	7.1	21.4	21.4	50.0	0.0
부산/울산/경남	(9)	0.0	22.2	0.0	66.7	11.1
광주/전라	(17)	0.0	11.8	23.5	58.8	5.9
강원/제주	(16)	0.0	18.8	31.3	31.3	18.8

- ▣ ‘매우 많이 활용한다’는 응답은 종사기간 ‘5-10년 이상’, ‘강원/제주’ 근무자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 ‘많이 활용한다’의 경우 ‘50대 이상’ 연령대, ‘법제업무’ 담당, ‘부산/울산/경남’ 근무자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반면 ‘별로 활용하지 않는다’의 경우 ‘규제심사’ 담당, 종사기간 ‘10년 이상’, ‘서울’ 근무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6-1. 많이 활용하는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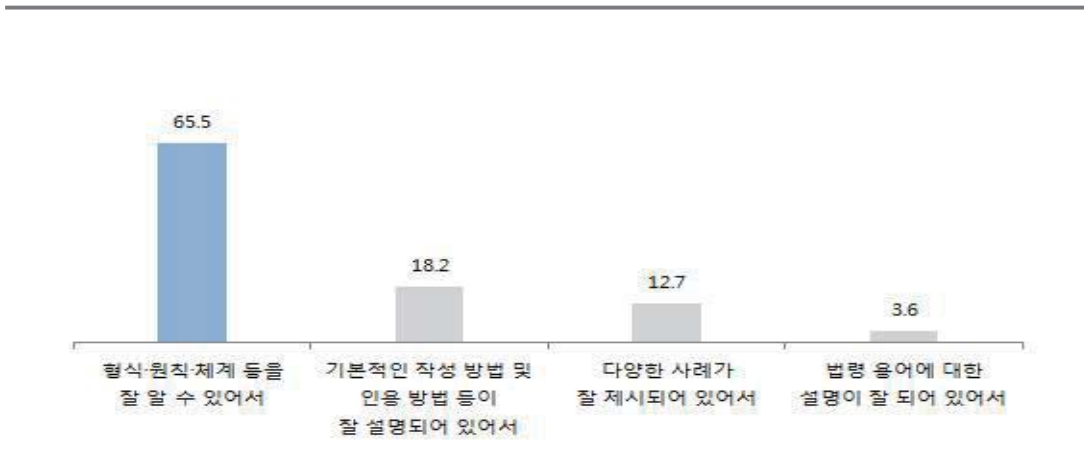
문6-1. (문6의 ④,⑤번 응답자만) 많이 활용하시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자치법규(조례) 입안 혹은 제·개정 시 형식이나 원칙, 체계 등을 잘 알 수 있어서
- ② 법령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 ③ 다양한 사례가 잘 제시되어 있어서
- ④ 기본적인 작성 방법 및 인용 방법 등이 잘 설명되어 있어서
- ⑤ 기타 (적어주세요:)

○ 문제 6에서 책자를 많이 활용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질문지를 구성하여 활용의 이유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림8] 많이 활용하는 주된 이유

[Base: 자치법규매뉴얼 적극활용자, 단위: %]



제3 장 전문가 의견조사

- 『자치법규 입안 실무』 및 『자치법규 입안 심사 매뉴얼』 등의 책자를 많이 활용한다고 응답한 55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자치법규 입안 실무』 및 『자치법규 입안 심사 매뉴얼』 등의 책자를 많이 활용한다'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활용하는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형식·원칙·체계 등을 잘 알 수 있어서(65.5%)'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어서 '기본적 작성·인용 방법이 잘 설명되어 있어서(18.2%)', '다양한 사례가 잘 제시되어 있어서(1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반면 '법령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의 경우 3.6%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표 14 : 응답자 특성별 분석]

[Base: 자치법규매뉴얼 적극활용자, 단위: %]

	사례수 (명)	형식·원칙·체계 등	법령용어에 대한 설명	다양한 사례	기본적인 작성방법 및 인용방법
▣ 전 체 ▣	(55)	65.5	3.6	12.7	18.2
성 별					
남성	(36)	63.9	2.8	11.1	22.2
여성	(19)	68.4	5.3	15.8	10.5
연 령					
30대	(9)	33.3	0.0	11.1	55.6
40대	(26)	69.2	0.0	19.2	11.5
50대 이상	(20)	75.0	10.0	5.0	10.0
담당업무					
법제업무	(26)	69.2	3.8	15.4	11.5
교육	(2)	0.0	0.0	50.0	50.0
규제심사	(2)	100.0	0.0	0.0	0.0
입법지원	(25)	64.0	4.0	8.0	24.0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39)	61.5	5.1	15.4	17.9
3-5년	(9)	55.6	0.0	11.1	33.3
5-10년	(3)	100.0	0.0	0.0	0.0
10년이상	(4)	100.0	0.0	0.0	0.0

	사례수 (명)	형식·원칙·체계 등	법령용어에 대한 설명	다양한 사례	기본적인 작성방법 및 인용방법
현근무지역					
서울	(1)	100.0	0.0	0.0	0.0
경기/인천	(13)	46.2	0.0	15.4	38.5
대전/세종/충청	(8)	87.5	12.5	0.0	0.0
대구/경북	(7)	57.1	0.0	42.9	0.0
부산/울산/경남	(7)	85.7	0.0	14.3	0.0
광주/전라	(11)	72.7	0.0	9.1	18.2
강원/제주	(8)	50.0	12.5	0.0	37.5

- ‘형식·원칙·체계 등을 잘 알 수 있어서’는 ‘규제심사’ 담당, 종사기간 ‘5년 이상’, ‘대전/세종/충청’ 및 ‘부산/울산/경남’ 근무자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 ‘기본적인 작성·인용 방법이 잘 설명되어 있어서’ 항목의 경우 ‘30대’ 연령층, ‘교육’, 종사기간 ‘3-5년’, ‘경기/인천’ 및 ‘강원/제주’ 근무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2. 별로 활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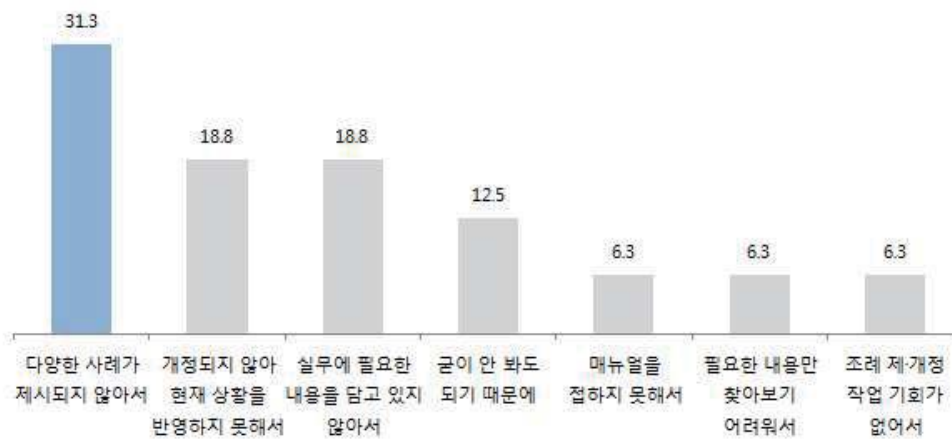
문6-2. (문6의 ①,②번 응답자만) 별로 활용하지 않으시는 주된 이유는 무엇 인가요?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개정이 되지 않아 현재의 변경된 상황을 잘 반영하지 않고 있어서
- ② 형식이나 용어 등의 설명이 부족해서
- ③ 다양한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 ④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서
- ⑤ 기타 (적어주세요:)

- 문제 6에서 책자를 많이 활용하지 아니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선택하도록 질문지를 구성하여 향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림9] 별로 활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Base: 자치법규매뉴얼 비활용자, 단위: %]



- ‘『자치법규 입안 실무』 및 『주제별 매뉴얼』 등의 책자를 별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16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다양한 사례가 제시되지 않아서(31.3%)’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어서 ‘개정되지 않아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서’ 및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서(각각 18.8%)’, ‘굳이 안 봐도 되기 때문에(12.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한편 ‘매뉴얼을 접하지 못해서’,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서’, ‘조례 제·개정 작업 기회가 없어서(각각 6.3%)’의 경우 6%대로 낮게 나타났다.

[표 15 : 응답자 특성별 분석]

[Base: 자치법규매뉴얼 비활용자, 단위: %]

	사례수 (명)	현 상황을 반영 하지 못해서	다양한 사례가 제시 되지 않아서	실무에 필요한 내용이 없어서	굳이 안봐도 되기에	매뉴얼을 접하지 못해서	필요한 내용만 찾아 보기 어려워서	조례제 · 개정 작업 기회가 없어서
▣ 전체 ▣	(16)	18.8	31.3	18.8	12.5	6.3	6.3	6.3
성 별								
남성	(8)	25.0	25.0	12.5	12.5	0.0	12.5	12.5
여성	(8)	12.5	37.5	25.0	12.5	12.5	0.0	0.0
연 령								
30대	(5)	20.0	0.0	40.0	0.0	20.0	20.0	0.0
40대	(7)	28.6	57.1	14.3	0.0	0.0	0.0	0.0
50대 이상	(4)	0.0	25.0	0.0	50.0	0.0	0.0	25.0
담당업무								
법제업무	(2)	0.0	0.0	0.0	50.0	50.0	0.0	0.0
교육	(1)	0.0	100.0	0.0	0.0	0.0	0.0	0.0
규제심사	(2)	50.0	0.0	50.0	0.0	0.0	0.0	0.0
입법지원	(11)	18.2	36.4	18.2	9.1	0.0	9.1	9.1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10)	10.0	30.0	20.0	10.0	10.0	10.0	10.0
3-5년	(2)	100.0	0.0	0.0	0.0	0.0	0.0	0.0
5-10년	(0)	0.0	0.0	0.0	0.0	0.0	0.0	0.0
10년이상	(4)	0.0	50.0	25.0	25.0	0.0	0.0	0.0
현근무지역								
서울	(4)	50.0	25.0	0.0	25.0	0.0	0.0	0.0
경기/인천	(0)	0.0	0.0	0.0	0.0	0.0	0.0	0.0
대전/세종/ 충청	(1)	0.0	100.0	0.0	0.0	0.0	0.0	0.0
대구/경북	(4)	0.0	50.0	0.0	0.0	25.0	25.0	0.0
부산/울산/ 경남	(2)	50.0	0.0	0.0	50.0	0.0	0.0	0.0
광주/전라	(2)	0.0	50.0	50.0	0.0	0.0	0.0	0.0
강원/제주	(3)	0.0	0.0	66.7	0.0	0.0	0.0	33.3

- ‘다양한 사례가 제시되지 않아서’ 항목의 경우 ‘40대’ 연령층, 종사기간 ‘10년 이상’에서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서’는 ‘규제심사’ 담당, 종사기간 ‘3-5년’, ‘서울’ 및 ‘부산/울산/경남’ 근무자에서 높게 나타난 한편, ‘실무에 필요한 내용이 없어서’의 경우 ‘30대’ 연령층, ‘광주/전라’ 및 ‘강원/제주’ 근무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7.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중 활용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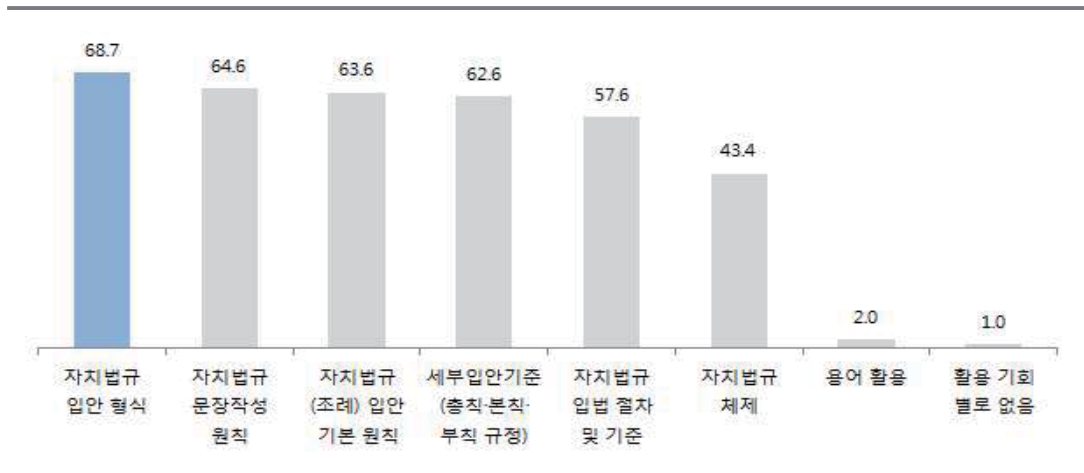
문7. (문6의 ②, ③, ④, ⑤ 응답자만) 다음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의 내용 중 활용하신 부분을 모두 말씀해 주세요.

- ① 자치법규(조례) 입안의 기본 원칙
- ② 세부 입안 기준(총칙, 본칙, 부칙 규정)
- ③ 자치법규의 체제
- ④ 자치법규의 입법 절차 및 기준
- ⑤ 자치법규의 입안 형식
- ⑥ 자치법규 문장 작성 원칙
- ⑦ 기타 (적어주세요:)

-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중에서 활용한 부분에 대하여 세부적인 질문지를 구성하여 물어봄으로써 어떤 부분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림10]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중 활용 부분

[Base: 자치법규매뉴얼 이용자, 단위: %]



- ‘자치법규 매뉴얼 활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99명을 대상으로 매뉴얼 내용 중 활용한 부분을 조사한 결과 ‘자치법규 입안 형식(68.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어서 ‘자치법규 문장작성 원칙(64.6%)’,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63.6%)’, ‘세부입안기준(62.6%)’, ‘자치법규 입법절차 및 기준(57.6%)’, ‘자치법규 체제(43.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한편 ‘용어 활용(2.0%)’, ‘활용 기회 별로 없음(1.0%)’의 등의 기타 응답이 조사되었다.
- 자치법규 입안시 형식적인 부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입안 형식”에 관하여 참고하였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3 장 전문가 의견조사

[표 16 : 응답자 특성별 분석]

[Base: 자치법규매뉴얼 이용자, 단위: %]

	사례수 (명)	자치 법규 입안 기본 원칙	세부 입안 기준	자치 법규 체제	자치 법규 입법 절차 기준	자치 법규 입안 형식	자치 법규 문장 작성 원칙	용어 활용	활용 기회 별로 없음
▣ 전체 ▣	(99)	63.6	62.6	43.4	57.6	68.7	64.6	2.0	1.0
성 별									
남성	(67)	65.7	65.7	47.8	58.2	68.7	64.2	3.0	1.5
여성	(32)	59.4	56.3	34.4	56.3	68.8	65.6	0.0	0.0
연 령									
30대	(23)	47.8	56.5	39.1	34.8	56.5	78.3	0.0	0.0
40대	(47)	68.1	63.8	36.2	57.4	66.0	53.2	2.1	0.0
50대 이상	(29)	69.0	65.5	58.6	75.9	82.8	72.4	3.4	3.4
담당업무									
법제업무	(34)	76.5	70.6	55.9	73.5	73.5	70.6	2.9	0.0
교육	(6)	50.0	50.0	33.3	16.7	50.0	33.3	0.0	0.0
규제심사	(6)	33.3	50.0	16.7	83.3	50.0	50.0	0.0	0.0
입법지원	(53)	60.4	60.4	39.6	49.1	69.8	66.0	1.9	1.9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2)	67.7	59.7	40.3	64.5	71.0	64.5	1.6	1.6
3-5년	(17)	47.1	58.8	41.2	35.3	76.5	82.4	5.9	0.0
5-10년	(10)	70.0	80.0	70.0	40.0	60.0	70.0	0.0	0.0
10년이상	(10)	60.0	70.0	40.0	70.0	50.0	30.0	0.0	0.0
현근무지역									
서울	(10)	90.0	70.0	30.0	30.0	50.0	60.0	0.0	0.0
경기/인천	(21)	66.7	61.9	47.6	57.1	81.0	61.9	0.0	0.0
대전/세종/ 충청	(13)	69.2	76.9	38.5	61.5	53.8	69.2	15.4	0.0
대구/경북	(13)	69.2	61.5	38.5	76.9	61.5	61.5	0.0	0.0
부산/울산/ 경남	(9)	55.6	66.7	77.8	77.8	77.8	77.8	0.0	0.0
광주/전라	(17)	58.8	52.9	41.2	64.7	76.5	58.8	0.0	0.0
강원/제주	(16)	43.8	56.3	37.5	37.5	68.8	68.8	0.0	6.3

- ‘자치법규 입안형식’ 항목은 ‘50대 이상’ 연령층, ‘경기/인천’ 근무자에서 특히 높게 나타난 한편, ‘자치법규 문장작성원칙’ 항목의 경우 ‘30대’ 연령층, 종사기간 ‘3-5년’에서 높게 나타났다.
- ‘자치법규입안 기본원칙’의 경우 ‘법제업무’ 담당, ‘서울’ 근무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입안기준’은 종사기간 ‘5-10년’, ‘대전/세종/충청’ 근무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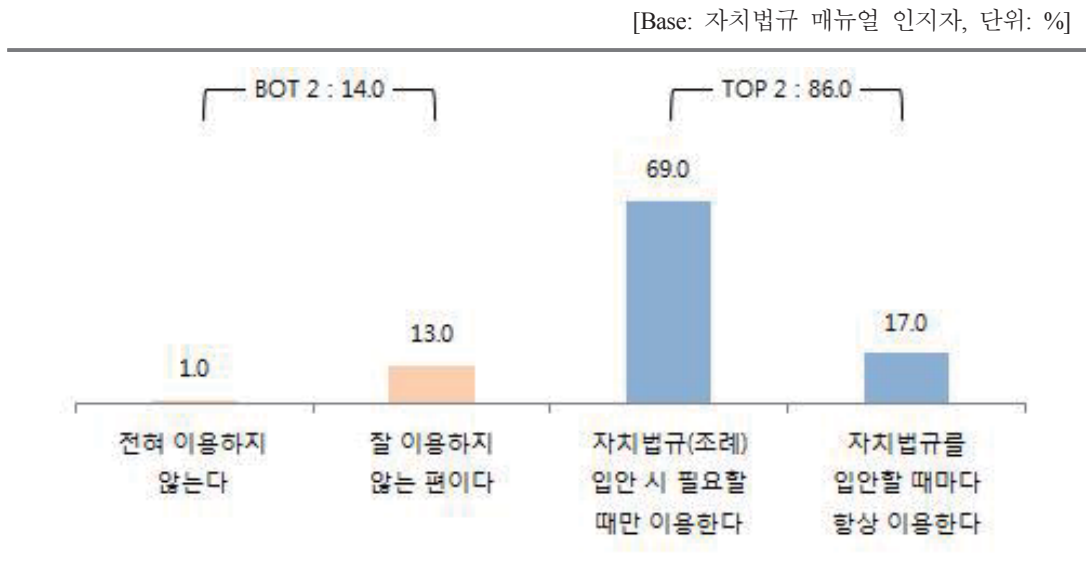
8.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이용정도

문8.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을 어느 정도나 자주 이용하시나요?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잘 이용하지 않는 편이다	자치법규(조례) 입안 시 필요할 때만 이용한다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마다 항상 이용한다
①	②	③	④

-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이용정도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질문지를 구성하여 물었다. 응답은 추가적인 질문과 연계하여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11]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이용정도



-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이용정도’를 조사한 결과 ‘입안시 이용한다’는 응답은 86.0%(자치법규를 입안할 때마다 항상 이용 : 17.0% + 자치법규 입안 시 필요할 때만 이용 : 69.0%)로 나타났다.
- 반면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4.0%(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 1.0% + 잘 이용하지 않는 편이다 : 13.0%)로 10%대로 비교적 낮게 조사되었다.
- 이와 같은 응답은 자치법규 입안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활용도가 비교적 높다는 점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다.

[표 17 : 응답자 특성별 분석]

[Base: 자치법규 매뉴얼 인지도,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잘 이용하지 않는 편이다	자치법규 입안 시 필요할 때만 이용한다	자치법규 입안시 항상 이용한다
▣ 전 체 ▣	(100)	1.0	13.0	69.0	17.0
성 별					
남성	(67)	0.0	13.4	70.1	16.4
여성	(33)	3.0	12.1	66.7	18.2
연 령					
30대	(24)	4.2	16.7	75.0	4.2
40대	(47)	0.0	12.8	68.1	19.1
50대 이상	(29)	0.0	10.3	65.5	24.1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2.9	5.7	65.7	25.7
교육	(6)	0.0	33.3	50.0	16.7
규제심사	(6)	0.0	33.3	33.3	33.3
입법지원	(53)	0.0	13.2	77.4	9.4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1.6	9.5	66.7	22.2
3-5년	(17)	0.0	11.8	76.5	11.8
5-10년	(10)	0.0	10.0	80.0	10.0
10년이상	(10)	0.0	40.0	60.0	0.0
현근무지역					
서울	(10)	0.0	30.0	60.0	10.0
경기/인천	(21)	0.0	4.8	85.7	9.5
대전/세종/충청	(13)	0.0	7.7	69.2	23.1
대구/경북	(14)	7.1	21.4	57.1	14.3
부산/울산/경남	(9)	0.0	11.1	55.6	33.3
광주/전라	(17)	0.0	0.0	82.4	17.6
강원/제주	(16)	0.0	25.0	56.3	18.8

- ‘자치법규 입안 시 항상 이용한다’의 경우 ‘부산/울산/경남’ 근무자에서 특히 높았으며, ‘입안 시 필요할 때만 이용한다’는 종사기간 ‘5-10년’, ‘경기/인천’ 및 ‘광주/전라’ 근무자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반면 ‘잘 이용하지 않는 편이다’의 경우 종사기간 ‘10년 이상’, ‘서울’ 및 ‘강원/제주’ 근무자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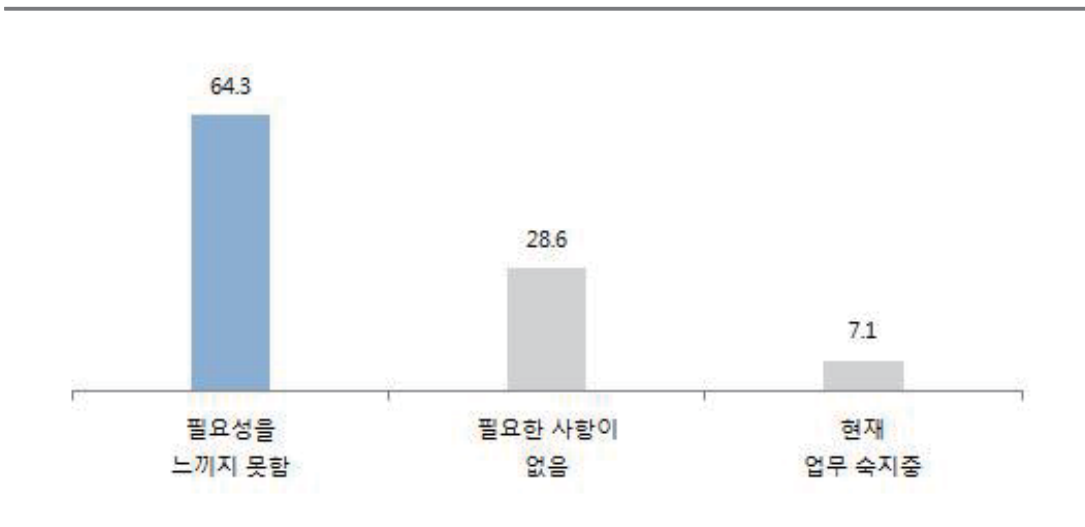
8-1.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문8-1. (문8에서 ①, ② 응답자만)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입력해주세요:)

○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open형 질문지로 구성하여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적도록 하였다.

[그림12]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이유

[Base: 자치법규 매뉴얼 비이용자, 단위: %]



-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비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64.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어서 ‘필요한 사항이 없음(28.6%)’, ‘현재 업무 속지 중(7.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18 : 응답자 특성별 분석]

[Base: 자치법규 매뉴얼 비이용자, 단위: %]

	사례수 (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필요한 사항이 없음	현재 업무 속지중
▣ 전 체 ▣	(14)	64.3	28.6	7.1
성 별				
남성	(9)	66.7	33.3	0.0
여성	(5)	60.0	20.0	20.0
연 령				
30대	(5)	40.0	60.0	0.0
40대	(6)	83.3	16.7	0.0
50대 이상	(3)	66.7	0.0	33.3
담당업무				
법제업무	(3)	66.7	0.0	33.3
교육	(2)	100.0	0.0	0.0
규제심사	(2)	50.0	50.0	0.0
입법지원	(7)	57.1	42.9	0.0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7)	42.9	42.9	14.3
3-5년	(2)	50.0	50.0	0.0
5-10년	(1)	100.0	0.0	0.0
10년이상	(4)	100.0	0.0	0.0
현근무지역				
서울	(3)	66.7	33.3	0.0
경기/인천	(1)	100.0	0.0	0.0
대전/세종/충청	(1)	100.0	0.0	0.0
대구/경북	(4)	75.0	25.0	0.0
부산/울산/경남	(1)	0.0	100.0	0.0
광주/전라	(0)	0.0	0.0	0.0
강원/제주	(4)	50.0	25.0	25.0

-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항목의 경우 ‘40대’ 연령층, ‘교육’업무 담당자, 종사기간 ‘5년 이상’, ‘대구/경북’ 근무자에서 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 중에서 담당업무가 조례 입안 교육 분야인 경우와 업무 종사기간이 5년 이상인 응답자가 많은 것은 업무 숙지 정도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9. 실용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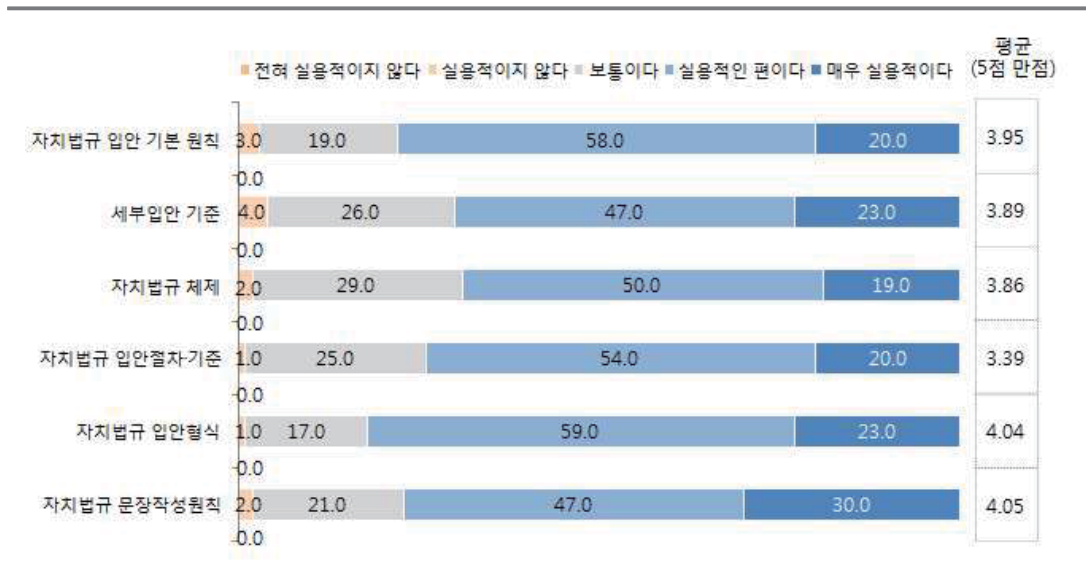
문9. 다음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의 내용이 얼마나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각 항목별로 실용적인 정도에 대해 평가해주시고, 실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신 항목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자세히 기입해 주세요.

항 목	전혀 실용적 이지 않다	실용적 이지 않다	보통 이다	실용적인 편이다	매우 실용적 이다
1) 자치법규(조례) 입안의 기본 원칙	①	②	③	④	⑤
(1) (1)에서 ①, ② 응답자만 실용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신 사유를 자세하게 기입해주세요 :					
2) 세부 입안 기준(총칙, 본칙, 부칙 규정)	①	②	③	④	⑤
(2) (2)에서 ①, ② 응답자만 실용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신 사유를 자세하게 기입해주세요 :					
3) 자치법규의 체제	①	②	③	④	⑤
(3) (3)에서 ①, ② 응답자만 실용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신 사유를 자세하게 기입해주세요 :					
4) 자치법규의 입안 절차 및 기준	①	②	③	④	⑤
(4) (4)에서 ①, ② 응답자만 실용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신 사유를 자세하게 기입해주세요 :					
5) 자치법규의 입안 형식	①	②	③	④	⑤
(5) (5)에서 ①, ② 응답자만 실용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신 사유를 자세하게 기입해주세요 :					
6) 자치법규의 문장 작성 원칙	①	②	③	④	⑤
(6) (6)에서 ①, ② 응답자만 실용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신 사유를 자세하게 기입해주세요 :					

- 문제 9에서는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실용성 정도에 대하여 책자 구성에 따라 각각의 항목을 나누어 5점 척도로 물었다.
- 전문가들이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어떤 부분이 활용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지이다.

[그림13] 실용성 평가

[Base: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인지자, 단위: %]



-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각 내용(항목)들에 대한 실용성’을 평가한 결과, ‘자치법규 문장작성 원칙(4.05점)’이 가장 높은 평균 점수(5점 만점)를 나타냈으며, ‘매우 실용적이다(30.0%)’는 응답역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어서 ‘자치법규 입안형식(4.04점)’,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3.9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자치법규 입안절차·기준(3.39점)’ 항목의 경우 6개 항목들 중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표 19 : 응답자 특성별 분석]

[Base: 자치법규 매뉴얼 인지도, 단위: 점(5점 만점)]

	사례수(명)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세부 입안 기준	자치법규 체제	자치법규 입안절차 및 기준	자치법규 입안형식	자치법규 문장작성 원칙
▣ 전 체 ▣	(100)	3.95	3.89	3.86	3.93	4.04	4.05
성 별							
남성	(67)	3.99	3.90	3.88	3.94	4.06	4.04
여성	(33)	3.88	3.88	3.82	3.91	4.00	4.06
연 령							
30대	(24)	3.92	3.71	3.71	3.88	3.92	3.88
40대	(47)	3.83	3.81	3.81	3.85	4.09	4.11
50대 이상	(29)	4.17	4.17	4.07	4.10	4.07	4.10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4.23	4.20	4.03	4.06	4.31	4.31
교육	(6)	3.67	3.50	3.67	4.00	4.17	4.17
규제심사	(6)	4.17	4.17	4.17	4.50	4.17	4.33
입법지원	(53)	3.77	3.70	3.74	3.77	3.83	3.83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4.06	3.98	3.94	4.06	4.11	4.13
3-5년	(17)	3.88	3.94	3.88	3.82	4.00	3.88
5-10년	(10)	3.70	3.80	3.70	3.50	3.90	4.10
10년이상	(10)	3.60	3.30	3.50	3.70	3.80	3.80
현근무지역							
서울	(10)	3.90	3.40	3.50	3.60	3.70	3.40
경기/인천	(21)	3.86	3.95	3.71	3.86	4.14	4.19
대전/세종/충청	(13)	4.08	3.77	4.00	4.00	4.08	4.38
대구/경북	(14)	4.00	4.14	4.00	4.14	4.21	4.07
부산/울산/경남	(9)	4.11	4.11	4.11	4.22	4.11	4.22
광주/전라	(17)	3.82	3.82	3.88	3.94	3.94	3.94
강원/제주	(16)	4.00	3.94	3.88	3.81	4.00	4.00

- ‘자치법규 문장작성 원칙’ 항목은 ‘법제업무’ 및 ‘규제심사’ 담당, ‘대전/세종/충청’ 근무자에서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및 ‘세부입안 기준’의 경우 ‘50대 이상’ 연령층, ‘법제업무’ 담당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9-1. 개정 및 보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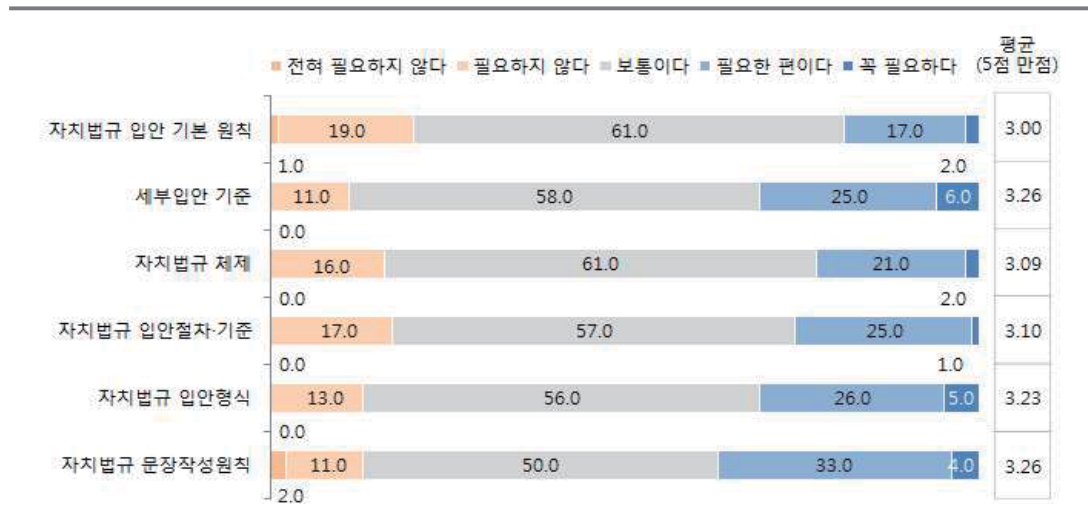
문9-1.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 중 개정이나 보완이 시급한 부분은 어디 인가요?

항 목	개정및 보완이 전혀 필요 하지 않다	개정및 보완이 필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개정및 보완이 필요한 편이다	개정및 보완이 꼭 필요 하다
(1) 자치법규(조례) 입안의 기본 원칙	①	②	③	④	⑤
1) (1)에서 ④, ⑤ 응답자만 구체적으로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을 기입해주세요 :					
(2) 세부 입안 기준(총칙, 본칙, 부칙 규정)	①	②	③	④	⑤
2) (2)에서 ④, ⑤ 응답자만 구체적으로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을 기입해주세요 :					
(3) 자치법규의 체제	①	②	③	④	⑤
3) (3)에서 ④, ⑤ 응답자만 구체적으로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을 기입해주세요 :					
(4) 자치법규의 입안 절차 및 기준	①	②	③	④	⑤
4) (4)에서 ④, ⑤ 응답자만 구체적으로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을 기입해주세요 :					
(5) 자치법규의 입안 형식	①	②	③	④	⑤
5) (5)에서 ④, ⑤ 응답자만 구체적으로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을 기입해주세요 :					
(6) 자치법규의 문장 작성 원칙	①	②	③	④	⑤
6) (6)에서 ④, ⑤ 응답자만 구체적으로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을 기입해주세요 :					

-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중 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책자 구성에 따라 항목을 구성하여 질문하였다.
-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하여 전문가들이 어떤 항목에 대하여 보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구성한 질문지이다.

[그림14] 개정 및 보완 필요성

[Base: 자치법규 매뉴얼 인지자, 단위: %]



-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각 내용(항목)의 개정 및 보완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세부입안 기준’ 및 ‘자치법규 문장작성 원칙(각각 3.26점)’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두 항목에 대해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31.0%(꼭 필요하다 : 6.0% + 필요한 편이다 : 25.0%), 37.0%(꼭 필요하다 : 4.0% + 필요한 편이다 : 33.0%)로 나타났다.
- 반면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3.00점)’의 경우 가장 낮은 점수로서, 각 항목 중 응답자가 느끼는 개정 및 보완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0 : 응답자 특성별 분석]

[Base: 자치법규 매뉴얼 인지도, 단위: 점(5점 만점)]

	사례수(명)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세부 입안 기준	자치법규 체제	자치법규 입안절차 및 기준	자치법규 입안형식	자치법규 문장작성 원칙
▣ 전 체 ▣	(100)	3.00	3.26	3.09	3.10	3.23	3.26
성 별							
남성	(67)	2.96	3.27	3.03	3.09	3.27	3.24
여성	(33)	3.09	3.24	3.21	3.12	3.15	3.30
연 령							
30대	(24)	3.04	3.42	3.08	3.33	3.38	3.33
40대	(47)	3.02	3.32	3.21	3.15	3.34	3.40
50대 이상	(29)	2.93	3.03	2.90	2.83	2.93	2.97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3.03	3.34	3.20	3.14	3.20	3.20
교육	(6)	3.17	3.17	3.00	3.33	3.33	3.33
규제심사	(6)	3.00	3.00	3.00	3.00	3.00	3.00
입법지원	(53)	2.96	3.25	3.04	3.06	3.26	3.32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2.98	3.21	3.06	3.11	3.16	3.24
3-5년	(17)	3.06	3.53	3.18	3.35	3.71	3.71
5-10년	(10)	3.00	3.10	3.10	2.90	3.00	3.00
10년이상	(10)	3.00	3.30	3.10	2.80	3.10	2.90
현근무지역							
서울	(10)	3.00	3.40	3.10	3.00	3.20	3.10
경기/인천	(21)	3.29	3.38	3.29	3.43	3.48	3.52
대전/세종/충청	(13)	3.00	3.38	3.15	3.00	3.23	3.23
대구/경북	(14)	2.57	2.86	2.79	2.79	2.79	2.86
부산/울산/경남	(9)	3.00	3.00	3.11	3.00	3.00	2.78
광주/전라	(17)	3.12	3.24	3.00	2.88	3.18	3.24
강원/제주	(16)	2.88	3.44	3.13	3.38	3.50	3.69

- ‘자치법규 문장작성 원칙’ 및 ‘자치법규 입안형식’ 항목의 경우 중사 기간 ‘3-5년’, ‘경기/인천’ 및 ‘강원/제주’ 근무자에서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치법규 체제’ 및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역시 ‘경기/인천’ 근무자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0. 행자부 자치법규 입법실무 망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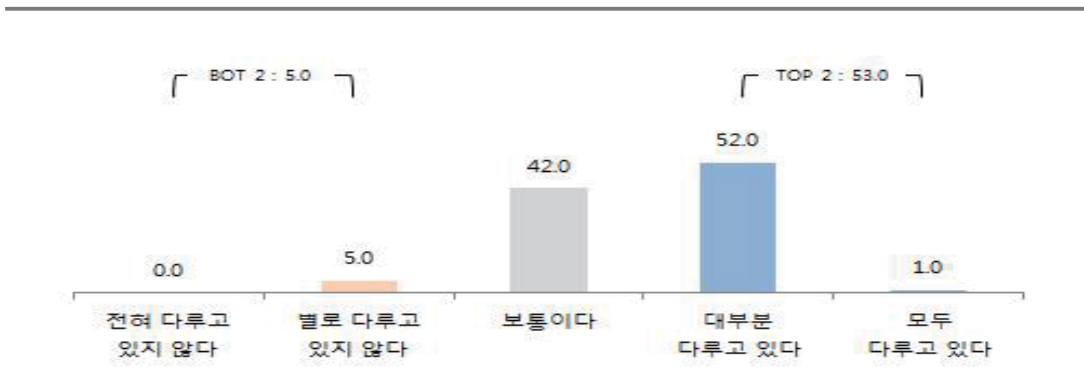
문10.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입법 실무’는 2012년 말에 발간되었습니다. 자치법규(조례) 입안 실무에서 다루고 있는 자치법규(조례) 입법 절차 및 기준과, 자치법규의 입안형식이 자치법규 입안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별로 다루고 있지 않다	보통이다	대부분 다루고 있다	모두 다루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입법 실무」에 대하여 이 책자가 자치법규 입법 실무 전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를 물었다.

[그림15] 행자부 자치법규 입법실무 망라성

[Base: 자치법규 매뉴얼 인지자, 단위: %]



- ‘행정자치부 발간 『자치법규 입법실무』가 자치법규 입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는 응답은 53.0%(모두 다루고 있다 : 1.0% + 대부분 다루고 있다 : 52.0%)로 나타나, 응답자 2명 중 1명은 긍정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반면 ‘다루고 있지 않다’의 경우 5.0%(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 0.0% + 별로 다루고 있지 않다 : 5.0%)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21 : 응답자 특성별 분석]

[Base: 자치법규 매뉴얼 인지도, 단위: %]

	사례수 (명)	별로 다루고 있지 않다	보통이다	대부분 다루고 있다	모두 다루고 있다
▣ 전 체 ▣	(100)	5.0	42.0	52.0	1.0
성 별					
남성	(67)	4.5	43.3	50.7	1.5
여성	(33)	6.1	39.4	54.5	0.0
연 령					
30대	(24)	8.3	41.7	50.0	0.0
40대	(47)	6.4	48.9	42.6	2.1
50대 이상	(29)	0.0	31.0	69.0	0.0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5.7	31.4	62.9	0.0
교육	(6)	0.0	50.0	50.0	0.0
규제심사	(6)	0.0	0.0	100.0	0.0
입법지원	(53)	5.7	52.8	39.6	1.9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3.2	34.9	60.3	1.6
3-5년	(17)	11.8	64.7	23.5	0.0
5-10년	(10)	10.0	30.0	60.0	0.0
10년이상	(10)	0.0	60.0	40.0	0.0

제 3 장 전문가 의견조사

	사례수 (명)	별로 다루고 있지 않다	보통이다	대부분 다루고 있다	모두 다루고 있다
현근무지역					
서울	(10)	10.0	50.0	40.0	0.0
경기/인천	(21)	4.8	52.4	42.9	0.0
대전/세종/충청	(13)	7.7	53.8	38.5	0.0
대구/경북	(14)	0.0	42.9	57.1	0.0
부산/울산/경남	(9)	0.0	22.2	77.8	0.0
광주/전라	(17)	11.8	29.4	52.9	5.9
강원/제주	(16)	0.0	37.5	62.5	0.0

- ‘대부분 다루고 있다’는 ‘50대 이상’ 연령층, ‘법제업무’ 및 ‘규제심사’ 담당, ‘부산/울산/경남’ 및 ‘강원/제주’ 근무자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 반면 ‘별로 다루고 있지 않다’의 경우 응답자 특성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11.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망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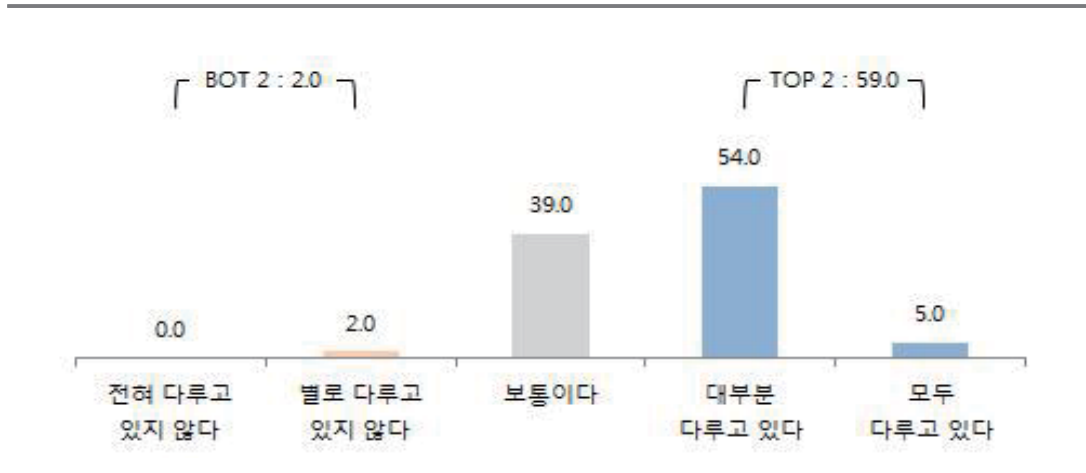
문11. 법제처의 ‘주제별·조문별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 또한 2013년에 발간되었는데요, 이 책자의 세부 입안 기준은 자치법규(조례) 입안에 필요한 사항을 망라해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별로 다루고 있지 않다	보통이다	대부분 다루고 있다	모두 다루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법제처가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자치법규 입법 실무 전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를 물었다.

[그림16]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망라성

[Base: 자치법규 매뉴얼 인지자, 단위: %]



- ‘법제처 발간 『주제별·조문별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의 세부입안 기준이 자치법규 입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는 응답은 59.0%(모두 다루고 있다 : 5.0% + 대부분 다루고 있다 : 54.0%)로 나타났다.
- 반면 ‘다루고 있지 않다’는 응답의 경우 2.0%(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 0.0% + 별로 다루고 있지 않다 : 2.0%)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 응답자 특성별 분석]

[Base: 자치법규 매뉴얼 인지자, 단위: %]

	사례수 (명)	별로 다루고 있지 않다	보통이다	대부분 다루고 있다	모두 다루고 있다
▣ 전 체 ▣	(100)	2.0	39.0	54.0	5.0
성 별					
남성	(67)	0.0	38.8	55.2	6.0
여성	(33)	6.1	39.4	51.5	3.0

제 3 장 전문가 의견조사

	사례수 (명)	별로 다루고 있지 않다	보통이다	대부분 다루고 있다	모두 다루고 있다
연 령					
30대	(24)	4.2	50.0	41.7	4.2
40대	(47)	2.1	42.6	51.1	4.3
50대 이상	(29)	0.0	24.1	69.0	6.9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0.0	25.7	71.4	2.9
교육	(6)	0.0	50.0	33.3	16.7
규제심사	(6)	0.0	0.0	100.0	0.0
입법지원	(53)	3.8	50.9	39.6	5.7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1.6	33.3	60.3	4.8
3-5년	(17)	5.9	58.8	35.3	0.0
5-10년	(10)	0.0	30.0	50.0	20.0
10년이상	(10)	0.0	50.0	50.0	0.0
현근무지역					
서울	(10)	10.0	60.0	30.0	0.0
경기/인천	(21)	0.0	42.9	47.6	9.5
대전/세종/충청	(13)	0.0	30.8	61.5	7.7
대구/경북	(14)	0.0	35.7	64.3	0.0
부산/울산/경남	(9)	0.0	44.4	44.4	11.1
광주/전라	(17)	5.9	29.4	58.8	5.9
강원/제주	(16)	0.0	37.5	62.5	0.0

- ▣ ‘모두 다루고 있다’는 ‘교육’, 종사기간 ‘5-10년’에서 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 ‘대부분 다루고 있다’의 경우 ‘50대 이상’ 연령층, ‘규제심사’ 및 ‘법제업무’ 담당, ‘대구/경북’ 근무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 ▣ 반면 ‘별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응답자 특성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12. 다양한 법령을 예시로 설명하는 방식의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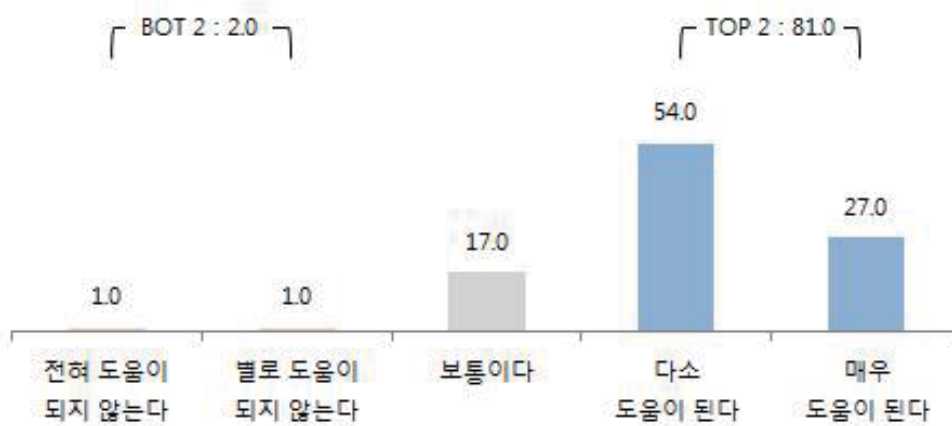
문12. 법제처의 ‘주제별·조문별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에서 다루고 있는 자치법규의 체제 및 문장작성의 원칙에서는 다양한 법령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이 실제 조례 입안 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다소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 법제처가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이 다양한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방식이 조례 입안시 도움이 되는 지를 물었다.

[그림17] 다양한 법령을 예시로 설명하는 방식의 도움 정도

[Base: 자치법규 매뉴얼 인지자, 단위: %]



- ‘법제처 발간 『주제별·조문별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의 자치법규 체제 및 문장작성 원칙 관련 법령 예시들이 실제 조례 입안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81.0%(매우 도움이 된다 : 27.0% + 다소 도움이 된다 : 54.0%)로 나타났다.
-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의 경우 2.0%(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1.0%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1.0%)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실제 예시를 주면 활용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응답이라고 하겠다.

[표 23 : 응답자 특성별 분석]

[Base: 자치법규 매뉴얼 인지자,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다소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 전 체 ▣	(100)	1.0	1.0	17.0	54.0	27.0
성 별						
남성	(67)	1.5	1.5	16.4	50.7	29.9
여성	(33)	0.0	0.0	18.2	60.6	21.2
연 령						
30대	(24)	4.2	4.2	25.0	58.3	8.3
40대	(47)	0.0	0.0	17.0	59.6	23.4
50대 이상	(29)	0.0	0.0	10.3	41.4	48.3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2.9	0.0	5.7	62.9	28.6
교육	(6)	0.0	0.0	16.7	33.3	50.0
규제심사	(6)	0.0	0.0	0.0	50.0	50.0
입법지원	(53)	0.0	1.9	26.4	50.9	20.8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0.0	0.0	15.9	55.6	28.6
3-5년	(17)	5.9	5.9	23.5	35.3	29.4
5-10년	(10)	0.0	0.0	10.0	50.0	40.0
10년이상	(10)	0.0	0.0	20.0	80.0	0.0

	사례수 (명)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다소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현근무지역						
서울	(10)	0.0	10.0	50.0	20.0	20.0
경기/인천	(21)	4.8	0.0	14.3	57.1	23.8
대전/세종/충청	(13)	0.0	0.0	7.7	53.8	38.5
대구/경북	(14)	0.0	0.0	7.1	64.3	28.6
부산/울산/경남	(9)	0.0	0.0	11.1	55.6	33.3
광주/전라	(17)	0.0	0.0	17.6	47.1	35.3
강원/제주	(16)	0.0	0.0	18.8	68.8	12.5

- ‘매우 도움이 된다’는 ‘50대 이상’ 연령층, ‘교육’ 및 ‘규제심사’ 담당, 종사기간 ‘5-10년’, ‘대전/세종/충청’ 근무자에서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소 도움이 된다’의 경우 종사기간 ‘10년 이상’, ‘대구/경북’ 및 ‘강원/제주’에서 높게 나타났다.

13. 조례 입법 실무,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실무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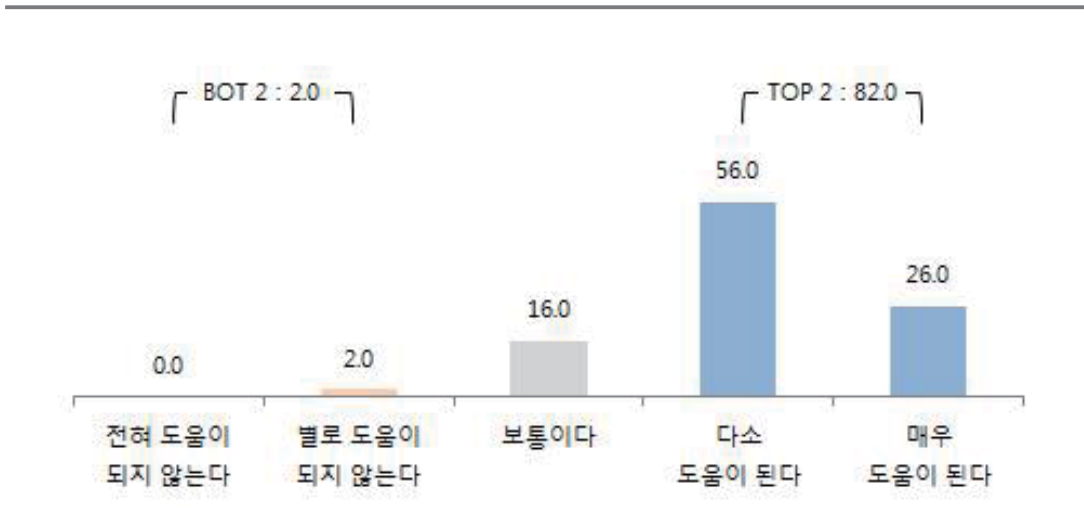
문13. 최근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해 자치법규(조례) 입안과 관련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 입법 실무’, ‘주제별·조문별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이 입안 지원 실무에 도움이 되고 있나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다소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 「조례 입법 실무」와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이 발간된 이후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개정이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대외적 변화에 대응하는데 양 책자가 도움이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림18] 조례 입법 실무,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실무 도움 정도

[Base: 자치법규 매뉴얼 인지자, 단위: %]



- ‘『조례 입법 실무』, 『주제별·조문별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이 최근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82.0%(매우 도움이 된다 : 26.0% + 다소 도움이 된다 : 56.0%)으로 나타났다.
-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의 경우 2.0%(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0.0%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2.0%)로 나타나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4 : 응답자 특성별 분석]

[Base: 자치법규 매뉴얼 인지도, 단위: %]

	사례수 (명)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다소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 전 체 ▣	(100)	2.0	16.0	56.0	26.0
성 별					
남성	(67)	1.5	16.4	53.7	28.4
여성	(33)	3.0	15.2	60.6	21.2
연 령					
30대	(24)	4.2	29.2	54.2	12.5
40대	(47)	2.1	12.8	61.7	23.4
50대 이상	(29)	0.0	10.3	48.3	41.4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0.0	8.6	57.1	34.3
교육	(6)	0.0	16.7	16.7	66.7
규제심사	(6)	0.0	0.0	50.0	50.0
입법지원	(53)	3.8	22.6	60.4	13.2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1.6	11.1	57.1	30.2
3-5년	(17)	5.9	35.3	35.3	23.5
5-10년	(10)	0.0	10.0	60.0	30.0
10년이상	(10)	0.0	20.0	80.0	0.0
현근무지역					
서울	(10)	10.0	40.0	30.0	20.0
경기/인천	(21)	0.0	23.8	47.6	28.6
대전/세종/충청	(13)	7.7	15.4	53.8	23.1
대구/경북	(14)	0.0	7.1	64.3	28.6
부산/울산/경남	(9)	0.0	0.0	55.6	44.4
광주/전라	(17)	0.0	11.8	58.8	29.4
강원/제주	(16)	0.0	12.5	75.0	12.5

▣ ‘매우 도움이 된다’의 경우 ‘50대 이상’ 연령층, ‘교육’ 및 ‘규제심사’ 담당, ‘부산/울산/경남’ 근무자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 ‘다소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종사기간 ‘10년 이상’, ‘강원/제주’ 근무자에서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 조례 입법 실무, 자치법규 입안매뉴얼의 개정 및 보완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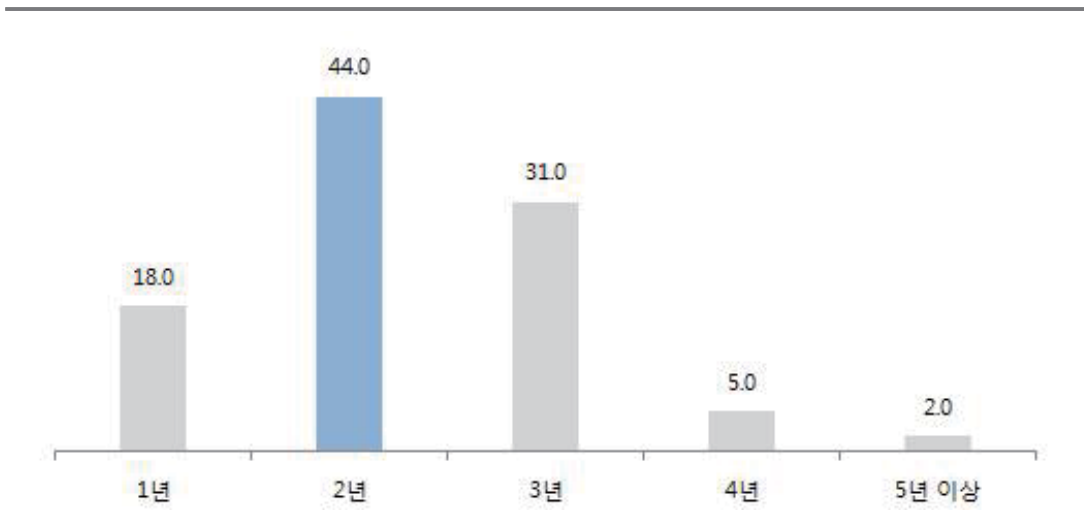
문14. 선생님께서는 지방자치 입법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 입법 실무」, 「주제별·조문별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개정해야 한다면, 개정 및 보완이 몇 년 주기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① 1년
- ② 2년
- ③ 3년
- ④ 4년
- ⑤ 5년 이상

- 「조례 입법 실무」와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개정시 개정주기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물었다.
- 실제 조례 입안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매뉴얼 개정 주기를 가늠하고자 질문을 구성하였다.

[그림19] 조례 입법 실무, 자치법규 입안매뉴얼의 개정 및 보완 주기

[Base: 자치법규 매뉴얼 인지자, 단위: %]



- 『자치법규 입법실무』, 『주제별·조문별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의 개정 및 보완 주기를 조사한 결과, ‘2년(44.0%)’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어서 ‘3년(31.0%)’, ‘1년(18.0%)’, ‘4년(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5년 이상(2.0%)’의 경우 응답자들이 가장 적게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5 : 응답자 특성별 분석]

[Base: 자치법규 매뉴얼 인지도, 단위: %]

	사례수 (명)	1년	2년	3년	4년	5년 이상
▣ 전 체 ▣	(100)	18.0	44.0	31.0	5.0	2.0
성 별						
남성	(67)	19.4	44.8	29.9	4.5	1.5
여성	(33)	15.2	42.4	33.3	6.1	3.0
연 령						
30대	(24)	20.8	37.5	33.3	8.3	0.0
40대	(47)	19.1	48.9	25.5	6.4	0.0
50대 이상	(29)	13.8	41.4	37.9	0.0	6.9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11.4	48.6	37.1	0.0	2.9
교육	(6)	33.3	33.3	16.7	16.7	0.0
규제심사	(6)	0.0	33.3	66.7	0.0	0.0
입법지원	(53)	22.6	43.4	24.5	7.5	1.9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15.9	44.4	33.3	4.8	1.6
3-5년	(17)	29.4	47.1	23.5	0.0	0.0
5-10년	(10)	0.0	50.0	30.0	10.0	10.0
10년이상	(10)	30.0	30.0	30.0	10.0	0.0
현근무지역						
서울	(10)	20.0	60.0	20.0	0.0	0.0
경기/인천	(21)	19.0	47.6	28.6	4.8	0.0
대전/세종/충청	(13)	38.5	23.1	30.8	7.7	0.0
대구/경북	(14)	7.1	35.7	50.0	7.1	0.0
부산/울산/경남	(9)	11.1	33.3	33.3	0.0	22.2
광주/전라	(17)	29.4	47.1	23.5	0.0	0.0
강원/제주	(16)	0.0	56.3	31.3	12.5	0.0

- ‘2년’ 주기로 개정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은 ‘서울’ 및 ‘강원/제주’ 근무자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 ‘3년’ 주기의 경우 ‘규제심사’ 담당, ‘대구/경북’ 근무자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반면, ‘1년’ 주기를 선택한 응답자는 종사기간 ‘3-5년’, ‘대전/세종/충청’ 근무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15. 조례 입안심사기준 마련 시 가장 중요하게 포함되어야 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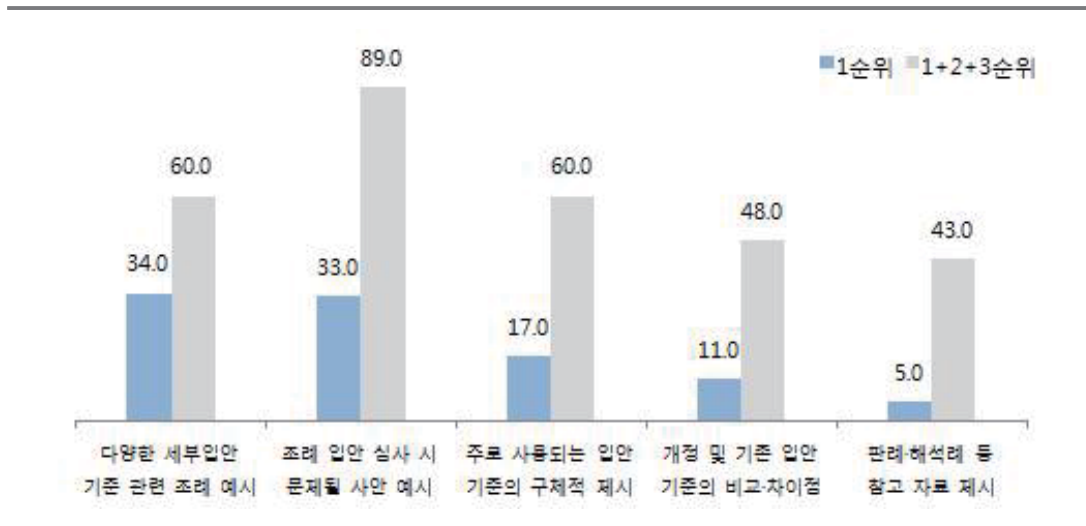
문15. 새롭게 조례 입안심사기준 마련 시 가장 중요하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말씀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① 다양한 세부 입안 기준 관련 조례 예시
- ② 조례 입안 심사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예시
- ③ 주로 사용되는 입안 기준의 구체적 제시
- ④ 변화된 입안 기준과 기존 기준의 비교 및 차이점 제시
- ⑤ 관례·해석례 등 참고 자료 제시

- 법령의 경우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 입안심사기준」이 법령 입안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는데서 착안하여, 조례 입안 심사기준을 마련한다는 가정을 두고 이때 가장 중요하게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전문가의 의견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림20] 조례 입안심사기준 마련 시 가장 중요하게 포함되어야 할 사항

[Base: 자치법규 매뉴얼 인지도, 단위: %]



- ‘새로운 조례 입안심사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면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사항’을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양한 세부입안 기준 관련 조례 예시(34.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이어서 ‘조례 입안 심사 시 문제될 사안 예시(33.0%)’, ‘주로 사용되는 입안 기준의 구체적 제시(17.0%)’, ‘개정 및 기존 입안 기준의 비교·차이점(11.0%)’, ‘판례·해석례 등 참고 자료 제시(5.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반면 1+2+3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조례 입안 심사 시 문제될 사안 예시(89.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다양한 세부입안 기준 관련 조례 예시’ 및 ‘주로 사용되는 입안 기준의 구체적 제시(각각 60.0%)’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6 : 응답자 특성별 분석(1순위)]

[Base: 자치법규 매뉴얼 인지도, 단위: %]

	사례수 (명)	다양한 세부입안 기준관련 조례예시	조례 입안심사시 문제될 사안예시	주로사용 되는입안 기준 구체화	개정 및 기존입안 기준비교	관례 등 참고자료 제시
▣ 전 체 ▣	(100)	34.0	33.0	17.0	11.0	5.0
성 별						
남성	(67)	41.8	25.4	16.4	10.4	6.0
여성	(33)	18.2	48.5	18.2	12.1	3.0
연 령						
30대	(24)	33.3	25.0	33.3	4.2	4.2
40대	(47)	34.0	29.8	14.9	17.0	4.3
50대 이상	(29)	34.5	44.8	6.9	6.9	6.9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34.3	25.7	20.0	17.1	2.9
교육	(6)	50.0	0.0	33.3	0.0	16.7
규제심사	(6)	16.7	50.0	16.7	16.7	0.0
입법지원	(53)	34.0	39.6	13.2	7.5	5.7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31.7	41.3	14.3	9.5	3.2
3-5년	(17)	41.2	17.6	23.5	11.8	5.9
5-10년	(10)	30.0	20.0	30.0	10.0	10.0
10년이상	(10)	40.0	20.0	10.0	20.0	10.0
현근무지역						
서울	(10)	30.0	20.0	50.0	0.0	0.0
경기/인천	(21)	38.1	33.3	19.0	4.8	4.8
대전/세종/충청	(13)	7.7	61.5	15.4	7.7	7.7
대구/경북	(14)	50.0	21.4	7.1	21.4	0.0
부산/울산/경남	(9)	44.4	33.3	11.1	0.0	11.1
광주/전라	(17)	23.5	29.4	11.8	23.5	11.8
강원/제주	(16)	43.8	31.3	12.5	12.5	0.0

- ▣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양한 세부입안 기준 관련 조례 예시’의 경우 ‘교육’, ‘대구/경북’ 및 ‘부산/울산/경남’ 근무자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 ▣ ‘조례 입안 심사 시 문제될 사안 예시’는 ‘여성’ 응답자, ‘50대 이상’ 연령층, ‘규제심사’ 담당, ‘대전/세종/충청’ 근무자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7 : 응답자 특성별 분석(1+2+3순위)]

[Base: 자치법규 매뉴얼 인지도, 단위: %]

	사례수 (명)	다양한 세부입안 기준관련 조례예시	조례 입안심사시 문제될 사안예시	주로사용되는입안 기준 구체화	개정 및 기준입안 기준비교	관례 등 참고자료 제시
▣ 전 체 ▣	(100)	60.0	89.0	60.0	48.0	43.0
성 별						
남성	(67)	64.2	85.1	53.7	52.2	44.8
여성	(33)	51.5	97.0	72.7	39.4	39.4
연 령						
30대	(24)	62.5	91.7	66.7	37.5	41.7
40대	(47)	59.6	87.2	61.7	42.6	48.9
50대 이상	(29)	58.6	89.7	51.7	65.5	34.5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65.7	91.4	71.4	37.1	34.3
교육	(6)	50.0	50.0	83.3	33.3	83.3
규제심사	(6)	66.7	83.3	50.0	83.3	16.7
입법지원	(53)	56.6	92.5	50.9	52.8	47.2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60.3	90.5	65.1	46.0	38.1
3-5년	(17)	70.6	100.0	41.2	29.4	58.8
5-10년	(10)	50.0	70.0	50.0	70.0	60.0
10년이상	(10)	50.0	80.0	70.0	70.0	30.0

제 3 장 전문가 의견조사

	사례수 (명)	다양한 세부입안 기준관련 조례예시	조례 입안심사시 문제될 사안예시	주로사용 되는입안 기준 구체화	개정 및 기존입안 기준비교	관례 등 참고자료 제시
현근무지역						
서울	(10)	40.0	90.0	60.0	40.0	70.0
경기/인천	(21)	61.9	90.5	61.9	38.1	47.6
대전/세종/충청	(13)	53.8	84.6	69.2	53.8	38.5
대구/경북	(14)	71.4	85.7	57.1	50.0	35.7
부산/울산/경남	(9)	66.7	88.9	55.6	44.4	44.4
광주/전라	(17)	41.2	88.2	70.6	70.6	29.4
강원/제주	(16)	81.3	93.8	43.8	37.5	43.8

- 1+2+3순위 기준으로 분석 시, ‘조례 입안 심사 시 문제될 사안 예시’의 경우 종사기간 ‘3-5년’에서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양한 세부입안 기준 관련 조례 예시’ 항목은 ‘대구/경북’ 및 ‘강원/제주’ 근무자에서 높은 반면, ‘주로 사용되는 입안 기준의 구체적 제시’ 항목의 경우는 ‘여성’ 응답자, ‘법제업무’ 담당, 종사기간 ‘10년 이상’, ‘광주/전라’ 근무자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16. 법령의 내용을 조례로 반복하는 자치법규의 입안 방식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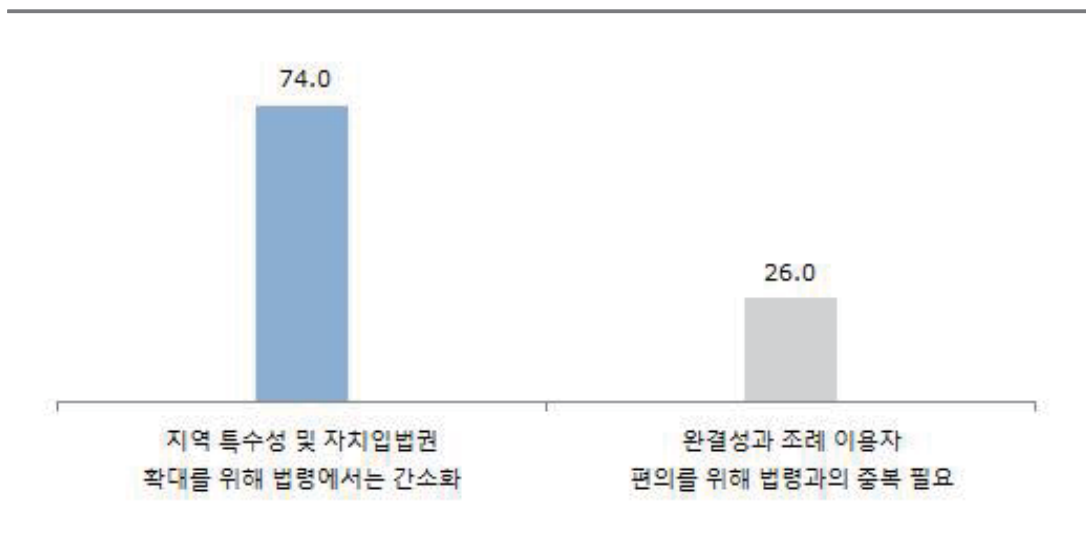
문16. 법령의 내용을 조례로 반복하는 자치법규의 입안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① 완결성과 조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법령과의 중복은 필요하다
- ② 지역의 특수성 및 자치입법권의 확대를 고려해 법령에서는 간소하게 다루고, 자세한 내용을 조례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문 16은 자치법규 입법형식에 관한 질문으로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서 그대로 반복하는 형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그림21] 법령의 내용을 조례로 반복하는 자치법규의 입안 방식에 대한 의견

[Base: 자치법규 매뉴얼 인지자, 단위: %]



- ‘자치법규 입안 방식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지역 특수성 및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법령에서는 간소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74.0%, ‘완결성과 조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법령과의 중복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6.0%로 나타났다.
- 자치입법의 확대를 위해서 법령에서는 간소하게 규정을 두고 자치입법의 규정을 통해서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지방자치입법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 입안 관련 전문가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표 28 : 응답자 특성별 분석]

[Base: 자치법규 매뉴얼 인지도, 단위: %]

	사례수 (명)	완결성과 조례이용자 편의를 위해 법령과의 중복 필요	지역특수성 및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법령에서는 간소화
▣ 전 체 ▣	(100)	26.0	74.0
성 별			
남성	(67)	26.9	73.1
여성	(33)	24.2	75.8
연 령			
30대	(24)	25.0	75.0
40대	(47)	25.5	74.5
50대 이상	(29)	27.6	72.4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17.1	82.9
교육	(6)	50.0	50.0
규제심사	(6)	16.7	83.3
입법지원	(53)	30.2	69.8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27.0	73.0
3-5년	(17)	5.9	94.1
5-10년	(10)	60.0	40.0
10년이상	(10)	20.0	80.0
현근무지역			
서울	(10)	20.0	80.0
경기/인천	(21)	38.1	61.9
대전/세종/충청	(13)	38.5	61.5
대구/경북	(14)	0.0	100.0
부산/울산/경남	(9)	33.3	66.7
광주/전라	(17)	29.4	70.6
강원/제주	(16)	18.8	81.3

- ▣ ‘법령과의 중복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경우 종사기간 ‘5-10년’, ‘경기/인천’ 및 ‘대전/세종/충청’ 근무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 ▣ 반면 ‘법령에서는 간소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종사기간 ‘3-5년’, ‘대구/경북’ 근무자에서 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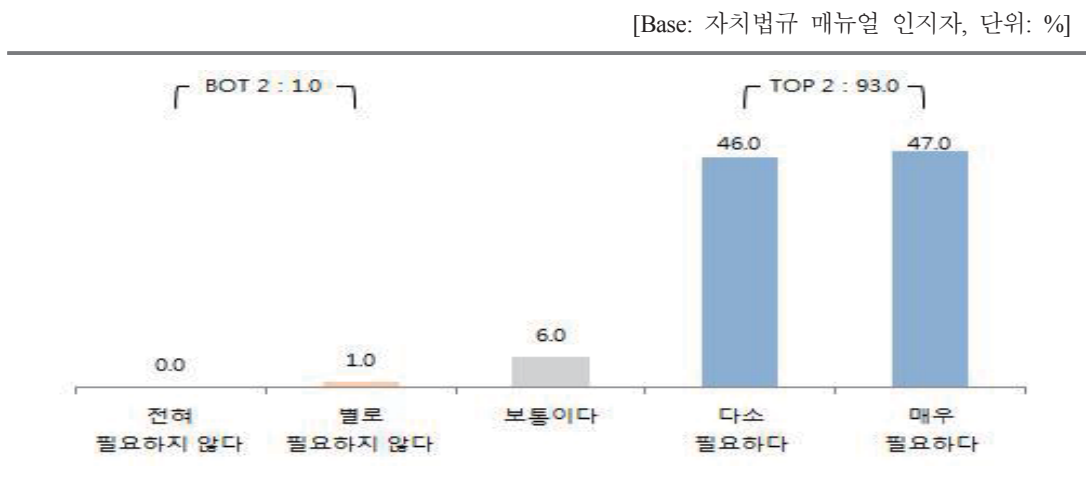
17. 실제 조례 사례 위주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제공의 필요성

문17. 실제 조례 사례 위주의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제공이 필요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 실제 조례를 사례로 들어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제작하고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여 조례 입안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림22] 실제 조례 사례 위주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제공의 필요성



○ ‘실제 사례 위주의 매뉴얼 제작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3.0%(매우 필요하다 : 47.0% + 다소 필요하다 : 46.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반면 ‘필요하지 않다’의 경우 1.0%(전혀 필요하지 않다 : 0.0%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1.0%)로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9 : 응답자 특성별 분석]

[Base: 자치법규 매뉴얼 인지자, 단위: %]

	사례수 (명)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 전 체 ▣	(100)	1.0	6.0	46.0	47.0
성 별					
남성	(67)	1.5	6.0	47.8	44.8
여성	(33)	0.0	6.1	42.4	51.5
연 령					
30대	(24)	4.2	0.0	54.2	41.7
40대	(47)	0.0	4.3	42.6	53.2
50대 이상	(29)	0.0	13.8	44.8	41.4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0.0	8.6	34.3	57.1
교육	(6)	0.0	0.0	50.0	50.0
규제심사	(6)	0.0	0.0	50.0	50.0
입법지원	(53)	1.9	5.7	52.8	39.6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1.6	4.8	42.9	50.8
3-5년	(17)	0.0	0.0	58.8	41.2
5-10년	(10)	0.0	10.0	40.0	50.0
10년이상	(10)	0.0	20.0	50.0	30.0
현근무지역					
서울	(10)	0.0	10.0	60.0	30.0
경기/인천	(21)	0.0	0.0	47.6	52.4
대전/세종/충청	(13)	0.0	0.0	61.5	38.5
대구/경북	(14)	7.1	14.3	35.7	42.9
부산/울산/경남	(9)	0.0	0.0	33.3	66.7
광주/전라	(17)	0.0	5.9	41.2	52.9
강원/제주	(16)	0.0	12.5	43.8	43.8

■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법제업무’ 담당, ‘부산/울산/경남’ 근무자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다소 필요하다’는 응답의 경우 종사기간 ‘3-5년’, ‘서울’ 및 ‘대전/세종/충청’ 근무자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8. 희망하는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교육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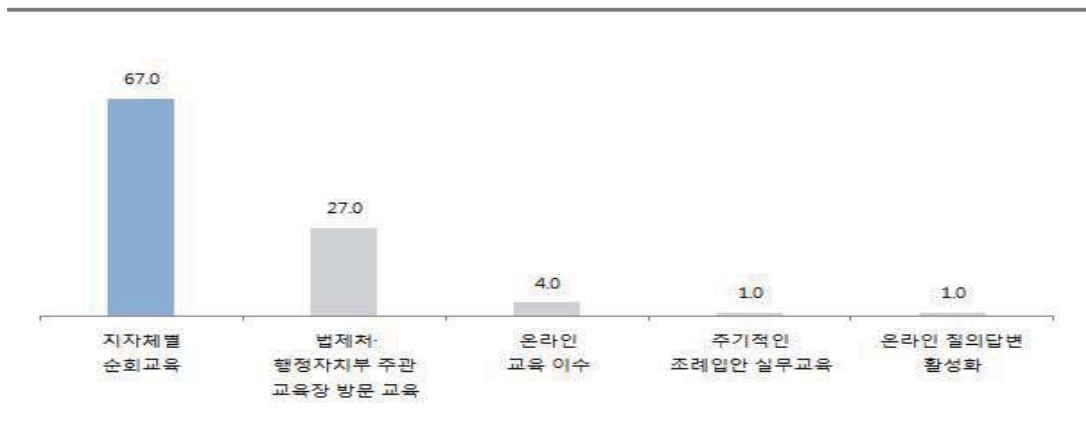
문18.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개편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제공한다면 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① 법제처, 행정자치부 등에서 주관하는 교육장 방문 교육
- ② 지자체별 순회교육
- ③ 기타 (적어주세요:)

○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개편하고 그에 따라 교육을 제공한다면 교육의 방식이 어떻게 되었으면 하는지를 질문지를 구성하여 물었다. 향후 자치법규 관련 교육의 형식을 확정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그림23] 희망하는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교육 방식

[Base: 자치법규 매뉴얼 인지자, 단위: %]



제3 장 전문가 의견조사

- ‘희망하는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교육 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지자체별 순회교육(67.0%)’이 가장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어서 ‘법제처·행정자치부 주관 교육장 방문 교육(27.0%)’ 항목의 응답이 20%대로 높게 나타났다.
- 한편 ‘온라인 교육 이수(4.0%)’, ‘주기적인 조례 입안 실무교육(1.0%)’, ‘온라인 질의답변 활성화(1.0%)’ 등의 소수 의견이 조사되었다.

[표 30 : 응답자 특성별 분석]

[Base: 자치법규 매뉴얼 인지도, 단위: %]

	사례수 (명)	법제처 행정 자치부 주관 교육장 방문교육	지자체별 순회교육	주기적인 조례 입안실무 교육	온라인 교육 이수	온라인 질의답변 활성화
▣ 전 체 ▣	(100)	27.0	67.0	1.0	4.0	1.0
성 별						
남성	(67)	23.9	71.6	1.5	1.5	1.5
여성	(33)	33.3	57.6	0.0	9.1	0.0
연 령						
30대	(24)	33.3	58.3	0.0	8.3	0.0
40대	(47)	27.7	63.8	2.1	4.3	2.1
50대 이상	(29)	20.7	79.3	0.0	0.0	0.0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34.3	62.9	0.0	2.9	0.0
교육	(6)	0.0	66.7	16.7	16.7	0.0
규제심사	(6)	16.7	83.3	0.0	0.0	0.0
입법지원	(53)	26.4	67.9	0.0	3.8	1.9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27.0	68.3	0.0	4.8	0.0
3-5년	(17)	41.2	47.1	5.9	0.0	5.9
5-10년	(10)	10.0	80.0	0.0	10.0	0.0
10년이상	(10)	20.0	80.0	0.0	0.0	0.0

	사례수 (명)	법제처 행정 자치부 주관 교육장 방문교육	지자체별 순회교육	주기적인 조례 입안실무 교육	온라인 교육 이수	온라인 질의답변 활성화
현근무지역						
서울	(10)	30.0	60.0	0.0	10.0	0.0
경기/인천	(21)	28.6	66.7	4.8	0.0	0.0
대전/세종/충청	(13)	30.8	69.2	0.0	0.0	0.0
대구/경북	(14)	35.7	57.1	0.0	7.1	0.0
부산/울산/경남	(9)	22.2	77.8	0.0	0.0	0.0
광주/전라	(17)	23.5	70.6	0.0	5.9	0.0
강원/제주	(16)	18.8	68.8	0.0	6.3	6.3

- ‘지자체별 순회교육’을 선호하는 응답자는 ‘50대 이상’ 연령층, ‘규제 심사’ 담당, 종사기간 ‘5년 이상’, ‘부산/울산/경남’ 근무자에서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법제처·행정자치부 주관 교육장 방문 교육’의 경우 종사기간이 ‘3-5년’인 응답자들이 특히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9. 적당한 교육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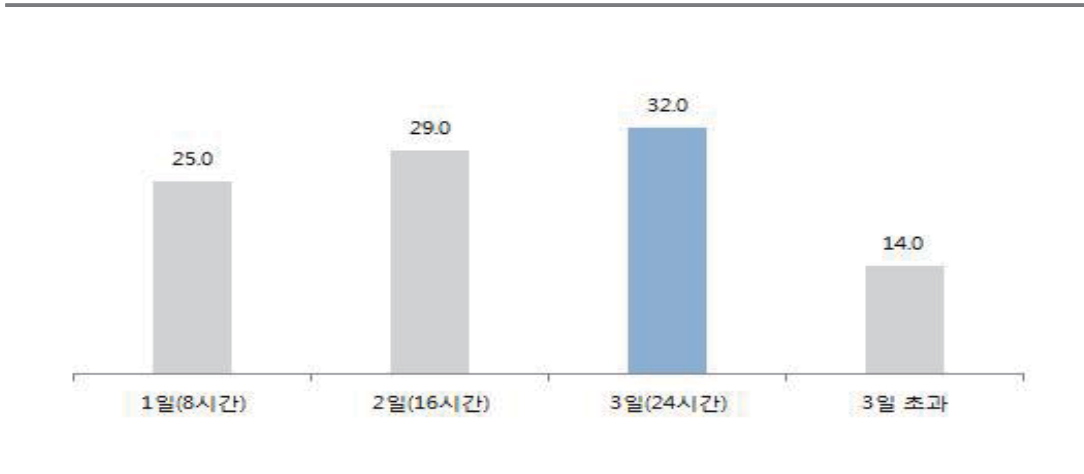
문19.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개편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제공한다면 교육 시간은 얼마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① 8시간(1일)
- ② 16시간(2일)
- ③ 24시간(3일)
- ④ 3일 이상
- ⑤ 기타 (적어주세요:)

-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개편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시간이 어느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지를 구성하여 물었다.
- 이에 대한 응답을 들어서 향후 교육설계에 활용하고자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그림24] 적당한 교육 시간

[Base: 자치법규 매뉴얼 인지자, 단위: %]



- ‘희망하는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교육 시간’을 살펴보면 ‘3일(24시간)’이 32.0%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어서 ‘2일(16시간)’이 29.0%, ‘1일(8시간)’이 25.0%로 각각 20%대의 응답자들이 선호함
- 반면 ‘3일 초과’의 경우 14.0%로서 선호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 : 응답자 특성별 분석]

[Base: 자치법규 매뉴얼 인지도, 단위: %]

	사례수 (명)	1일(8시간)	2일(16시간)	3일(24시간)	3일 초과
▣ 전 체 ▣	(100)	25.0	29.0	32.0	14.0
성 별					
남성	(67)	25.4	26.9	29.9	17.9
여성	(33)	24.2	33.3	36.4	6.1
연 령					
30대	(24)	16.7	16.7	45.8	20.8
40대	(47)	23.4	25.5	38.3	12.8
50대 이상	(29)	34.5	44.8	10.3	10.3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20.0	28.6	40.0	11.4
교육	(6)	33.3	33.3	16.7	16.7
규제심사	(6)	33.3	50.0	0.0	16.7
입법지원	(53)	26.4	26.4	32.1	15.1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22.2	31.7	34.9	11.1
3-5년	(17)	5.9	23.5	41.2	29.4
5-10년	(10)	30.0	40.0	10.0	20.0
10년이상	(10)	70.0	10.0	20.0	0.0
현근무지역					
서울	(10)	40.0	0.0	40.0	20.0
경기/인천	(21)	23.8	28.6	33.3	14.3
대전/세종/충청	(13)	38.5	15.4	38.5	7.7
대구/경북	(14)	7.1	42.9	50.0	0.0
부산/울산/경남	(9)	44.4	33.3	0.0	22.2
광주/전라	(17)	11.8	41.2	29.4	17.6
강원/제주	(16)	25.0	31.3	25.0	18.8

▣ ‘3일(24시간)’을 선호하는 응답자들의 경우 ‘30대’ 연령층, ‘대구/경북’ 근무자들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2일(16시간)’의 경우 ‘50대 이상’ 연령층, ‘규제심사’ 담당, 종사기간 ‘5-10년’, ‘광주/전라’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1일(8시간)’은 종사기간 ‘10년 이상’, ‘서울’, ‘대전/세종/충청’ 및 ‘부산/울산/경남’ 근무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제 4 장 「조례 입안심사기준」 정비방안

제 1 절 전문가 조사결과 분석

I. 전문가 정성조사 결과

전문가 정성조사에 참여한 조례 입안 전문가들은 직·간접적으로 자치법규 입안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자치법규 입안 지원시 활용하는 보조자료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법제처와 행정자치부의 발간자료를 주로 활용한다는 답변을 얻었으며, 자치입법의 내용과 절차 등 전반적인 개념을 알기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한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와 같은 책자의 효과성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서 조례 입안 업무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실제 업무 사용에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지방자치 관련 중요 법령 개정에 따른 발간 자료의 활용도를 물었는데, “일반적 흐름과 형식적인 측면을 참고하는데 도움이 되나, 최신 이슈와 관련이 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사례 동향 파악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례 및 관련 사례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새롭게 조례 입안심사기준을 마련할 경우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하는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입법평가 조례, 입안심사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 주로 사용되는 입안 기준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조례 입안 매뉴얼을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 제공)과 유사하게 풍성하게 해서 실제 조례 사례들을 가지고 만들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제공을 하는 방식이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공무원들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법제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사례 위주의 매뉴얼 편찬에 대해서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며,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성조사의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정량조사 설문지를 마련하는데 활용하였다.

II. 전문가 정량조사 결과

전문가 정량조사에 참여한 조례 입안 전문가 전체는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대한 내용의 인지 정도도 ‘잘 알고 있다’가 68.0%(매우 잘 알고 있다 : 20.0% + 알고 있는 편이다 : 48.0%)로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대한 사전 안내 또는 교육에 대해서는 반수 이상(56.0%)이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으나 반대로 반수(44.0%) 가량은 경험이 없어 사전 안내나 교육이 필수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교육을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 64.3%가 법제처, 30.4%가 소속기관에서 교육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실제로 활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83.0%로, 많은 조례 입안 전문가들이 매뉴얼 활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자치법규 입안 지원 시 활용자료로도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조례 입법실무 등 법제처, 행정자치부의 발간자료(85.5%)’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조례 입법 실무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등의 활용 정도에 대해서는 55.0%(매우 많이 활용한다: 7.0% + 많이 활용한다: 48.0%) 정도만이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 정도가 매우 활발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적극 활용한다는 응답자

는 ‘형식, 원칙, 체계 등을 알 수 있어서(65.5%)’ 활용한다고 했고, 활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다양한 사례가 제시되지 않아서(31.3%)’를 많이 꼽고 있었다.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내용 중에서도 ‘자치법규 입안 형식(68.7%)’, ‘자치법규 문장 작성 원칙(64.6%)’, ‘자치법규 입안 기본 원칙(63.6%)’, ‘세부입안기준(62.6%)’을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마다 매뉴얼을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17.0%에 그쳤고, 필요할 때만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69.0%가량으로 나타났다.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64.3%)’ 굳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필요한 사항이 없다는 응답자(28.6%)도 일정 수준 존재하고 있다.

실용성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입안형식(평균 4.04점)’, ‘자치법규 문장 작성 원칙(평균 4.05점)’이 가장 실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형식적인 부분에 대한 참고사항이 필요할 때 매뉴얼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정 및 보완해야할 영역에 대해서도 ‘자치법규 문장 작성 원칙(평균 3.26점)’을 가장 높게 꼽고 있어 가장 필요한 영역인 만큼 현 실정에 맞게 개정이 돼야할 부분도 자치법규 문장 작성 원칙인 것으로 조사됐다. 매뉴얼의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2년(44.0%)주기가 가장 적정하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많았다.

만약 “법령 입안심사기준”과 유사하게 “조례 입안심사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하게 포함될 사항으로는 ‘조례 입안 심사 시 문제될 사안 예시(89.0%)’를 가장 많이 꼽아 전반적으로 다양한 사례를 예시로 들어 실제 입안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행정자치부 「조례 입법 실무」의 조례 입안 지원에 있어서의 망라성에 대해서는 ‘입법 실무를 망라하고 있다’는 응답이 반수(53.0%)정도로

나타났고, ‘보통이다’는 응답은 42.0%로 나타났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조례 입법 지원에 대한 망라성에 대해서도 59.0% 정도가 다루고 있다고 응답해 행정부의 매뉴얼과 망라성 평가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다양한 법령을 예시로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례 입법 실무」,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실무 도움 정도는 모두 80%대로 높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실제 조례 사례 위주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제작 및 교육 제공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93.0%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희망하는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교육 방식은 67.0%가 지자체별 순회 교육을 꼽아, 지방의 실무진들이 교육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방문 위주의 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시간은 3일(24시간)을 꼽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전반적으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형식이나 절차적인 측면에서 활용한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오랜 시간 개정이 되지 않았고,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존재하고 있으며, 조례를 입안할 때에 다양한 지자체들의 상황이 있는 만큼, 현실을 반영하는 더 풍부하고 현실적인 예시들을 사례로 들어 매뉴얼에 반영하길 바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나아가 현재의 매뉴얼을 주기적으로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례 파트를 더 중점적으로 검토해 조례 입안 실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관련된 교육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조례 입안심사기준」 정비안

전문가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조례 입안심사기준 정비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전문가 조사 결과를 분석한 바,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대한 활용도가 높았으며, 정비방안에 대한 의견도 이 책자에 대한 의견이 더 많았다는 점에서 전체 정비방안은 함께 제시하되, 세부적인 정비안은 법제처에서 2013년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중심으로 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I. 「조례 입안심사기준」 전반적인 정비방안

1. 조례 제·개정시 참고할 수 있는 단권화된 책자로의 정비

법제처에서 법령에 대한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비해 본다면 「주제별·조문별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은 실질적으로 조례 입안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망라하고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 조례의 제·개정 절차 및 다종·다양화하고 있는 조례의 종류에 따라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본칙 규정 부분을 좀 더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하여 조례 입안 전문가들도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문가 정성조사에서 “총칙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시책 수립규정 등의 보강이 필요하며, 부칙규정에서 업무규제, 자격부여, 부관, 취소, 가산금, 연체금, 재정·회계, 행정지도, 보고, 출입·검사, 공청회와 관련한 규정의 설명이 따로 표시되었으면 한다. 또한 경과조치 규정 보강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단권화와 관련된 의견으로 참고할 만한 의견으로 “조례 입안의 초보자부터 숙련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가장 기초적인 사항부터 구체적이고 충분한 사례를 담아 편찬하는 것이 조례 입안 매뉴얼의 활용도의 측면과 자치법규 입안 실무의 측면 모두 도움이 될 것임. 현재 법제처에서는 자치법규 입안 실무를 기본과정 및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해당 교재도 달리하고 있으나, 입안 매뉴얼은 모든 공무원이 자치법규 입안에 대한 실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단권화하는 것이 교육 및 실무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는 의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조례 입안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본칙부분을 확대·재편하여 정비하여 단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 다양한 조례를 포함한 사례 보강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많은 부분이 법령을 사례로 들어 소개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는 조례 입안 전문가의 목소리가 많았다.

예를 들자면 전문가 대상 정성조사에서 “법령을 사례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 조례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 더 도움이 될 것이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제3편에서는 자치법규의 체제 및 문장작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예시를 들고 있다. 이와 관련된 예시를 법령의 사례를 들고, 법령 문장의 작성원칙과 동일하게 소개하고 있다. 자치법규와 법령의 작성 방식은 유사하다고 할 것이지만, 자치법규가 가지는 특성을 반영한 작성방식을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각 조례마다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예시문을 적절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문가 설문조사(정량조사) 결과에서도 새로운 조례 입안심사기준을 마련할 경우 가장 필요한 사항(주

요한 사항)을 전체응답자의 34%가 “다양한 세부입안 기준 관련 조례 예시”로 들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3. 지방자치 관련 법령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변화 필요성

「지방재정법」 개정 등 지방자치 관련 법령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여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 정성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입안지원을 위하여 제·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입안 내용을 PDF 등으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이 6개월(주기적)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규제 등의 적용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 꼭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 관련 법령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자치입법의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 법령의 변화에 대하여 확인하고 조례로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큰 변화를 전달하고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개정 보완주기와 관련하여 전문가 설문조사의 결과로는 2년마다 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44%의 응답을 얻었음을 참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자치입법의 특성을 반영한 조례 정비기준 제시

자치입법 특히 조례의 경우 제·개정 법령과는 달리 분야별로 유사성을 나타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인가 기초자치단체인가에 따라서 즉,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서도 유사한 조례 간에 내용적 유사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조례 입안시 타 시도에서 먼저 제·개정된 조례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며, 위임에 따른 조례의 경우 위임의 범위가 같다는 점에서 오는 자치입법이 갖는 특징이 나타나는 것 일 수도 있다. 이러한 자치입법의 특징을 반영하여 정비 기준을 검토하여 매뉴얼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5. 교육 훈련의 활성화

자치입법에 관하여 입안 전문가를 확보하여 자치입법의 자발적인 발전 동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조례 입법 실무」의 정비와 동시에 이 책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훈련의 활성화가 정책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육훈련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전문가 설문조사(정성조사)의 결과도 동일한 사항을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실제 조례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조례 입법 실무」를 정비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93%(매우 필요하다 : 47%+다소 필요하다 46%)에 달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수정·보완 요구 못지않게 이와 관련된 교육에 대한 수요도 높다는 점을 반영하여 향후 자치법규 입안 지원 교육 계획 수립시 정책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II.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세부 정비방안

1.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위임사항 제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서는 「지방자치법」의 위임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¹⁷⁾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17)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2013, 11면.

위임사항을 정리하여 법령별로 책자에서 제시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책자로 단권화하여 제시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자면,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문화진흥법」,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조례 위임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 조례 위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 9 조 회계의 구분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29조의2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31조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제32조의2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32조의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32조의8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제37조의2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제44조 채무부담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법」 조례 위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 2 조 적용 범위 제 5 조 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제 7 조 관리자 제12조 권한의 위임 등 제19조 지방채 등 제22조 요금 제37조 이익의 처리 제39조 회전기금 제46조 업무 상황의 공표 등 제49조 설립

제 4 장 「조례 입안심사기준」 정비방안

제53조 출자
제68조 사채 발행 및 차관
제71조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제75조의4 권한의 위탁
제76조 설립·운영

▶ 「지방공무원법」 조례 위임사항

제 2 조 공무원의 구분
제 3 조 적용범위
제 6 조 임용권자
제 7 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제14조 심사위원회의 위원
제25조의3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제30조의2 인사교류
제41조 휴직자·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제46조 실비보상 등
제47조 복무 선서
제58조 집단행위의 금지
제59조 위임규정
제77조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제78조 제안제도
제79조 표창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조례 위임사항

제26조 사무의 위임·위탁 등
제29조의3 시·도의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
제30조 보조기관
제32조 교육기관의 설치
제33조 공무원의 배치
제35조 교육장의 분장 사무
제40조 특별부과금의 부과·징수
제41조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제50조의2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

<p>▶ 「지방문화원 진흥법」 조례 위임사항 제19조 조례의 제정</p>
<p>▶ 「지방세기본법」 조례 위임사항 제 5 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0조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제30조 서류송달의 방법 제33조 공시송달 제65조 관허사업의 제한 제67조 도세 징수의 위임 제72조 교부금전의 예탁 제95조 체납처분 유예 제106조 납세자 권리보호 제138조 포상금의 지급 제140조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143조 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p>
<p>▶ 「지방세법」 조례 위임사항 제10조 과세표준 제14조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제27조 과세표준 제28조 세율 제34조 세율 제35조 신고납부 등 제44조 장부 비치의 의무 제78조 세율 제81조 세율 제84조 신고의무 제84조의3 세율 제84조의7 신고의무 제92조 세율 제103조의3 세율 제103조의20 세율</p>

제111조 세율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제113조 세율적용
제115조 납기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147조 부과·징수
제151조 과세표준과 세율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조례 위임사항을 정리하여 단권화된 조례 입안 매뉴얼에 모아서 제공하는 것은 자치법규 입안 지원에 관하여 긍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제2편 제1장 총칙규정 ‘2. 목적규정’ 중 예시 규정 정비안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66면에서는 자치조례의 목적을 규정하는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다) 직접 목적만을 규정하는 방식”에 대하여 “이 방식은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목적규정에서 직접 목적만을 규정하는 방식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입법례로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예시로 들고 있는데, 예시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입법례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화성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명과 달리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조례의 목적규정을 예시로 들고 있다. 설명에 적합하게 상위법령과 관계없이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에 직접 목적만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사례를 들어주도록 정비가 필요하다.

3.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제2편 제1장 총칙규정 ‘8.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 중 유의사항 관련 정비안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82면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유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유의사항으로 “자치법규는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규정을 둘 수 없으므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둘 때에는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보다 우선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둘 때 주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자치법규의 사례를 두고 있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을 둘 때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 특히 잘못된 사례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조례의 사례를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아래의 조례의 경우 조례와 관계된 상위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잘못된 조례 입안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시를 줌으로써 조례 입안시 유의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잘못 규정된 조례 예시 >

이 조례에 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〇〇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4.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제2편 제2장 본칙규정 ‘3. 공유재산관계’ 관련 정비안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102면에서는 공유재산법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공유재산법은 이 책자 발간 이후인 2014년 1월 7일과 2015년 7월 21일 개정된 바 있다.¹⁸⁾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14.1.7. 일부개정 법률 제12201호>의 주요내용

- 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할 경우 지명경쟁의 방법을 도입하도록 함(제20조제2항).
- 나.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과 갱신 사용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함(제21조제1항 및 제3항).
- 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 라. 일반재산의 경우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기준의 규정방식을 전환함(제36조제1항).
- 마.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들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의 경우 그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변상금 징수유예제도를 도입함(제81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15.1.20. 일부개정 법률 제13017호>의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세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제10조제2항 신설).
- 나. 공유재산심의회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사용료 감면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인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도록 함(제16조).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검색(2016. 6.1.자)

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따른 계약방법을 원칙적으로 일반입찰로 하되,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특허권·저작권 등 지식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방법, 허가 기간, 사용료 및 감면 등 지식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도록 함(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 신설).

위와 같은 공유재산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정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유재산법과 관련된 조례들은 지방자치 행정에 있어서 주요한 조례들이므로 새로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이 제공된다면 조례 입안 전문가들이 입안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5.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제2편 제2장 본칙규정 ‘6. 위원회’ 관련 정비안

자치법규에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매우 많다. 상위법령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조례로 위임한 경우도 있으며, 조례에서 창설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각각의 사례에 맞게 실제 조례를 들어 설명하는 방식으로 위원회에 관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정비한다면 보다 참고하기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들은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많은 수의 조례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좀 더 세밀하게 정비하여 설명한다면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성하는 위원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예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 조례 조문 예시 >

제00조(위원회의 구성) 000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제3편 자치법규의 체제 및 문장작성의 원칙 관련 정비안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제3편에서는 자치법규의 체제 및 문장작성의 원칙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3편에서는 관련하여 사례를 법령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 조례를 사례로 들어 설명해준다면 보다 참고하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자 249면부터 251면에서는 법령안 작성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실제 내용에서는 조례와 법령의 내용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예시를 조례로 통일하여 제시하는 것이 이해를 돕는데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3편 제3장은 법령문장 작성 원칙을 소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례를 법령의 입법례로 소개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발전 및 자치입법의 활성화로 많은 관련 조례의 사례가 있으므로 법령이 아닌 조례를 사례로 들어 설명해준다면 보다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보고서

차현숙,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I-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조례 입법평가 모범조례(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행정안전부, 「조례 입법 실무」, 행정안전부, 2013.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www.elis.go.kr

법 령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경기도조례 제4677호, 2014.1.10. 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부록1] 정성조사 질문지

주제 :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 정비를 위한 전문가조사”

1. 조사개요 설명

- 이 설문은 한국법제연구원 2016년 입법평가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예정인 수시과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축적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 정비를 위한 전문가조사입니다.
- 함께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작성하시는 칸이 모자라는 경우, 칸을 복사해서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내주신 의견은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연구위원에게 연락 주십시오.

2. 주요 질문 I

- (1) 자치법규 입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거나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 직접.간접적으로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 (2) 자치법규 입안 지원 시 어떠한 보조 자료를 활용하시는지요?
- (3)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입안에 도움이 되는 기준을 책자 형태(행자부: 자치법규 입법실무, 법제처: 주제별.조문별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평소 업무에 이 책자들을 활용하시는지요?
A 1) 자주 활용한다 → 어떤 면에서 활용하시는지요? 업무에 어떻게 도움을 받으시는지요?

- (4)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입법실무”는 2012년 말에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자 제3장은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및 기준에 대하여, 제4장에서는 자치법규의 입안형식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67~102pp) 자치법규 입안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을 적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 책자의 제3장과 제4장의 내용은 자치법규 입안에 필요한 사항을 망라하여 담고 있는지요? 부족하다면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까요?
- (5) 법제처의 “주제별.조문별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은 2013년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행정자치부의 책자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자치법규 입안 시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 이 책자의 제2편은 세부 입안기준에 대하여 적고 있습니다.
 - 총칙규정, 본칙규정, 부칙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칙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조.출연, 공유재산관계, 기금, 사용료.수수료, 위원회, 행정절차, 법인.공기업,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 책자의 세부 입안기준은 자치법규 입안에 필요한 사항을 망라하여 담고 있는지요?
 - 부족하다면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까요?
 - 이 책자의 제3편은 자치법규의 체제 및 문장작성의 원칙에 관하여 적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다양한 법령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의 방식이 조례 입안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6) 최근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등 중요한 법령들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자치법규 입안과 관련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변화에 대하여 위의 책자들을 활용하여 입안 지원이 가능한지요? 부족하다면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까요?
- (7) 새롭게 조례 입안심사기준을 마련한다면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8) 그 밖에 조례 입안심사기준을 마련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요.

3. 주요질문 II

- (1) 입안 형식 중에 법령에서 대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을 거의 유사하게 조례로 제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이러한 조례 입안 방식에 대하여 반대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로 조례의 완결성을 이유로 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2) 조례 입안 매뉴얼을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 제공)과 유사하게 조례에도 그렇게 풍성하게 해서 실제 조례 사례들을 가지고 만들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제공을 하는 방식이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 (3) 그 밖에 자유롭게 자치법규 입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요.

감사합니다.

[부록2] 정량조사 질문지

--	--	--	--	--

자치법규(조례) 입안심사기준 정비를 위한 전문가조사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한국리서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 정비를 위한 전문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한국법제연구원 2016년 입법평가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예정인 수시과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축적하고자 진행하는 조사입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오직 통계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귀하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됨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에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5월

조사 책임	한국법제연구원 책임 연구자: 차현숙 박사
조사 담당	(주)한국리서치 담당자: 김기주 이사

SQ1. 성별	1. 남성 2. 여성
SQ2. 성별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이상
SQ3. 현재 담당 업무	현재 담당업무는 무엇입니까? _____
SQ4. 담당업무 종사 기간	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 은 얼마나 되십니까? 1. 3년 미만 2. 3년이상 5년미만 3. 5년 이상 10년 미만 4. 10년 이상
SQ5. 근무 지역	현재 근무 지역은 어디입니까? _____

문6. 현재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서 자치법규(조례) 입안에 도움이 되는 기준을 자치법규(조례) 입안 실무, 주제별·조문별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 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들을 얼마나 활용하시는지요?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별로 활용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많이 활용한다	매우 많이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6-1. (문6의 ④,⑤번 응답자만) 많이 활용하시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자치법규(조례) 입안 혹은 제·개정 시 형식이나 원칙, 체계 등을 잘 알 수 있어서
- ② 법령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잘되어 있어서
- ③ 다양한 사례가 잘 제시되어 있어서
- ④ 기본적인 작성 방법 및 인용 방법 등이 잘 설명되어 있어서
- ⑤ 기타 (적어주세요:)

문6-2. (문6의 ①,②번 응답자만) 별로 활용하지 않으시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개정이 되지 않아 현재의 변경된 상황을 잘 반영하지 않고 있어서
- ② 형식이나 용어 등의 설명이 부족해서
- ③ 다양한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 ④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서
- ⑤ 기타 (적어주세요:)

문7. (문6의 ②, ③, ④, ⑤ 응답자만) 다음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의 내용 중 활용하신 부분을 모두 말씀해 주세요.

- ① 자치법규(조례) 입안의 기본 원칙
- ② 세부 입안 기준(총칙, 본칙, 부칙 규정)
- ③ 자치법규의 체계
- ④ 자치법규의 입법 절차 및 기준
- ⑤ 자치법규의 입안 형식
- ⑥ 자치법규 문장 작성 원칙
- ⑦ 기타 (적어주세요:)

문8.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을 어느 정도나 자주 이용하시나요?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잘 이용하지 않는 편이다	자치법규(조례) 입안 시 필요할 때만 이용한다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마다 항상 이용한다
① → 문8-1로	② → 문8-1로	③ → 문9로	④ → 문9로

문8-1. (문8에서 ①, ② 응답자만)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입력해주세요: _____)

문9. 다음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의 내용이 얼마나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각 항목별로 실용적인 정도에 대해 평가해주시고, 실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신 항목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자세히 기입해 주세요

항 목	전혀 실용적이지 않다	실용적이지 않다	보통이다	실용적인 편이다	매우 실용적이다
1) 자치법규(조례) 입안의 기본 원칙	①	②	③	④	⑤
(1) (1)에서 ①, ② 응답자만 실용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신 사유를 자세하게 기입해주세요 :					
2) 세부 입안 기준(총칙, 본칙, 부칙 규정)	①	②	③	④	⑤
(2) (2)에서 ①, ② 응답자만 실용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신 사유를 자세하게 기입해주세요 :					
3) 자치법규의 체계	①	②	③	④	⑤
(3) (3)에서 ①, ② 응답자만 실용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신 사유를 자세하게 기입해주세요 :					
4) 자치법규의 입안 절차 및 기준	①	②	③	④	⑤
(4) (4)에서 ①, ② 응답자만 실용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신 사유를 자세하게 기입해주세요 :					
5) 자치법규의 입안 형식	①	②	③	④	⑤
(5) (5)에서 ①, ② 응답자만 실용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신 사유를 자세하게 기입해주세요 :					
6) 자치법규의 문장 작성 원칙	①	②	③	④	⑤
(6) (6)에서 ①, ② 응답자만 실용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신 사유를 자세하게 기입해주세요 :					

문9-1.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 중 개정이나 보완이 시급한 부분은 어디인가요?

항 목	개정 및 보완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한 편이다	개정 및 보완이 꼭 필요하다
(1) 자치법규(조례) 입안의 기본 원칙	①	②	③	④	⑤
1) (1)에서 ④, ⑤ 응답자만) 구체적으로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을 기입해주세요 :					
(2) 세부 입안 기준(총칙, 본칙, 부칙 규정)	①	②	③	④	⑤
2) (2)에서 ④, ⑤ 응답자만) 구체적으로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을 기입해주세요 :					
(3) 자치법규의 체계	①	②	③	④	⑤
3) (3)에서 ④, ⑤ 응답자만) 구체적으로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을 기입해주세요 :					
(4) 자치법규의 입안 절차 및 기준	①	②	③	④	⑤
4) (4)에서 ④, ⑤ 응답자만) 구체적으로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을 기입해주세요 :					
(5) 자치법규의 입안 형식	①	②	③	④	⑤
5) (5)에서 ④, ⑤ 응답자만) 구체적으로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을 기입해주세요 :					
(6) 자치법규의 문장 작성 원칙	①	②	③	④	⑤
6) (6)에서 ④, ⑤ 응답자만) 구체적으로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을 기입해주세요 :					

문10.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입법 실무'는 2012년 말에 발간되었습니다. 자치법규(조례) 입안 실무에서 다루고 있는 자치법규(조례) 입법 절차 및 기준과, 자치법규의 입안형식이 자치 법규 입안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별로 다루고 있지 않다	보통이다	대부분 다루고 있다	모두 다루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11. 법제처의 '주제별.조문별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 또한 2013년에 발간되었는데요, 이 책자의 세부 입안 기준은 자치법규(조례) 입안에 필요한 사항을 망라해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별로 다루고 있지 않다	보통이다	대부분 다루고 있다	모두 다루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12. 법제처의 '주제별.조문별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에서 다루고 있는 자치법규의 체제 및 문장작성의 원칙에서는 다양한 법령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이 실제 조례 입안 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다소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문13. 최근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해 자치법규(조례) 입안과 관련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입법 실무', '주제별.조문별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이 입안 지원 실무에 도움이 되고 있나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다소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문14. 선생님께서는 지방자치 입법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입법 실무」, 「주제별.조문별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개정해야 한다면, 개정 및 보완이 몇 년 주기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① 1년
- ② 2년
- ③ 3년
- ④ 4년
- ⑤ 5년 이상

문15. 새롭게 조례 입안심사기준 마련 시 가장 중요하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말씀해주세요.

1순위: _____ , 2순위: _____ , 3순위: _____

- ① 다양한 세부 입안 기준 관련 조례 예시
- ② 조례 입안 심사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예시
- ③ 주로 사용되는 입안 기준의 구체적 제시
- ④ 변화된 입안 기준과 기존 기준의 비교 및 차이점 제시
- ⑤ 관례·해석례 등 참고 자료 제시

문16. 법령의 내용을 조례로 반복하는 자치법규의 입안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① 완결성과 조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법령과의 중복은 필요하다
- ② 지역의 특수성 및 자치입법권의 확대를 고려해 법령에서는 간소하게 다루고, 자세한 내용을 조례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17. 실제 조례 사례 위주의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제공이 필요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18.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개편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제공한다면 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① 법제처, 행정자치부 등에서 주관하는 교육장 방문 교육
- ② 지자체별 순회교육
- ③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부 록

문19.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개편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제공한다면 교육시간은 얼마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① 8시간(1일)
- ② 16시간(2일)
- ③ 24시간(3일)
- ④ 3일 이상
- ⑤ 기타 (적어주세요:)

♣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3] 정량조사 통계표

[표 1] 자치법규입안기준매뉴얼 인지여부

[문1] 자치법규(조례) 입안의 기준이 되는 매뉴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알고 있다
▣ 전체 ▣	(100)	100.0
성별		
남성	(67)	100.0
여성	(33)	100.0
연령		
30대	(24)	100.0
40대	(47)	100.0
50대 이상	(29)	100.0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100.0
교육	(6)	100.0
규제심사	(6)	100.0
입법지원	(53)	100.0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100.0
3-5년	(17)	100.0
5-10년	(10)	100.0
10년이상	(10)	100.0
현근무지역		
서울	(10)	100.0
경기/인천	(21)	100.0
대전/세종/충청	(13)	100.0
대구/경북	(14)	100.0
부산/울산/경남	(9)	100.0
광주/전라	(17)	100.0
강원/제주	(16)	100.0

[표 2] 자치법규입안매뉴얼 내용 인지정도

[문2]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단위 : %)

Base=자치법규 매뉴얼 인지자	사례수 (명)	모르는 편이다	보통 이다	알고 있는 편이다	매우 잘알고 있다	Top2	Bot2	평 균
▣ 전체 ▣	(100)	9.0	23.0	48.0	20.0	68.0	9.0	3.8
성별								
남성	(67)	6.0	22.4	50.7	20.9	71.6	6.0	3.9
여성	(33)	15.2	24.2	42.4	18.2	60.6	15.2	3.6
연령								
30대	(24)	8.3	37.5	33.3	20.8	54.2	8.3	3.7
40대	(47)	10.6	17.0	59.6	12.8	72.3	10.6	3.7
50대 이상	(29)	6.9	20.7	41.4	31.0	72.4	6.9	4.0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5.7	14.3	48.6	31.4	80.0	5.7	4.1
교육	(6)	16.7	16.7	66.7	0.0	66.7	16.7	3.5
규제심사	(6)	33.3	0.0	50.0	16.7	66.7	33.3	3.5
입법지원	(53)	7.5	32.1	45.3	15.1	60.4	7.5	3.7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9.5	25.4	50.8	14.3	65.1	9.5	3.7
3-5년	(17)	5.9	23.5	41.2	29.4	70.6	5.9	3.9
5-10년	(10)	0.0	20.0	50.0	30.0	80.0	0.0	4.1
10년이상	(10)	20.0	10.0	40.0	30.0	70.0	20.0	3.8
현근무지역								
서울	(10)	0.0	30.0	60.0	10.0	70.0	0.0	3.8
경기/인천	(21)	0.0	9.5	47.6	42.9	90.5	0.0	4.3
대전/세종/충청	(13)	7.7	23.1	46.2	23.1	69.2	7.7	3.8
대구/경북	(14)	28.6	28.6	42.9	0.0	42.9	28.6	3.1
부산/울산/경남	(9)	11.1	0.0	66.7	22.2	88.9	11.1	4.0
광주/전라	(17)	5.9	47.1	41.2	5.9	47.1	5.9	3.5
강원/제주	(16)	12.5	18.8	43.8	25.0	68.8	12.5	3.8

[표 3] 자치법규입안매뉴얼 사전안내 및 교육 여부

[문3] 자치법규(조례) 입안 시 매뉴얼 이용·활용에 대한 사전 안내나 교육이 있었나요?

(단위 : %)

Base=자치법규 매뉴얼 인지자	사례수 (명)	있었다	없었다
▣ 전체 ▣	(100)	56.0	44.0
성별			
남성	(67)	59.7	40.3
여성	(33)	48.5	51.5
연령			
30대	(24)	45.8	54.2
40대	(47)	53.2	46.8
50대 이상	(29)	69.0	31.0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77.1	22.9
교육	(6)	0.0	100.0
규제심사	(6)	66.7	33.3
입법지원	(53)	47.2	52.8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55.6	44.4
3-5년	(17)	64.7	35.3
5-10년	(10)	60.0	40.0
10년이상	(10)	40.0	60.0
현근무지역			
서울	(10)	40.0	60.0
경기/인천	(21)	71.4	28.6
대전/세종/충청	(13)	53.8	46.2
대구/경북	(14)	50.0	50.0
부산/울산/경남	(9)	66.7	33.3
광주/전라	(17)	47.1	52.9
강원/제주	(16)	56.3	43.8

[표 3-1] 자치법규매뉴얼 교육 주체

[문3-1] 있었다면 교육의 주체는 어디였나요?

(단위 : %)

Base=자치법규매뉴얼 사전교육 경험자	사례수 (명)	소속기관 (부서)	법제처	행정자치부	책 자
▣ 전체 ▣	(56)	30.4	64.3	1.8	3.6
성별					
남성	(40)	30.0	62.5	2.5	5.0
여성	(16)	31.3	68.8	0.0	0.0
연령					
30대	(11)	36.4	63.6	0.0	0.0
40대	(25)	32.0	60.0	4.0	4.0
50대 이상	(20)	25.0	70.0	0.0	5.0
담당업무					
법제업무	(27)	22.2	74.1	0.0	3.7
규제심사	(4)	0.0	75.0	25.0	0.0
입법지원	(25)	44.0	52.0	0.0	4.0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35)	25.7	68.6	2.9	2.9
3-5년	(11)	54.5	45.5	0.0	0.0
5-10년	(6)	16.7	66.7	0.0	16.7
10년이상	(4)	25.0	75.0	0.0	0.0
현근무지역					
서울	(4)	50.0	50.0	0.0	0.0
경기/인천	(15)	46.7	53.3	0.0	0.0
대전/세종/충청	(7)	14.3	85.7	0.0	0.0
대구/경북	(7)	14.3	57.1	14.3	14.3
부산/울산/경남	(6)	33.3	50.0	0.0	16.7
광주/전라	(8)	25.0	75.0	0.0	0.0
강원/제주	(9)	22.2	77.8	0.0	0.0

[표 4] 자치법규매뉴얼 활용경험 여부

[문4]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을 활용해 보신 경험이 있었나요?

(단위 : %)

Base=자치법규 매뉴얼 인지자	사례수 (명)	있 다	없 다
▣ 전체 ▣	(100)	83.0	17.0
성별			
남성	(67)	82.1	17.9
여성	(33)	84.8	15.2
연령			
30대	(24)	83.3	16.7
40대	(47)	85.1	14.9
50대 이상	(29)	79.3	20.7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85.7	14.3
교육	(6)	66.7	33.3
규제심사	(6)	66.7	33.3
입법지원	(53)	84.9	15.1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82.5	17.5
3-5년	(17)	94.1	5.9
5-10년	(10)	90.0	10.0
10년이상	(10)	60.0	40.0
현근무지역			
서울	(10)	90.0	10.0
경기/인천	(21)	95.2	4.8
대전/세종/충청	(13)	76.9	23.1
대구/경북	(14)	64.3	35.7
부산/울산/경남	(9)	88.9	11.1
광주/전라	(17)	88.2	11.8
강원/제주	(16)	75.0	25.0

[표 5] 활용 자료 유형

[문5] 자치법규(조례) 입안 지원 시 어떤 자료를 이용하시는지요?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단위 : %)

Base=자치법규매뉴 활용경험자	사례수 (명)	법제처 행정 자치부 자료	법제처 행정 자치부 온라인 서비스	법제처 해석례	관련 판례	타 시도 입법 사례	관련 현황 자료	입법 정비 방안 사례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법령 문장 작성 원칙
▣ 전체 ▣	(83)	85.5	44.6	60.2	45.8	67.5	2.4	1.2	1.2	1.2
성별										
남성	(55)	80.0	56.4	65.5	52.7	69.1	1.8	1.8	1.8	1.8
여성	(28)	96.4	21.4	50.0	32.1	64.3	3.6	0.0	0.0	0.0
연령										
30대	(20)	80.0	40.0	70.0	55.0	75.0	5.0	5.0	0.0	0.0
40대	(40)	90.0	47.5	57.5	42.5	70.0	2.5	0.0	2.5	0.0
50대 이상	(23)	82.6	43.5	56.5	43.5	56.5	0.0	0.0	0.0	4.3
담당업무										
법제업무	(30)	96.7	50.0	66.7	43.3	56.7	0.0	0.0	3.3	0.0
교육	(4)	100.0	50.0	0.0	50.0	25.0	0.0	25.0	0.0	0.0
규제심사	(4)	75.0	75.0	50.0	75.0	75.0	0.0	0.0	0.0	0.0
입법지원	(45)	77.8	37.8	62.2	44.4	77.8	4.4	0.0	0.0	2.2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52)	88.5	38.5	57.7	40.4	61.5	1.9	0.0	0.0	0.0
3-5년	(16)	75.0	56.3	68.8	56.3	87.5	6.3	0.0	6.3	0.0
5-10년	(9)	88.9	55.6	66.7	55.6	66.7	0.0	11.1	0.0	11.1
10년이상	(6)	83.3	50.0	50.0	50.0	66.7	0.0	0.0	0.0	0.0
현근무지역										
서울	(9)	100.0	55.6	55.6	66.7	66.7	11.1	11.1	0.0	0.0
경기/인천	(20)	85.0	50.0	80.0	65.0	70.0	5.0	0.0	0.0	0.0
대전/세종/충청	(10)	80.0	30.0	50.0	40.0	60.0	0.0	0.0	10.0	0.0
대구/경북	(9)	88.9	33.3	55.6	22.2	77.8	0.0	0.0	0.0	0.0
부산/울산/경남	(8)	87.5	37.5	62.5	25.0	37.5	0.0	0.0	0.0	12.5
광주/전라	(15)	80.0	40.0	46.7	33.3	73.3	0.0	0.0	0.0	0.0
강원/제주	(12)	83.3	58.3	58.3	50.0	75.0	0.0	0.0	0.0	0.0

[표 6] 자치법규 입안실무, 매뉴얼 활용 정도

[문6] 현재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서 자치법규(조례) 입안에 도움이 되는 기준을 자치법규(조례) 입안 실무, 주제별·조문별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 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들을 얼마나 활용하시는지요?

(단위 : %)

Base=자치법규 매뉴얼 인지자	사례수 (명)	전혀 활용 하지 않는다	별로 활용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많이 활용 한다	매우 많이 활용 한다	Top2	Bot2	평 균
▣ 전체 ▣	(100)	1.0	15.0	29.0	48.0	7.0	55.0	16.0	3.5
성별									
남성	(67)	0.0	11.9	34.3	44.8	9.0	53.7	11.9	3.5
여성	(33)	3.0	21.2	18.2	54.5	3.0	57.6	24.2	3.3
연령									
30대	(24)	4.2	16.7	41.7	37.5	0.0	37.5	20.8	3.1
40대	(47)	0.0	14.9	29.8	46.8	8.5	55.3	14.9	3.5
50대 이상	(29)	0.0	13.8	17.2	58.6	10.3	69.0	13.8	3.7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2.9	2.9	20.0	60.0	14.3	74.3	5.7	3.8
교육	(6)	0.0	16.7	50.0	33.3	0.0	33.3	16.7	3.2
규제심사	(6)	0.0	33.3	33.3	33.3	0.0	33.3	33.3	3.0
입법지원	(53)	0.0	20.8	32.1	43.4	3.8	47.2	20.8	3.3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1.6	14.3	22.2	57.1	4.8	61.9	15.9	3.5
3-5년	(17)	0.0	11.8	35.3	41.2	11.8	52.9	11.8	3.5
5-10년	(10)	0.0	0.0	70.0	10.0	20.0	30.0	0.0	3.5
10년이상	(10)	0.0	40.0	20.0	40.0	0.0	40.0	40.0	3.0
현근무지역									
서울	(10)	0.0	40.0	50.0	10.0	0.0	10.0	40.0	2.7
경기/인천	(21)	0.0	0.0	38.1	57.1	4.8	61.9	0.0	3.7
대전/세종/충청	(13)	0.0	7.7	30.8	53.8	7.7	61.5	7.7	3.6
대구/경북	(14)	7.1	21.4	21.4	50.0	0.0	50.0	28.6	3.1
부산/울산/경남	(9)	0.0	22.2	0.0	66.7	11.1	77.8	22.2	3.7
광주/전라	(17)	0.0	11.8	23.5	58.8	5.9	64.7	11.8	3.6
강원/제주	(16)	0.0	18.8	31.3	31.3	18.8	50.0	18.8	3.5

[표 6-1] 많이 활용하는 주된 이유

[문6-1] 많이 활용하시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단위 : %)

Base=자치법규매뉴얼 적극활용자	사례수 (명)	자치법규 입안 혹은 제·개정 형식·원칙· 체계 참고	법령 용어 설명 참고	다양한 사례 제시 참고	기본적인 작성방법 및 인용 방법 참고
▣ 전체 ▣	(55)	65.5	3.6	12.7	18.2
성별					
남성	(36)	63.9	2.8	11.1	22.2
여성	(19)	68.4	5.3	15.8	10.5
연령					
30대	(9)	33.3	0.0	11.1	55.6
40대	(26)	69.2	0.0	19.2	11.5
50대 이상	(20)	75.0	10.0	5.0	10.0
담당업무					
법제업무	(26)	69.2	3.8	15.4	11.5
교육	(2)	0.0	0.0	50.0	50.0
규제심사	(2)	100.0	0.0	0.0	0.0
입법지원	(25)	64.0	4.0	8.0	24.0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39)	61.5	5.1	15.4	17.9
3-5년	(9)	55.6	0.0	11.1	33.3
5-10년	(3)	100.0	0.0	0.0	0.0
10년이상	(4)	100.0	0.0	0.0	0.0
현근무지역					
서울	(1)	100.0	0.0	0.0	0.0
경기/인천	(13)	46.2	0.0	15.4	38.5
대전/세종/충청	(8)	87.5	12.5	0.0	0.0
대구/경북	(7)	57.1	0.0	42.9	0.0
부산/울산/경남	(7)	85.7	0.0	14.3	0.0
광주/전라	(11)	72.7	0.0	9.1	18.2
강원/제주	(8)	50.0	12.5	0.0	37.5

[표 6-2] 별로 활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문6-2] 별로 활용하지 않으시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단위 : %)

Base=자치법규매뉴얼 비활용자	사례수 (명)	현재의 변경된 상황 반영 못해서	다양한 사례가 없어서	실무에 필요한 내용이 없어서	굳이 안 봐도 돼서	매뉴얼 접하지 못해서	필요한 내용만 찾기 어려움	조례 제개정 작업 기회가 없어서
▣ 전체 ▣	(16)	18.8	31.3	18.8	12.5	6.3	6.3	6.3
성별								
남성	(8)	25.0	25.0	12.5	12.5	0.0	12.5	12.5
여성	(8)	12.5	37.5	25.0	12.5	12.5	0.0	0.0
연령								
30대	(5)	20.0	0.0	40.0	0.0	20.0	20.0	0.0
40대	(7)	28.6	57.1	14.3	0.0	0.0	0.0	0.0
50대 이상	(4)	0.0	25.0	0.0	50.0	0.0	0.0	25.0
담당업무								
법제업무	(2)	0.0	0.0	0.0	50.0	50.0	0.0	0.0
교육	(1)	0.0	100.0	0.0	0.0	0.0	0.0	0.0
규제심사	(2)	50.0	0.0	50.0	0.0	0.0	0.0	0.0
입법지원	(11)	18.2	36.4	18.2	9.1	0.0	9.1	9.1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10)	10.0	30.0	20.0	10.0	10.0	10.0	10.0
3-5년	(2)	100.0	0.0	0.0	0.0	0.0	0.0	0.0
10년이상	(4)	0.0	50.0	25.0	25.0	0.0	0.0	0.0
현근무지역								
서울	(4)	50.0	25.0	0.0	25.0	0.0	0.0	0.0
대전/세종/충청	(1)	0.0	100.0	0.0	0.0	0.0	0.0	0.0
대구/경북	(4)	0.0	50.0	0.0	0.0	25.0	25.0	0.0
부산/울산/경남	(2)	50.0	0.0	0.0	50.0	0.0	0.0	0.0
광주/전라	(2)	0.0	50.0	50.0	0.0	0.0	0.0	0.0
강원/제주	(3)	0.0	0.0	66.7	0.0	0.0	0.0	33.3

[표 7] 자치법규매뉴얼 활용한 부분

[문7] 다음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의 내용 중 활용하신 부분을 모두 말씀해 주세요.

(단위 : %)

Base=자치법규매뉴얼 활용자	사례수 (명)	자치 법규 입안 기본 원칙	세부 입안 기준	자치 법규 체제	자치 법규 입법 절차 및 기준	자치 법규 입안 형식	자치 법규 문장 작성 원칙	용어 활용	활용해 볼 기회 없었음
▣ 전체 ▣	(99)	63.6	62.6	43.4	57.6	68.7	64.6	2.0	1.0
성별									
남성	(67)	65.7	65.7	47.8	58.2	68.7	64.2	3.0	1.5
여성	(32)	59.4	56.3	34.4	56.3	68.8	65.6	0.0	0.0
연령									
30대	(23)	47.8	56.5	39.1	34.8	56.5	78.3	0.0	0.0
40대	(47)	68.1	63.8	36.2	57.4	66.0	53.2	2.1	0.0
50대 이상	(29)	69.0	65.5	58.6	75.9	82.8	72.4	3.4	3.4
담당업무									
법제업무	(34)	76.5	70.6	55.9	73.5	73.5	70.6	2.9	0.0
교육	(6)	50.0	50.0	33.3	16.7	50.0	33.3	0.0	0.0
규제심사	(6)	33.3	50.0	16.7	83.3	50.0	50.0	0.0	0.0
입법지원	(53)	60.4	60.4	39.6	49.1	69.8	66.0	1.9	1.9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2)	67.7	59.7	40.3	64.5	71.0	64.5	1.6	1.6
3-5년	(17)	47.1	58.8	41.2	35.3	76.5	82.4	5.9	0.0
5-10년	(10)	70.0	80.0	70.0	40.0	60.0	70.0	0.0	0.0
10년이상	(10)	60.0	70.0	40.0	70.0	50.0	30.0	0.0	0.0
현근무지역									
서울	(10)	90.0	70.0	30.0	30.0	50.0	60.0	0.0	0.0
경기/인천	(21)	66.7	61.9	47.6	57.1	81.0	61.9	0.0	0.0
대전/세종/충청	(13)	69.2	76.9	38.5	61.5	53.8	69.2	15.4	0.0
대구/경북	(13)	69.2	61.5	38.5	76.9	61.5	61.5	0.0	0.0
부산/울산/경남	(9)	55.6	66.7	77.8	77.8	77.8	77.8	0.0	0.0
광주/전라	(17)	58.8	52.9	41.2	64.7	76.5	58.8	0.0	0.0
강원/제주	(16)	43.8	56.3	37.5	37.5	68.8	68.8	0.0	6.3

[표 8] 자치법규 입안매뉴얼 이용정도

[문8]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을 어느 정도나 자주 이용하시나요?

(단위 : %)

Base=자치법규 매뉴얼 인지도	사례수 (명)	전혀 이용 하지 않는다	잘 이용 하지 않는 편이다	자치 법규 입안 시 필요할 때만 이용 한다	자치 법규를 입안할 때마다 항상 이용 한다	Top2	Bot2	평 균
▣ 전체 ▣	(100)	1.0	13.0	69.0	17.0	86.0	14.0	3.0
성별								
남성	(67)	0.0	13.4	70.1	16.4	86.6	13.4	3.0
여성	(33)	3.0	12.1	66.7	18.2	84.8	15.2	3.0
연령								
30대	(24)	4.2	16.7	75.0	4.2	79.2	20.8	2.8
40대	(47)	0.0	12.8	68.1	19.1	87.2	12.8	3.1
50대 이상	(29)	0.0	10.3	65.5	24.1	89.7	10.3	3.1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2.9	5.7	65.7	25.7	91.4	8.6	3.1
교육	(6)	0.0	33.3	50.0	16.7	66.7	33.3	2.8
규제심사	(6)	0.0	33.3	33.3	33.3	66.7	33.3	3.0
입법지원	(53)	0.0	13.2	77.4	9.4	86.8	13.2	3.0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1.6	9.5	66.7	22.2	88.9	11.1	3.1
3-5년	(17)	0.0	11.8	76.5	11.8	88.2	11.8	3.0
5-10년	(10)	0.0	10.0	80.0	10.0	90.0	10.0	3.0
10년이상	(10)	0.0	40.0	60.0	0.0	60.0	40.0	2.6
현근무지역								
서울	(10)	0.0	30.0	60.0	10.0	70.0	30.0	2.8
경기/인천	(21)	0.0	4.8	85.7	9.5	95.2	4.8	3.0
대전/세종/충청	(13)	0.0	7.7	69.2	23.1	92.3	7.7	3.2
대구/경북	(14)	7.1	21.4	57.1	14.3	71.4	28.6	2.8
부산/울산/경남	(9)	0.0	11.1	55.6	33.3	88.9	11.1	3.2
광주/전라	(17)	0.0	0.0	82.4	17.6	100.0	0.0	3.2
강원/제주	(16)	0.0	25.0	56.3	18.8	75.0	25.0	2.9

[표 8-1]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문8-1]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위 : %)

Base=자치법규 매뉴얼 비이용자	사례수 (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필요한 사항이 없음	현재 업무 숙지중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14)	64.3	28.6	7.1
성별				
남성	(9)	66.7	33.3	0.0
여성	(5)	60.0	20.0	20.0
연령				
30대	(5)	40.0	60.0	0.0
40대	(6)	83.3	16.7	0.0
50대 이상	(3)	66.7	0.0	33.3
담당업무				
법제업무	(3)	66.7	0.0	33.3
교육	(2)	100.0	0.0	0.0
규제심사	(2)	50.0	50.0	0.0
입법지원	(7)	57.1	42.9	0.0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7)	42.9	42.9	14.3
3-5년	(2)	50.0	50.0	0.0
5-10년	(1)	100.0	0.0	0.0
10년이상	(4)	100.0	0.0	0.0
현근무지역				
서울	(3)	66.7	33.3	0.0
경기/인천	(1)	100.0	0.0	0.0
대전/세종/충청	(1)	100.0	0.0	0.0
대구/경북	(4)	75.0	25.0	0.0
부산/울산/경남	(1)	0.0	100.0	0.0
강원/제주	(4)	50.0	25.0	25.0

[표 9-1)] 실용성 평가_자치법규 입안의 기본 원칙

[문9-1)] 다음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의 내용이 얼마나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_자치법규 입안의 기본 원칙

(단위 : %)

Base=자치법규 매뉴얼 인지자	사례수 (명)	실용 적이지 않다	보통 이다	실용 적인 편이다	매우 실용 적이다	Top2	Bot2	평 균
▣ 전체 ▣	(100)	3.0	19.0	58.0	20.0	78.0	3.0	4.0
성별								
남성	(67)	4.5	17.9	52.2	25.4	77.6	4.5	4.0
여성	(33)	0.0	21.2	69.7	9.1	78.8	0.0	3.9
연령								
30대	(24)	0.0	16.7	75.0	8.3	83.3	0.0	3.9
40대	(47)	6.4	21.3	55.3	17.0	72.3	6.4	3.8
50대 이상	(29)	0.0	17.2	48.3	34.5	82.8	0.0	4.2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0.0	11.4	54.3	34.3	88.6	0.0	4.2
교육	(6)	16.7	16.7	50.0	16.7	66.7	16.7	3.7
규제심사	(6)	0.0	16.7	50.0	33.3	83.3	0.0	4.2
입법지원	(53)	3.8	24.5	62.3	9.4	71.7	3.8	3.8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0.0	14.3	65.1	20.6	85.7	0.0	4.1
3-5년	(17)	0.0	35.3	41.2	23.5	64.7	0.0	3.9
5-10년	(10)	20.0	20.0	30.0	30.0	60.0	20.0	3.7
10년이상	(10)	10.0	20.0	70.0	0.0	70.0	10.0	3.6
현근무지역								
서울	(10)	0.0	30.0	50.0	20.0	70.0	0.0	3.9
경기/인천	(21)	0.0	23.8	66.7	9.5	76.2	0.0	3.9
대전/세종/충청	(13)	7.7	7.7	53.8	30.8	84.6	7.7	4.1
대구/경북	(14)	7.1	14.3	50.0	28.6	78.6	7.1	4.0
부산/울산/경남	(9)	0.0	22.2	44.4	33.3	77.8	0.0	4.1
광주/전라	(17)	5.9	17.6	64.7	11.8	76.5	5.9	3.8
강원/제주	(16)	0.0	18.8	62.5	18.8	81.3	0.0	4.0

[표 9-2] 실용성 평가_세부 입안 기준

[문9-2] 다음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의 내용이 얼마나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_세부 입안 기준

(단위 : %)

Base=자치법규 매뉴얼 인지자	사례수 (명)	실용 적이지 않다	보통 이다	실용 적인 편이다	매우 실용 적이다	Top2	Bot2	평 균
▣ 전체 ▣	(100)	4.0	26.0	47.0	23.0	70.0	4.0	3.9
성별								
남성	(67)	4.5	25.4	46.3	23.9	70.1	4.5	3.9
여성	(33)	3.0	27.3	48.5	21.2	69.7	3.0	3.9
연령								
30대	(24)	8.3	20.8	62.5	8.3	70.8	8.3	3.7
40대	(47)	4.3	31.9	42.6	21.3	63.8	4.3	3.8
50대 이상	(29)	0.0	20.7	41.4	37.9	79.3	0.0	4.2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2.9	11.4	48.6	37.1	85.7	2.9	4.2
교육	(6)	16.7	33.3	33.3	16.7	50.0	16.7	3.5
규제심사	(6)	0.0	16.7	50.0	33.3	83.3	0.0	4.2
입법지원	(53)	3.8	35.8	47.2	13.2	60.4	3.8	3.7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1.6	23.8	49.2	25.4	74.6	1.6	4.0
3-5년	(17)	5.9	23.5	41.2	29.4	70.6	5.9	3.9
5-10년	(10)	0.0	40.0	40.0	20.0	60.0	0.0	3.8
10년이상	(10)	20.0	30.0	50.0	0.0	50.0	20.0	3.3
현근무지역								
서울	(10)	10.0	60.0	10.0	20.0	30.0	10.0	3.4
경기/인천	(21)	0.0	19.0	66.7	14.3	81.0	0.0	4.0
대전/세종/충청	(13)	15.4	23.1	30.8	30.8	61.5	15.4	3.8
대구/경북	(14)	0.0	21.4	42.9	35.7	78.6	0.0	4.1
부산/울산/경남	(9)	0.0	22.2	44.4	33.3	77.8	0.0	4.1
광주/전라	(17)	0.0	29.4	58.8	11.8	70.6	0.0	3.8
강원/제주	(16)	6.3	18.8	50.0	25.0	75.0	6.3	3.9

[표 9-3] 실용성 평가_자치법규의 체제

[문9-3] 다음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의 내용이 얼마나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_자치법규의 체제

(단위 : %)

Base=자치법규 매뉴얼 인지자	사례수 (명)	실용 적이지 않다	보통 이다	실용 적인 편이다	매우 실용 적이다	Top2	Bot2	평 균
▣ 전체 ▣	(100)	2.0	29.0	50.0	19.0	69.0	2.0	3.9
성별								
남성	(67)	1.5	31.3	44.8	22.4	67.2	1.5	3.9
여성	(33)	3.0	24.2	60.6	12.1	72.7	3.0	3.8
연령								
30대	(24)	4.2	29.2	58.3	8.3	66.7	4.2	3.7
40대	(47)	2.1	31.9	48.9	17.0	66.0	2.1	3.8
50대 이상	(29)	0.0	24.1	44.8	31.0	75.9	0.0	4.1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2.9	20.0	48.6	28.6	77.1	2.9	4.0
교육	(6)	0.0	50.0	33.3	16.7	50.0	0.0	3.7
규제심사	(6)	0.0	16.7	50.0	33.3	83.3	0.0	4.2
입법지원	(53)	1.9	34.0	52.8	11.3	64.2	1.9	3.7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1.6	23.8	54.0	20.6	74.6	1.6	3.9
3-5년	(17)	0.0	35.3	41.2	23.5	64.7	0.0	3.9
5-10년	(10)	10.0	30.0	40.0	20.0	60.0	10.0	3.7
10년이상	(10)	0.0	50.0	50.0	0.0	50.0	0.0	3.5
현근무지역								
서울	(10)	0.0	70.0	10.0	20.0	30.0	0.0	3.5
경기/인천	(21)	4.8	28.6	57.1	9.5	66.7	4.8	3.7
대전/세종/충청	(13)	0.0	30.8	38.5	30.8	69.2	0.0	4.0
대구/경북	(14)	0.0	28.6	42.9	28.6	71.4	0.0	4.0
부산/울산/경남	(9)	0.0	22.2	44.4	33.3	77.8	0.0	4.1
광주/전라	(17)	5.9	11.8	70.6	11.8	82.4	5.9	3.9
강원/제주	(16)	0.0	25.0	62.5	12.5	75.0	0.0	3.9

[표 9-4] 실용성 평가_자치법규의 입안 절차 및 기준

[문9-4] 다음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의 내용이 얼마나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_자치법규의 입안 절차 및 기준

(단위 : %)

Base=자치법규 매뉴얼 인지자	사례수 (명)	실용 적이지 않다	보통 이다	실용 적인 편이다	매우 실용 적이다	Top2	Bot2	평 균
▣ 전체 ▣	(100)	1.0	25.0	54.0	20.0	74.0	1.0	3.9
성별								
남성	(67)	1.5	26.9	47.8	23.9	71.6	1.5	3.9
여성	(33)	0.0	21.2	66.7	12.1	78.8	0.0	3.9
연령								
30대	(24)	0.0	33.3	45.8	20.8	66.7	0.0	3.9
40대	(47)	2.1	25.5	57.4	14.9	72.3	2.1	3.9
50대 이상	(29)	0.0	17.2	55.2	27.6	82.8	0.0	4.1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0.0	22.9	48.6	28.6	77.1	0.0	4.1
교육	(6)	0.0	33.3	33.3	33.3	66.7	0.0	4.0
규제심사	(6)	0.0	0.0	50.0	50.0	100.0	0.0	4.5
입법지원	(53)	1.9	28.3	60.4	9.4	69.8	1.9	3.8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0.0	19.0	55.6	25.4	81.0	0.0	4.1
3-5년	(17)	0.0	35.3	47.1	17.6	64.7	0.0	3.8
5-10년	(10)	10.0	40.0	40.0	10.0	50.0	10.0	3.5
10년이상	(10)	0.0	30.0	70.0	0.0	70.0	0.0	3.7
현근무지역								
서울	(10)	0.0	60.0	20.0	20.0	40.0	0.0	3.6
경기/인천	(21)	0.0	33.3	47.6	19.0	66.7	0.0	3.9
대전/세종/충청	(13)	0.0	23.1	53.8	23.1	76.9	0.0	4.0
대구/경북	(14)	0.0	14.3	57.1	28.6	85.7	0.0	4.1
부산/울산/경남	(9)	0.0	11.1	55.6	33.3	88.9	0.0	4.2
광주/전라	(17)	5.9	5.9	76.5	11.8	88.2	5.9	3.9
강원/제주	(16)	0.0	31.3	56.3	12.5	68.8	0.0	3.8

[표 9-5] 실용성 평가_자치법규의 입안 형식

[문9-5] 다음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의 내용이 얼마나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_자치법규의 입안 형식

(단위 : %)

Base=자치법규 매뉴얼 인지자	사례수 (명)	실용 적이지 않다	보통 이다	실용 적인 편이다	매우 실용 적이다	Top2	Bot2	평 균
▣ 전체 ▣	(100)	1.0	17.0	59.0	23.0	82.0	1.0	4.0
성별								
남성	(67)	0.0	19.4	55.2	25.4	80.6	0.0	4.1
여성	(33)	3.0	12.1	66.7	18.2	84.8	3.0	4.0
연령								
30대	(24)	4.2	12.5	70.8	12.5	83.3	4.2	3.9
40대	(47)	0.0	17.0	57.4	25.5	83.0	0.0	4.1
50대 이상	(29)	0.0	20.7	51.7	27.6	79.3	0.0	4.1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0.0	5.7	57.1	37.1	94.3	0.0	4.3
교육	(6)	0.0	33.3	16.7	50.0	66.7	0.0	4.2
규제심사	(6)	0.0	16.7	50.0	33.3	83.3	0.0	4.2
입법지원	(53)	1.9	22.6	66.0	9.4	75.5	1.9	3.8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0.0	14.3	60.3	25.4	85.7	0.0	4.1
3-5년	(17)	5.9	23.5	35.3	35.3	70.6	5.9	4.0
5-10년	(10)	0.0	20.0	70.0	10.0	80.0	0.0	3.9
10년이상	(10)	0.0	20.0	80.0	0.0	80.0	0.0	3.8
현근무지역								
서울	(10)	10.0	30.0	40.0	20.0	60.0	10.0	3.7
경기/인천	(21)	0.0	9.5	66.7	23.8	90.5	0.0	4.1
대전/세종/충청	(13)	0.0	15.4	61.5	23.1	84.6	0.0	4.1
대구/경북	(14)	0.0	7.1	64.3	28.6	92.9	0.0	4.2
부산/울산/경남	(9)	0.0	22.2	44.4	33.3	77.8	0.0	4.1
광주/전라	(17)	0.0	23.5	58.8	17.6	76.5	0.0	3.9
강원/제주	(16)	0.0	18.8	62.5	18.8	81.3	0.0	4.0

[표 9-6] 실용성 평가_자치법규의 문장 작성 원칙

[문9-6] 다음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의 내용이 얼마나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_자치법규의 문장 작성 원칙

(단위 : %)

Base=자치법규 매뉴얼 인지자	사례수 (명)	실용 적이지 않다	보통 이다	실용 적인 편이다	매우 실용 적이다	Top2	Bot2	평 균
▣ 전체 ▣	(100)	2.0	21.0	47.0	30.0	77.0	2.0	4.1
성별								
남성	(67)	0.0	26.9	41.8	31.3	73.1	0.0	4.0
여성	(33)	6.1	9.1	57.6	27.3	84.8	6.1	4.1
연령								
30대	(24)	8.3	16.7	54.2	20.8	75.0	8.3	3.9
40대	(47)	0.0	21.3	46.8	31.9	78.7	0.0	4.1
50대 이상	(29)	0.0	24.1	41.4	34.5	75.9	0.0	4.1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0.0	8.6	51.4	40.0	91.4	0.0	4.3
교육	(6)	0.0	33.3	16.7	50.0	66.7	0.0	4.2
규제심사	(6)	0.0	16.7	33.3	50.0	83.3	0.0	4.3
입법지원	(53)	3.8	28.3	49.1	18.9	67.9	3.8	3.8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0.0	19.0	49.2	31.7	81.0	0.0	4.1
3-5년	(17)	11.8	23.5	29.4	35.3	64.7	11.8	3.9
5-10년	(10)	0.0	20.0	50.0	30.0	80.0	0.0	4.1
10년이상	(10)	0.0	30.0	60.0	10.0	70.0	0.0	3.8
현근무지역								
서울	(10)	20.0	30.0	40.0	10.0	50.0	20.0	3.4
경기/인천	(21)	0.0	9.5	61.9	28.6	90.5	0.0	4.2
대전/세종/충청	(13)	0.0	23.1	15.4	61.5	76.9	0.0	4.4
대구/경북	(14)	0.0	28.6	35.7	35.7	71.4	0.0	4.1
부산/울산/경남	(9)	0.0	22.2	33.3	44.4	77.8	0.0	4.2
광주/전라	(17)	0.0	23.5	58.8	17.6	76.5	0.0	3.9
강원/제주	(16)	0.0	18.8	62.5	18.8	81.3	0.0	4.0

[표 9-1)-1] 비실용 이유_자치법규 입안의 기본 원칙

[문9-1)-1] 실용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신 사유를 자세하게 기입해주세요
_자치법규 입안의 기본 원칙

(단위 : %)

Base=자치법규 매뉴얼 비실용 평가자	사례수 (명)	사례 제시 부족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3)	33.3	33.3	33.3
성별				
남성	(3)	33.3	33.3	33.3
연령				
40대	(3)	33.3	33.3	33.3
담당업무				
교육	(1)	100.0	0.0	0.0
입법지원	(2)	0.0	50.0	50.0
담당업무 종사기간				
5-10년	(2)	0.0	50.0	50.0
10년이상	(1)	100.0	0.0	0.0
현근무지역				
대전/세종/충청	(1)	100.0	0.0	0.0
대구/경북	(1)	0.0	0.0	100.0
광주/전라	(1)	0.0	100.0	0.0

[표 9-2)-2] 비실용 이유_세부 입안 기준

[문9-2)-2] 실용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신 사유를 자세하게 기입해주세요
_세부 입안 기준

(단위 : %)

Base=자치법규 매뉴얼 비실용 평가자	사례수 (명)	사례제시 부족	특별히 참고할 내용 없음
▣ 전체 ▣	(4)	75.0	25.0
성별			
남성	(3)	66.7	33.3
여성	(1)	100.0	0.0
연령			
30대	(2)	50.0	50.0
40대	(2)	100.0	0.0
담당업무			
법제업무	(1)	100.0	0.0
교육	(1)	100.0	0.0
입법지원	(2)	50.0	50.0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1)	0.0	100.0
3-5년	(1)	100.0	0.0
10년이상	(2)	100.0	0.0
현근무지역			
서울	(1)	100.0	0.0
대전/세종/충청	(2)	100.0	0.0
강원/제주	(1)	0.0	100.0

[표 9-3)-3] 비실용 이유_자치법규의 체제

[문9-3)-3] 실용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신 사유를 자세하게 기입해주세요
_자치법규의 체제

(단위 : %)

Base=자치법규 매뉴얼 비실용 평가자	사례수 (명)	형식적임	리뉴얼 되지 않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2)	50.0	50.0
성별			
남성	(1)	100.0	0.0
여성	(1)	0.0	100.0
연령			
30대	(1)	0.0	100.0
40대	(1)	100.0	0.0
담당업무			
법제업무	(1)	0.0	100.0
입법지원	(1)	100.0	0.0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1)	0.0	100.0
5-10년	(1)	100.0	0.0
현근무지역			
경기/인천	(1)	0.0	100.0
광주/전라	(1)	100.0	0.0

[표 9-4)-4] 비실용 이유_자치법규의 입안 절차 및 기준

[문9-4)-4] 실용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신 사유를 자세하게 기입해주세요
_자치법규의 입안 절차 및 기준

(단위 : %)

Base=자치법규 매뉴얼 비실용 평가자	사례수 (명)	리뉴얼이 안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1)	100.0
성별		
남성	(1)	100.0
연령		
40대	(1)	100.0
담당업무		
입법지원	(1)	100.0
담당업무 종사기간		
5-10년	(1)	100.0
현근무지역		
광주/전라	(1)	100.0

[표 9-5)-5] 비실용 이유_자치법규의 입안 형식

[문9-5)-5] 실용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신 사유를 자세하게 기입해주세요
_자치법규의 입안 형식

(단위 : %)

Base=자치법규 매뉴얼 비실용 평가자	사례수 (명)	궁금한 사항이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1)	100.0
성별		
여성	(1)	100.0
연령		
30대	(1)	100.0
담당업무		
입법지원	(1)	100.0
담당업무 종사기간		
3-5년	(1)	100.0
현근무지역		
서울	(1)	100.0

[표 9-6)-6] 비실용 이유_자치법규의 문장 작성 원칙

[문9-6)-6] 실용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신 사유를 자세하게 기입해주세요
_자치법규의 문장 작성 원칙

(단위 : %)

Base=자치법규 매뉴얼 비실용 평가자	사례수 (명)	궁금한 사항이 없음	사례 미흡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2)	50.0	50.0
성별			
여성	(2)	50.0	50.0
연령			
30대	(2)	50.0	50.0
담당업무			
입법지원	(2)	50.0	50.0
담당업무 종사기간			
3-5년	(2)	50.0	50.0
현근무지역			
서울	(2)	50.0	50.0

[표 9-1-1)] 개정 및 보완 필요성_자치법규 입안의 기본 원칙

[문9-1-1)]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 중 개정이나 보완이 시급한 부분은 어디인가요?
_자치법규 입안의 기본 원칙

(단위 : %)

Base=자치법규 매뉴얼 인지자	사례수 (명)	전혀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필요한 편이다	꼭 필요 하다	Top2	Bot2	평균
▣ 전체 ▣	(100)	1.0	19.0	61.0	17.0	2.0	19.0	20.0	3.0
성별									
남성	(67)	1.5	20.9	61.2	13.4	3.0	16.4	22.4	3.0
여성	(33)	0.0	15.2	60.6	24.2	0.0	24.2	15.2	3.1
연령									
30대	(24)	0.0	20.8	58.3	16.7	4.2	20.8	20.8	3.0
40대	(47)	0.0	17.0	63.8	19.1	0.0	19.1	17.0	3.0
50대 이상	(29)	3.4	20.7	58.6	13.8	3.4	17.2	24.1	2.9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0.0	20.0	60.0	17.1	2.9	20.0	20.0	3.0
교육	(6)	0.0	0.0	83.3	16.7	0.0	16.7	0.0	3.2
규제심사	(6)	0.0	33.3	33.3	33.3	0.0	33.3	33.3	3.0
입법지원	(53)	1.9	18.9	62.3	15.1	1.9	17.0	20.8	3.0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0.0	22.2	58.7	17.5	1.6	19.0	22.2	3.0
3-5년	(17)	0.0	23.5	52.9	17.6	5.9	23.5	23.5	3.1
5-10년	(10)	10.0	0.0	70.0	20.0	0.0	20.0	10.0	3.0
10년이상	(10)	0.0	10.0	80.0	10.0	0.0	10.0	10.0	3.0
현근무지역									
서울	(10)	0.0	10.0	80.0	10.0	0.0	10.0	10.0	3.0
경기/인천	(21)	0.0	14.3	47.6	33.3	4.8	38.1	14.3	3.3
대전/세종/충청	(13)	0.0	15.4	69.2	15.4	0.0	15.4	15.4	3.0
대구/경북	(14)	0.0	42.9	57.1	0.0	0.0	0.0	42.9	2.6
부산/울산/경남	(9)	11.1	11.1	44.4	33.3	0.0	33.3	22.2	3.0
광주/전라	(17)	0.0	11.8	70.6	11.8	5.9	17.6	11.8	3.1
강원/제주	(16)	0.0	25.0	62.5	12.5	0.0	12.5	25.0	2.9

[표 9-1-2)] 개정 및 보완 필요성_세부 입안 기준

[문9-1-2)]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 중 개정이나 보완이 시급한 부분은 어디인가요?
_세부 입안 기준

(단위 : %)

Base=자치법규 매뉴얼 인지자	사례수 (명)	필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필요한 편이다	꼭 필요 하다	Top2	Bot2	평 균
▣ 전체 ▣	(100)	11.0	58.0	25.0	6.0	31.0	11.0	3.3
성별								
남성	(67)	11.9	55.2	26.9	6.0	32.8	11.9	3.3
여성	(33)	9.1	63.6	21.2	6.1	27.3	9.1	3.2
연령								
30대	(24)	8.3	54.2	25.0	12.5	37.5	8.3	3.4
40대	(47)	8.5	55.3	31.9	4.3	36.2	8.5	3.3
50대 이상	(29)	17.2	65.5	13.8	3.4	17.2	17.2	3.0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8.6	60.0	20.0	11.4	31.4	8.6	3.3
교육	(6)	16.7	50.0	33.3	0.0	33.3	16.7	3.2
규제심사	(6)	33.3	33.3	33.3	0.0	33.3	33.3	3.0
입법지원	(53)	9.4	60.4	26.4	3.8	30.2	9.4	3.2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14.3	55.6	25.4	4.8	30.2	14.3	3.2
3-5년	(17)	5.9	52.9	23.5	17.6	41.2	5.9	3.5
5-10년	(10)	10.0	70.0	20.0	0.0	20.0	10.0	3.1
10년이상	(10)	0.0	70.0	30.0	0.0	30.0	0.0	3.3
현근무지역								
서울	(10)	0.0	70.0	20.0	10.0	30.0	0.0	3.4
경기/인천	(21)	14.3	42.9	33.3	9.5	42.9	14.3	3.4
대전/세종/충청	(13)	7.7	53.8	30.8	7.7	38.5	7.7	3.4
대구/경북	(14)	21.4	71.4	7.1	0.0	7.1	21.4	2.9
부산/울산/경남	(9)	22.2	55.6	22.2	0.0	22.2	22.2	3.0
광주/전라	(17)	0.0	76.5	23.5	0.0	23.5	0.0	3.2
강원/제주	(16)	12.5	43.8	31.3	12.5	43.8	12.5	3.4

[표 9-1-3] 개정 및 보완 필요성_자치법규의 체제

[문9-1-3]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 중 개정이나 보완이 시급한 부분은 어디인가요?
_자치법규의 체제

(단위 : %)

Base=자치법규 매뉴얼 인지자	사례수 (명)	필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필요한 편이다	꼭 필요 하다	Top2	Bot2	평 균
▣ 전체 ▣	(100)	16.0	61.0	21.0	2.0	23.0	16.0	3.1
성별								
남성	(67)	20.9	56.7	20.9	1.5	22.4	20.9	3.0
여성	(33)	6.1	69.7	21.2	3.0	24.2	6.1	3.2
연령								
30대	(24)	20.8	54.2	20.8	4.2	25.0	20.8	3.1
40대	(47)	10.6	59.6	27.7	2.1	29.8	10.6	3.2
50대 이상	(29)	20.7	69.0	10.3	0.0	10.3	20.7	2.9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11.4	60.0	25.7	2.9	28.6	11.4	3.2
교육	(6)	16.7	66.7	16.7	0.0	16.7	16.7	3.0
규제심사	(6)	33.3	33.3	33.3	0.0	33.3	33.3	3.0
입법지원	(53)	17.0	64.2	17.0	1.9	18.9	17.0	3.0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17.5	60.3	20.6	1.6	22.2	17.5	3.1
3-5년	(17)	17.6	52.9	23.5	5.9	29.4	17.6	3.2
5-10년	(10)	10.0	70.0	20.0	0.0	20.0	10.0	3.1
10년이상	(10)	10.0	70.0	20.0	0.0	20.0	10.0	3.1
현근무지역								
서울	(10)	10.0	70.0	20.0	0.0	20.0	10.0	3.1
경기/인천	(21)	19.0	38.1	38.1	4.8	42.9	19.0	3.3
대전/세종/충청	(13)	7.7	76.9	7.7	7.7	15.4	7.7	3.2
대구/경북	(14)	28.6	64.3	7.1	0.0	7.1	28.6	2.8
부산/울산/경남	(9)	11.1	66.7	22.2	0.0	22.2	11.1	3.1
광주/전라	(17)	17.6	64.7	17.6	0.0	17.6	17.6	3.0
강원/제주	(16)	12.5	62.5	25.0	0.0	25.0	12.5	3.1

[표 9-1-4] 개정 및 보완 필요성_자치법규의 입안 절차 및 기준

[문9-1-4]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 중 개정이나 보완이 시급한 부분은 어디인가요?
_자치법규의 입안 절차 및 기준

(단위 : %)

Base=자치법규 매뉴얼 인지자	사례수 (명)	필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필요한 편이다	꼭 필요 하다	Top2	Bot2	평 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100)	17.0	57.0	25.0	1.0	26.0	17.0	3.1
성별								
남성	(67)	19.4	53.7	25.4	1.5	26.9	19.4	3.1
여성	(33)	12.1	63.6	24.2	0.0	24.2	12.1	3.1
연령								
30대	(24)	8.3	54.2	33.3	4.2	37.5	8.3	3.3
40대	(47)	14.9	55.3	29.8	0.0	29.8	14.9	3.1
50대 이상	(29)	27.6	62.1	10.3	0.0	10.3	27.6	2.8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14.3	60.0	22.9	2.9	25.7	14.3	3.1
교육	(6)	16.7	33.3	50.0	0.0	50.0	16.7	3.3
규제심사	(6)	33.3	33.3	33.3	0.0	33.3	33.3	3.0
입법지원	(53)	17.0	60.4	22.6	0.0	22.6	17.0	3.1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15.9	57.1	27.0	0.0	27.0	15.9	3.1
3-5년	(17)	5.9	58.8	29.4	5.9	35.3	5.9	3.4
5-10년	(10)	30.0	50.0	20.0	0.0	20.0	30.0	2.9
10년이상	(10)	30.0	60.0	10.0	0.0	10.0	30.0	2.8
현근무지역								
서울	(10)	20.0	60.0	20.0	0.0	20.0	20.0	3.0
경기/인천	(21)	14.3	33.3	47.6	4.8	52.4	14.3	3.4
대전/세종/충청	(13)	15.4	69.2	15.4	0.0	15.4	15.4	3.0
대구/경북	(14)	28.6	64.3	7.1	0.0	7.1	28.6	2.8
부산/울산/경남	(9)	22.2	55.6	22.2	0.0	22.2	22.2	3.0
광주/전라	(17)	17.6	76.5	5.9	0.0	5.9	17.6	2.9
강원/제주	(16)	6.3	50.0	43.8	0.0	43.8	6.3	3.4

[표 9-1-5)] 개정 및 보완 필요성_자치법규의 입안 형식

[문9-1-5)]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 중 개정이나 보완이 시급한 부분은 어디인가요?
_자치법규의 입안 형식

(단위 : %)

Base=자치법규 매뉴얼 인지자	사례 수 (명)	필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필요한 편이다	꼭 필요 하다	Top2	Bot2	평 균
▣ 전체 ▣	(100)	13.0	56.0	26.0	5.0	31.0	13.0	3.2
성별								
남성	(67)	13.4	52.2	28.4	6.0	34.3	13.4	3.3
여성	(33)	12.1	63.6	21.2	3.0	24.2	12.1	3.2
연령								
30대	(24)	12.5	50.0	25.0	12.5	37.5	12.5	3.4
40대	(47)	10.6	48.9	36.2	4.3	40.4	10.6	3.3
50대 이상	(29)	17.2	72.4	10.3	0.0	10.3	17.2	2.9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14.3	60.0	17.1	8.6	25.7	14.3	3.2
교육	(6)	16.7	33.3	50.0	0.0	50.0	16.7	3.3
규제심사	(6)	33.3	33.3	33.3	0.0	33.3	33.3	3.0
입법지원	(53)	9.4	58.5	28.3	3.8	32.1	9.4	3.3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12.7	60.3	25.4	1.6	27.0	12.7	3.2
3-5년	(17)	5.9	41.2	29.4	23.5	52.9	5.9	3.7
5-10년	(10)	30.0	40.0	30.0	0.0	30.0	30.0	3.0
10년이상	(10)	10.0	70.0	20.0	0.0	20.0	10.0	3.1
현근무지역								
서울	(10)	20.0	50.0	20.0	10.0	30.0	20.0	3.2
경기/인천	(21)	9.5	42.9	38.1	9.5	47.6	9.5	3.5
대전/세종/충청	(13)	7.7	61.5	30.8	0.0	30.8	7.7	3.2
대구/경북	(14)	28.6	64.3	7.1	0.0	7.1	28.6	2.8
부산/울산/경남	(9)	22.2	55.6	22.2	0.0	22.2	22.2	3.0
광주/전라	(17)	5.9	70.6	23.5	0.0	23.5	5.9	3.2
강원/제주	(16)	6.3	50.0	31.3	12.5	43.8	6.3	3.5

[표 9-1-6)] 개정 및 보완 필요성_자치법규의 문장 작성 원칙

[문9-1-6)]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 중 개정이나 보완이 시급한 부분은 어디인가요?
_자치법규의 문장 작성 원칙

(단위 : %)

Base=자치법규 매뉴얼 인지자	사례수 (명)	전혀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필요한 편이다	꼭 필요 하다	Top2	Bot2	평 균
▣ 전체 ▣	(100)	2.0	11.0	50.0	33.0	4.0	37.0	13.0	3.3
성별									
남성	(67)	3.0	11.9	49.3	29.9	6.0	35.8	14.9	3.2
여성	(33)	0.0	9.1	51.5	39.4	0.0	39.4	9.1	3.3
연령									
30대	(24)	0.0	8.3	54.2	33.3	4.2	37.5	8.3	3.3
40대	(47)	2.1	10.6	38.3	42.6	6.4	48.9	12.8	3.4
50대 이상	(29)	3.4	13.8	65.5	17.2	0.0	17.2	17.2	3.0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2.9	11.4	54.3	25.7	5.7	31.4	14.3	3.2
교육	(6)	0.0	16.7	33.3	50.0	0.0	50.0	16.7	3.3
규제심사	(6)	0.0	33.3	33.3	33.3	0.0	33.3	33.3	3.0
입법지원	(53)	1.9	7.5	50.9	35.8	3.8	39.6	9.4	3.3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0.0	11.1	55.6	31.7	1.6	33.3	11.1	3.2
3-5년	(17)	0.0	5.9	35.3	41.2	17.6	58.8	5.9	3.7
5-10년	(10)	10.0	20.0	30.0	40.0	0.0	40.0	30.0	3.0
10년이상	(10)	10.0	10.0	60.0	20.0	0.0	20.0	20.0	2.9
현근무지역									
서울	(10)	0.0	20.0	50.0	30.0	0.0	30.0	20.0	3.1
경기/인천	(21)	0.0	9.5	38.1	42.9	9.5	52.4	9.5	3.5
대전/세종/충청	(13)	7.7	0.0	53.8	38.5	0.0	38.5	7.7	3.2
대구/경북	(14)	0.0	21.4	71.4	7.1	0.0	7.1	21.4	2.9
부산/울산/경남	(9)	11.1	22.2	44.4	22.2	0.0	22.2	33.3	2.8
광주/전라	(17)	0.0	5.9	64.7	29.4	0.0	29.4	5.9	3.2
강원/제주	(16)	0.0	6.3	31.3	50.0	12.5	62.5	6.3	3.7

[표 9-1-1)-1] 개정 및 보완 영역_자치법규 입안의 기본 원칙

[문9-1-1)-1] 구체적으로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을 기입해주세요
_자치법규 입안의 기본 원칙

(단위 : %)

Base=개정 및 보완 필요 인자	사례수 (명)	이해 하기 쉽게	다양한 최신 사례 필요	의회 관련 부분 보완	알기 쉽고 간단 하게	자치 법규와 법령 관계 정립 필요	현실 적인 개정 및 보완 필요	입문 수준 맞는 매뉴얼 필요	모르 겠음
▣ 전체 ▣	(19)	5.3	42.1	5.3	5.3	5.3	15.8	5.3	15.8
성별									
남성	(11)	9.1	27.3	9.1	0.0	9.1	18.2	9.1	18.2
여성	(8)	0.0	62.5	0.0	12.5	0.0	12.5	0.0	12.5
연령									
30대	(5)	20.0	60.0	0.0	20.0	0.0	0.0	0.0	0.0
40대	(9)	0.0	44.4	0.0	0.0	11.1	33.3	0.0	11.1
50대 이상	(5)	0.0	20.0	20.0	0.0	0.0	0.0	20.0	40.0
담당업무									
법제업무	(7)	14.3	28.6	14.3	14.3	0.0	14.3	14.3	0.0
교육	(1)	0.0	100.0	0.0	0.0	0.0	0.0	0.0	0.0
규제심사	(2)	0.0	0.0	0.0	0.0	0.0	100.0	0.0	0.0
입법지원	(9)	0.0	55.6	0.0	0.0	11.1	0.0	0.0	33.3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12)	0.0	50.0	0.0	8.3	0.0	16.7	8.3	16.7
3-5년	(4)	25.0	50.0	25.0	0.0	0.0	0.0	0.0	0.0
5-10년	(2)	0.0	0.0	0.0	0.0	50.0	0.0	0.0	50.0
10년이상	(1)	0.0	0.0	0.0	0.0	0.0	100.0	0.0	0.0
현근무지역									
서울	(1)	0.0	0.0	0.0	0.0	0.0	100.0	0.0	0.0
경기/인천	(8)	12.5	75.0	0.0	12.5	0.0	0.0	0.0	0.0
대전/세종/충청	(2)	0.0	50.0	0.0	0.0	0.0	0.0	0.0	50.0
부산/울산/경남	(3)	0.0	33.3	33.3	0.0	0.0	33.3	0.0	0.0
광주/전라	(3)	0.0	0.0	0.0	0.0	33.3	0.0	0.0	66.7
강원/제주	(2)	0.0	0.0	0.0	0.0	0.0	50.0	50.0	0.0

[표 9-1-2)-2] 개정 및 보완 영역_세부 입안 기준

[문9-1-2)-2] 구체적으로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을 기입해주세요
_세부 입안 기준

(단위 : %)

Base=개정 및 보완 필요 인자	사례수 (명)	다양한 최신 사례 필요	이해 하기 쉽게	법령에 맞게 수정	위법 판결된 부분 보완 필요	현실 적인 개정 및 보완 필요	영상 매뉴얼 보급	적정한 수준	모르 겠음
▣ 전체 ▣	(31)	51.6	3.2	12.9	3.2	6.5	3.2	3.2	16.1
성별									
남성	(22)	40.9	4.5	18.2	4.5	4.5	4.5	4.5	18.2
여성	(9)	77.8	0.0	0.0	0.0	11.1	0.0	0.0	11.1
연령									
30대	(9)	77.8	11.1	0.0	11.1	0.0	0.0	0.0	0.0
40대	(17)	41.2	0.0	17.6	0.0	11.8	0.0	5.9	23.5
50대 이상	(5)	40.0	0.0	20.0	0.0	0.0	20.0	0.0	20.0
담당업무									
법제업무	(11)	45.5	9.1	0.0	9.1	9.1	9.1	9.1	9.1
교육	(2)	100.0	0.0	0.0	0.0	0.0	0.0	0.0	0.0
규제심사	(2)	0.0	0.0	50.0	0.0	50.0	0.0	0.0	0.0
입법지원	(16)	56.3	0.0	18.8	0.0	0.0	0.0	0.0	25.0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19)	52.6	0.0	10.5	5.3	0.0	5.3	5.3	21.1
3-5년	(7)	42.9	14.3	28.6	0.0	14.3	0.0	0.0	0.0
5-10년	(2)	100.0	0.0	0.0	0.0	0.0	0.0	0.0	0.0
10년이상	(3)	33.3	0.0	0.0	0.0	33.3	0.0	0.0	33.3
현근무지역									
서울	(3)	33.3	0.0	33.3	0.0	0.0	0.0	33.3	0.0
경기/인천	(9)	66.7	11.1	11.1	11.1	0.0	0.0	0.0	0.0
대전/세종/충청	(5)	40.0	0.0	0.0	0.0	20.0	0.0	0.0	40.0
대구/경북	(1)	0.0	0.0	0.0	0.0	0.0	0.0	0.0	100.0
부산/울산/경남	(2)	50.0	0.0	50.0	0.0	0.0	0.0	0.0	0.0
광주/전라	(4)	50.0	0.0	0.0	0.0	0.0	0.0	0.0	50.0
강원/제주	(7)	57.1	0.0	14.3	0.0	14.3	14.3	0.0	0.0

[표 9-1-3)-3] 개정 및 보완 영역_자치법규의 체제

[문9-1-3)-3] 구체적으로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을 기입해주세요
_자치법규의 체제

(단위 : %)

Base=개정 및 보완 필요 인지자	사례수 (명)	다양한 예시	이해 하기 쉽게	이론 보강	분량 강화	구체적 해석 필요	오탈자 띄어 쓰기 수정	현행에 맞게 개정 필요	자체 법규의 의미	법령에 맞게 수정	지방 자치 단체 사용료 징수	모르겠음
▣ 전체 ▣	(23)	26.1	4.3	4.3	4.3	8.7	4.3	21.7	4.3	4.3	4.3	13.0
성별												
남성	(15)	26.7	6.7	0.0	0.0	6.7	6.7	20.0	0.0	6.7	6.7	20.0
여성	(8)	25.0	0.0	12.5	12.5	12.5	0.0	25.0	12.5	0.0	0.0	0.0
연령												
30대	(6)	16.7	16.7	0.0	16.7	16.7	16.7	0.0	16.7	0.0	0.0	0.0
40대	(14)	35.7	0.0	7.1	0.0	7.1	0.0	35.7	0.0	7.1	0.0	7.1
50대 이상	(3)	0.0	0.0	0.0	0.0	0.0	0.0	0.0	0.0	0.0	33.3	66.7
담당업무												
법제업무	(10)	40.0	10.0	0.0	0.0	10.0	10.0	20.0	10.0	0.0	0.0	0.0
교육	(1)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규제심사	(2)	0.0	0.0	0.0	0.0	0.0	0.0	50.0	0.0	50.0	0.0	0.0
입법지원	(10)	20.0	0.0	0.0	10.0	10.0	0.0	20.0	0.0	0.0	10.0	30.0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14)	35.7	0.0	7.1	7.1	7.1	7.1	14.3	7.1	7.1	0.0	7.1
3-5년	(5)	20.0	20.0	0.0	0.0	20.0	0.0	0.0	0.0	0.0	0.0	40.0
5-10년	(2)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년이상	(2)	0.0	0.0	0.0	0.0	0.0	0.0	50.0	0.0	0.0	50.0	0.0
현근무지역												
서울	(2)	0.0	0.0	0.0	0.0	0.0	0.0	50.0	0.0	0.0	0.0	50.0
경기/인천	(9)	33.3	11.1	0.0	11.1	22.2	11.1	0.0	11.1	0.0	0.0	0.0
대전/세종/충청	(2)	50.0	0.0	0.0	0.0	0.0	0.0	50.0	0.0	0.0	0.0	0.0
대구/경북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부산/울산/경남	(2)	0.0	0.0	50.0	0.0	0.0	0.0	0.0	0.0	50.0	0.0	0.0
광주/전라	(3)	0.0	0.0	0.0	0.0	0.0	0.0	33.3	0.0	0.0	0.0	66.7
강원/제주	(4)	50.0	0.0	0.0	0.0	0.0	0.0	50.0	0.0	0.0	0.0	0.0

[표 9-1-4)-4] 개정 및 보완 영역_자치법규의 입안 절차 및 기준

[문9-1-4)-4] 구체적으로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을 기입해주세요
_자치법규의 입안 절차 및 기준

(단위 : %)

Base=개정 및 보완 필요 인지도	사례수 (명)	의원회 발의 법입안 절차 안내	명확하고 세부적인 제	그림 순서용 하어 설명	세부적인 명	최신 판례 구체적 사례 제시	분량 강화	이해기 쉽게	재의구명명 보완	보안개정	입법기간 축	현행법맞게 개정	모름
▣ 전체 ▣	(26)	3.8	7.7	7.7	3.8	23.1	7.7	3.8	3.8	3.8	3.8	11.5	19.2
성별													
남성	(18)	5.6	11.1	5.6	0.0	22.2	5.6	0.0	5.6	0.0	5.6	11.1	27.8
여성	(8)	0.0	0.0	12.5	12.5	25.0	12.5	12.5	0.0	12.5	0.0	12.5	0.0
연령													
30대	(9)	0.0	11.1	11.1	0.0	11.1	22.2	0.0	11.1	11.1	0.0	0.0	22.2
40대	(14)	7.1	7.1	7.1	7.1	28.6	0.0	7.1	0.0	0.0	0.0	21.4	14.3
50대 이상	(3)	0.0	0.0	0.0	0.0	33.3	0.0	0.0	0.0	0.0	33.3	0.0	33.3
담당업무													
법제업무	(9)	11.1	22.2	0.0	0.0	11.1	0.0	0.0	11.1	11.1	11.1	11.1	11.1
교육	(3)	0.0	0.0	66.7	0.0	33.3	0.0	0.0	0.0	0.0	0.0	0.0	0.0
규제심사	(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입법지원	(12)	0.0	0.0	0.0	8.3	33.3	16.7	8.3	0.0	0.0	0.0	0.0	33.3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17)	0.0	0.0	5.9	5.9	23.5	11.8	5.9	5.9	5.9	5.9	11.8	17.6
3-5년	(6)	16.7	16.7	0.0	0.0	33.3	0.0	0.0	0.0	0.0	0.0	0.0	33.3
5-10년	(2)	0.0	5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년이상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현근무지역													
서울	(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50.0	50.0
경기/인천	(11)	0.0	9.1	9.1	0.0	27.3	18.2	0.0	9.1	9.1	0.0	0.0	18.2
대전/세종/충청	(2)	0.0	0.0	0.0	0.0	50.0	0.0	0.0	0.0	0.0	50.0	0.0	0.0
대구/경북	(1)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부산/울산/경남	(2)	0.0	0.0	50.0	0.0	0.0	0.0	0.0	0.0	0.0	0.0	50.0	0.0
광주/전라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강원/제주	(7)	14.3	14.3	0.0	14.3	28.6	0.0	0.0	0.0	0.0	0.0	14.3	14.3

[표 9-1-5)-5] 개정 및 보완 영역_자치법규의 입안 형식

[문9-1-5)-5] 구체적으로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을 기입해주세요
_자치법규의 입안 형식

(단위 : %)

Base=개정 및 보완 필요 인지자	사례수 (명)	최신 판례 구체적 사례 제시	이해 하기 쉽게	조례 규칙 안 불필요 사례 제시	새로운 입안 형식 및 설명 필요	자치 법규 입안 형식 또는 조례 규칙 선문 제	일 개 방 식 명 추 가	명 확 하 고 세 부 적 기 제	현 규 정 령 개 정	모 르 겠 음
▣ 전체 ▣	(31)	45.2	6.5	3.2	6.5	3.2	3.2	3.2	12.9	16.1
성별										
남성	(23)	43.5	8.7	0.0	8.7	4.3	4.3	4.3	8.7	17.4
여성	(8)	50.0	0.0	12.5	0.0	0.0	0.0	0.0	25.0	12.5
연령										
30대	(9)	55.6	11.1	0.0	0.0	0.0	11.1	0.0	0.0	22.2
40대	(19)	47.4	0.0	5.3	10.5	5.3	0.0	5.3	21.1	5.3
50대 이상	(3)	0.0	33.3	0.0	0.0	0.0	0.0	0.0	0.0	66.7
담당업무										
법제업무	(9)	44.4	11.1	0.0	0.0	0.0	11.1	11.1	11.1	11.1
교육	(3)	33.3	0.0	33.3	0.0	0.0	0.0	0.0	0.0	33.3
규제심사	(2)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입법지원	(17)	52.9	5.9	0.0	11.8	5.9	0.0	0.0	5.9	17.6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17)	47.1	0.0	5.9	0.0	5.9	5.9	0.0	17.6	17.6
3-5년	(9)	55.6	11.1	0.0	11.1	0.0	0.0	11.1	0.0	11.1
5-10년	(3)	33.3	0.0	0.0	33.3	0.0	0.0	0.0	0.0	33.3
10년이상	(2)	0.0	50.0	0.0	0.0	0.0	0.0	0.0	50.0	0.0
현근무지역										
서울	(3)	33.3	0.0	0.0	33.3	0.0	0.0	0.0	33.3	0.0
경기/인천	(10)	60.0	10.0	0.0	0.0	0.0	10.0	0.0	0.0	20.0
대전/세종/충청	(4)	0.0	0.0	0.0	0.0	25.0	0.0	25.0	25.0	25.0
대구/경북	(1)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부산/울산/경남	(2)	0.0	0.0	50.0	0.0	0.0	0.0	0.0	50.0	0.0
광주/전라	(4)	25.0	0.0	0.0	25.0	0.0	0.0	0.0	0.0	50.0
강원/제주	(7)	85.7	0.0	0.0	0.0	0.0	0.0	0.0	14.3	0.0

[표 9-1-6)-6] 개정 및 보완 영역_자치법규의 문장 작성 원칙

[문9-1-6)-6] 구체적으로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을 기입해주세요
_자치법규의 문장 작성 원칙

(단위 : %)

Base=개정 및 보완 필요 인지도	사례수 (명)	띄어 쓰기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리 및 사례	이해 하기 쉽게	생활 용어 우리말 순화 명확한 용어 표현 확립	구체적 다양한 사례 제시	현행 규정 법령에 맞게 개정	개정 조례 자세한 설명 및 사례 보충	입법례 추가	명확 하고 세부 적인 기준 제시	모르 겠음
▣ 전체 ▣	(37)	5.4	5.4	5.4	32.4	10.8	5.4	2.7	10.8	21.6
성별										
남성	(24)	4.2	4.2	8.3	20.8	12.5	8.3	4.2	12.5	25.0
여성	(13)	7.7	7.7	0.0	53.8	7.7	0.0	0.0	7.7	15.4
연령										
30대	(9)	0.0	22.2	0.0	44.4	0.0	11.1	11.1	0.0	11.1
40대	(23)	8.7	0.0	4.3	30.4	17.4	4.3	0.0	13.0	21.7
50대 이상	(5)	0.0	0.0	20.0	20.0	0.0	0.0	0.0	20.0	40.0
담당업무										
법제업무	(11)	9.1	9.1	0.0	18.2	0.0	9.1	9.1	27.3	18.2
교육	(3)	0.0	0.0	0.0	33.3	33.3	0.0	0.0	0.0	33.3
규제심사	(2)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입법지원	(21)	4.8	4.8	9.5	42.9	4.8	4.8	0.0	4.8	23.8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21)	4.8	4.8	4.8	38.1	4.8	4.8	4.8	9.5	23.8
3-5년	(10)	10.0	10.0	0.0	40.0	20.0	10.0	0.0	10.0	0.0
5-10년	(4)	0.0	0.0	25.0	0.0	0.0	0.0	0.0	25.0	50.0
10년이상	(2)	0.0	0.0	0.0	0.0	50.0	0.0	0.0	0.0	50.0
현근무지역										
서울	(3)	0.0	0.0	0.0	33.3	33.3	0.0	0.0	33.3	0.0
경기/인천	(11)	0.0	9.1	0.0	45.5	9.1	9.1	9.1	9.1	9.1
대전/세종/충청	(5)	0.0	0.0	0.0	20.0	0.0	0.0	0.0	20.0	60.0
대구/경북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부산/울산/경남	(2)	0.0	0.0	0.0	50.0	50.0	0.0	0.0	0.0	0.0
광주/전라	(5)	0.0	20.0	0.0	20.0	0.0	0.0	0.0	20.0	40.0
강원/제주	(10)	10.0	0.0	20.0	30.0	10.0	10.0	0.0	0.0	20.0

[표 10] 행자부 자치법규 입법실무 망라성

[문10]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입법 실무’는 2012년 말에 발간되었습니다. 자치법규(조례) 입안 실무에서 다루고 있는 자치법규(조례) 입법 절차 및 기준과, 자치법규의 입안형식이 자치 법규 입안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단위 : %)

Base=자치법규 매뉴얼 인지자	사례수 (명)	별로 다루고 있지 않다	보통 이다	대부분 다루고 있다	모두 다루고 있다	Top2	Bot2	평 균
▣ 전체 ▣	(100)	5.0	42.0	52.0	1.0	53.0	5.0	3.5
성별								
남성	(67)	4.5	43.3	50.7	1.5	52.2	4.5	3.5
여성	(33)	6.1	39.4	54.5	0.0	54.5	6.1	3.5
연령								
30대	(24)	8.3	41.7	50.0	0.0	50.0	8.3	3.4
40대	(47)	6.4	48.9	42.6	2.1	44.7	6.4	3.4
50대 이상	(29)	0.0	31.0	69.0	0.0	69.0	0.0	3.7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5.7	31.4	62.9	0.0	62.9	5.7	3.6
교육	(6)	0.0	50.0	50.0	0.0	50.0	0.0	3.5
규제심사	(6)	0.0	0.0	100.0	0.0	100.0	0.0	4.0
입법지원	(53)	5.7	52.8	39.6	1.9	41.5	5.7	3.4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3.2	34.9	60.3	1.6	61.9	3.2	3.6
3-5년	(17)	11.8	64.7	23.5	0.0	23.5	11.8	3.1
5-10년	(10)	10.0	30.0	60.0	0.0	60.0	10.0	3.5
10년이상	(10)	0.0	60.0	40.0	0.0	40.0	0.0	3.4
현근무지역								
서울	(10)	10.0	50.0	40.0	0.0	40.0	10.0	3.3
경기/인천	(21)	4.8	52.4	42.9	0.0	42.9	4.8	3.4
대전/세종/충청	(13)	7.7	53.8	38.5	0.0	38.5	7.7	3.3
대구/경북	(14)	0.0	42.9	57.1	0.0	57.1	0.0	3.6
부산/울산/경남	(9)	0.0	22.2	77.8	0.0	77.8	0.0	3.8
광주/전라	(17)	11.8	29.4	52.9	5.9	58.8	11.8	3.5
강원/제주	(16)	0.0	37.5	62.5	0.0	62.5	0.0	3.6

[표 11]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매뉴얼 망라성

[문11] 법제처의 ‘주제별·조문별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 또한 2013년에 발간되었는데, 이 책자의 세부 입안 기준은 자치법규(조례) 입안에 필요한 사항을 망라해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단위 : %)

Base=자치법규 매뉴얼 인지자	사례수 (명)	별로 다루고 있지 않다	보통 이다	대부분 다루고 있다	모두 다루고 있다	Top2	Bot2	평 균
▣ 전체 ▣	(100)	2.0	39.0	54.0	5.0	59.0	2.0	3.6
성별								
남성	(67)	0.0	38.8	55.2	6.0	61.2	0.0	3.7
여성	(33)	6.1	39.4	51.5	3.0	54.5	6.1	3.5
연령								
30대	(24)	4.2	50.0	41.7	4.2	45.8	4.2	3.5
40대	(47)	2.1	42.6	51.1	4.3	55.3	2.1	3.6
50대 이상	(29)	0.0	24.1	69.0	6.9	75.9	0.0	3.8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0.0	25.7	71.4	2.9	74.3	0.0	3.8
교육	(6)	0.0	50.0	33.3	16.7	50.0	0.0	3.7
규제심사	(6)	0.0	0.0	100.0	0.0	100.0	0.0	4.0
입법지원	(53)	3.8	50.9	39.6	5.7	45.3	3.8	3.5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1.6	33.3	60.3	4.8	65.1	1.6	3.7
3-5년	(17)	5.9	58.8	35.3	0.0	35.3	5.9	3.3
5-10년	(10)	0.0	30.0	50.0	20.0	70.0	0.0	3.9
10년이상	(10)	0.0	50.0	50.0	0.0	50.0	0.0	3.5
현근무지역								
서울	(10)	10.0	60.0	30.0	0.0	30.0	10.0	3.2
경기/인천	(21)	0.0	42.9	47.6	9.5	57.1	0.0	3.7
대전/세종/충청	(13)	0.0	30.8	61.5	7.7	69.2	0.0	3.8
대구/경북	(14)	0.0	35.7	64.3	0.0	64.3	0.0	3.6
부산/울산/경남	(9)	0.0	44.4	44.4	11.1	55.6	0.0	3.7
광주/전라	(17)	5.9	29.4	58.8	5.9	64.7	5.9	3.6
강원/제주	(16)	0.0	37.5	62.5	0.0	62.5	0.0	3.6

[표 12] 다양한 법령을 예시로 설명하는 방식의 도움 정도

[문12] 법제처의 ‘주제별·조문별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에서 다루고 있는 자치법규의 체제 및 문장작성의 원칙에서는 다양한 법령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이 실제 조례 입안 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단위 : %)

Base=자치법규 매뉴얼 안짜자	사례수 (명)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	별로 도움 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다소 도움 된다	매우 도움 된다	Top2	Bot2	평균
▣ 전체 ▣	(100)	1.0	1.0	17.0	54.0	27.0	81.0	2.0	4.1
성별									
남성	(67)	1.5	1.5	16.4	50.7	29.9	80.6	3.0	4.1
여성	(33)	0.0	0.0	18.2	60.6	21.2	81.8	0.0	4.0
연령									
30대	(24)	4.2	4.2	25.0	58.3	8.3	66.7	8.3	3.6
40대	(47)	0.0	0.0	17.0	59.6	23.4	83.0	0.0	4.1
50대 이상	(29)	0.0	0.0	10.3	41.4	48.3	89.7	0.0	4.4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2.9	0.0	5.7	62.9	28.6	91.4	2.9	4.1
교육	(6)	0.0	0.0	16.7	33.3	50.0	83.3	0.0	4.3
규제심사	(6)	0.0	0.0	0.0	50.0	50.0	100.0	0.0	4.5
입법지원	(53)	0.0	1.9	26.4	50.9	20.8	71.7	1.9	3.9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0.0	0.0	15.9	55.6	28.6	84.1	0.0	4.1
3-5년	(17)	5.9	5.9	23.5	35.3	29.4	64.7	11.8	3.8
5-10년	(10)	0.0	0.0	10.0	50.0	40.0	90.0	0.0	4.3
10년이상	(10)	0.0	0.0	20.0	80.0	0.0	80.0	0.0	3.8
현근무지역									
서울	(10)	0.0	10.0	50.0	20.0	20.0	40.0	10.0	3.5
경기/인천	(21)	4.8	0.0	14.3	57.1	23.8	81.0	4.8	4.0
대전/세종/충청	(13)	0.0	0.0	7.7	53.8	38.5	92.3	0.0	4.3
대구/경북	(14)	0.0	0.0	7.1	64.3	28.6	92.9	0.0	4.2
부산/울산/경남	(9)	0.0	0.0	11.1	55.6	33.3	88.9	0.0	4.2
광주/전라	(17)	0.0	0.0	17.6	47.1	35.3	82.4	0.0	4.2
강원/제주	(16)	0.0	0.0	18.8	68.8	12.5	81.3	0.0	3.9

[표 13] 자치법규 입법실무, 자치법규 입안매뉴얼의 실무 도움 정도

[문13] 최근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해 자치법규(조례) 입안과 관련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입법 실무’, ‘주제별·조문별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이 입안 지원 실무에 도움이 되고 있나요?

(단위 : %)

Base=자치법규 매뉴얼 인지도	사례수 (명)	별로 도움 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다소 도움 된다	매우 도움 된다	Top2	Bot2	평 균
▣ 전체 ▣	(100)	2.0	16.0	56.0	26.0	82.0	2.0	4.1
성별								
남성	(67)	1.5	16.4	53.7	28.4	82.1	1.5	4.1
여성	(33)	3.0	15.2	60.6	21.2	81.8	3.0	4.0
연령								
30대	(24)	4.2	29.2	54.2	12.5	66.7	4.2	3.8
40대	(47)	2.1	12.8	61.7	23.4	85.1	2.1	4.1
50대 이상	(29)	0.0	10.3	48.3	41.4	89.7	0.0	4.3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0.0	8.6	57.1	34.3	91.4	0.0	4.3
교육	(6)	0.0	16.7	16.7	66.7	83.3	0.0	4.5
규제심사	(6)	0.0	0.0	50.0	50.0	100.0	0.0	4.5
입법지원	(53)	3.8	22.6	60.4	13.2	73.6	3.8	3.8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1.6	11.1	57.1	30.2	87.3	1.6	4.2
3-5년	(17)	5.9	35.3	35.3	23.5	58.8	5.9	3.8
5-10년	(10)	0.0	10.0	60.0	30.0	90.0	0.0	4.2
10년이상	(10)	0.0	20.0	80.0	0.0	80.0	0.0	3.8
현근무지역								
서울	(10)	10.0	40.0	30.0	20.0	50.0	10.0	3.6
경기/인천	(21)	0.0	23.8	47.6	28.6	76.2	0.0	4.0
대전/세종/충청	(13)	7.7	15.4	53.8	23.1	76.9	7.7	3.9
대구/경북	(14)	0.0	7.1	64.3	28.6	92.9	0.0	4.2
부산/울산/경남	(9)	0.0	0.0	55.6	44.4	100.0	0.0	4.4
광주/전라	(17)	0.0	11.8	58.8	29.4	88.2	0.0	4.2
강원/제주	(16)	0.0	12.5	75.0	12.5	87.5	0.0	4.0

[표 14] 자치법규 입법실무, 자치법규 입안매뉴얼의 개정 및 보완 주기

[문14] 선생님께서는 지방자치 입법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입법실무’, ‘주제별·조문별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개정해야 한다면, 개정 및 보완이 몇 년 주기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단위 : %)

Base=자치법규 매뉴얼 인지자	사례수 (명)	1년	2년	3년	4년	5년 이상
▣ 전체 ▣	(100)	18.0	44.0	31.0	5.0	2.0
성별						
남성	(67)	19.4	44.8	29.9	4.5	1.5
여성	(33)	15.2	42.4	33.3	6.1	3.0
연령						
30대	(24)	20.8	37.5	33.3	8.3	0.0
40대	(47)	19.1	48.9	25.5	6.4	0.0
50대 이상	(29)	13.8	41.4	37.9	0.0	6.9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11.4	48.6	37.1	0.0	2.9
교육	(6)	33.3	33.3	16.7	16.7	0.0
규제심사	(6)	0.0	33.3	66.7	0.0	0.0
입법지원	(53)	22.6	43.4	24.5	7.5	1.9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15.9	44.4	33.3	4.8	1.6
3-5년	(17)	29.4	47.1	23.5	0.0	0.0
5-10년	(10)	0.0	50.0	30.0	10.0	10.0
10년이상	(10)	30.0	30.0	30.0	10.0	0.0
현근무지역						
서울	(10)	20.0	60.0	20.0	0.0	0.0
경기/인천	(21)	19.0	47.6	28.6	4.8	0.0
대전/세종/충청	(13)	38.5	23.1	30.8	7.7	0.0
대구/경북	(14)	7.1	35.7	50.0	7.1	0.0
부산/울산/경남	(9)	11.1	33.3	33.3	0.0	22.2
광주/전라	(17)	29.4	47.1	23.5	0.0	0.0
강원/제주	(16)	0.0	56.3	31.3	12.5	0.0

[표 15-1] 조례 입안심사기준 마련 시 가장 중요하게 포함되어야 할 사항(1순위)

[문15] 새롭게 조례 입안심사기준 마련 시 가장 중요하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말씀해주세요.(1순위)

(단위 : %)

Base=자치법규 매뉴얼 인지자	사례수 (명)	다양한 세부 입안 기준 관련 조례 예시	조례 입안 심사 시 문제될 사안 예시	주로 사용되는 입안 기준의 구체적 제시	신규 기준의 비교 및 차이점 제시	판례/해석례 등 참고 자료 제시
▣ 전체 ▣	(100)	34.0	33.0	17.0	11.0	5.0
성별						
남성	(67)	41.8	25.4	16.4	10.4	6.0
여성	(33)	18.2	48.5	18.2	12.1	3.0
연령						
30대	(24)	33.3	25.0	33.3	4.2	4.2
40대	(47)	34.0	29.8	14.9	17.0	4.3
50대 이상	(29)	34.5	44.8	6.9	6.9	6.9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34.3	25.7	20.0	17.1	2.9
교육	(6)	50.0	0.0	33.3	0.0	16.7
규제심사	(6)	16.7	50.0	16.7	16.7	0.0
입법지원	(53)	34.0	39.6	13.2	7.5	5.7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31.7	41.3	14.3	9.5	3.2
3-5년	(17)	41.2	17.6	23.5	11.8	5.9
5-10년	(10)	30.0	20.0	30.0	10.0	10.0
10년이상	(10)	40.0	20.0	10.0	20.0	10.0
현근무지역						
서울	(10)	30.0	20.0	50.0	0.0	0.0
경기/인천	(21)	38.1	33.3	19.0	4.8	4.8
대전/세종/충청	(13)	7.7	61.5	15.4	7.7	7.7
대구/경북	(14)	50.0	21.4	7.1	21.4	0.0
부산/울산/경남	(9)	44.4	33.3	11.1	0.0	11.1
광주/전라	(17)	23.5	29.4	11.8	23.5	11.8
강원/제주	(16)	43.8	31.3	12.5	12.5	0.0

[표 15-2] 조례 입안심사기준 마련 시 가장 중요하게 포함되어야 할 사항(1+2+3순위)

[문15] 새롭게 조례 입안심사기준 마련 시 가장 중요하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말씀해주세요.(1+2+3순위)

(단위 : %)

Base=자치법규 매뉴얼 인지자	사례수 (명)	다양한 세부 입안 기준 관련 조례 예시	조례 입안 심사 시 문제될 사안 예시	주로 사용되는 입안 기준의 구체적 제시	신규 기준의 비교 및 차이점 제시	판례/해석례 등 참고 자료 제시
▣ 전체 ▣	(100)	60.0	89.0	60.0	48.0	43.0
성별						
남성	(67)	64.2	85.1	53.7	52.2	44.8
여성	(33)	51.5	97.0	72.7	39.4	39.4
연령						
30대	(24)	62.5	91.7	66.7	37.5	41.7
40대	(47)	59.6	87.2	61.7	42.6	48.9
50대 이상	(29)	58.6	89.7	51.7	65.5	34.5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65.7	91.4	71.4	37.1	34.3
교육	(6)	50.0	50.0	83.3	33.3	83.3
규제심사	(6)	66.7	83.3	50.0	83.3	16.7
입법지원	(53)	56.6	92.5	50.9	52.8	47.2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60.3	90.5	65.1	46.0	38.1
3-5년	(17)	70.6	100.0	41.2	29.4	58.8
5-10년	(10)	50.0	70.0	50.0	70.0	60.0
10년이상	(10)	50.0	80.0	70.0	70.0	30.0
현근무지역						
서울	(10)	40.0	90.0	60.0	40.0	70.0
경기/인천	(21)	61.9	90.5	61.9	38.1	47.6
대전/세종/충청	(13)	53.8	84.6	69.2	53.8	38.5
대구/경북	(14)	71.4	85.7	57.1	50.0	35.7
부산/울산/경남	(9)	66.7	88.9	55.6	44.4	44.4
광주/전라	(17)	41.2	88.2	70.6	70.6	29.4
강원/제주	(16)	81.3	93.8	43.8	37.5	43.8

[표 16] 법령의 내용을 조례로 반복하는 자치법규의 입안 방식에 대한 의견

[문16] 법령의 내용을 조례로 반복하는 자치법규의 입안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단위 : %)

Base=자치법규 매뉴얼 인지자	사례수 (명)	완결성과 조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법령과의 중복은 필요하다	지역의 특수성 및 자치입법권의 확대를 고려해 법령에서는 간소
▣ 전체 ▣	(100)	26.0	74.0
성별			
남성	(67)	26.9	73.1
여성	(33)	24.2	75.8
연령			
30대	(24)	25.0	75.0
40대	(47)	25.5	74.5
50대 이상	(29)	27.6	72.4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17.1	82.9
교육	(6)	50.0	50.0
규제심사	(6)	16.7	83.3
입법지원	(53)	30.2	69.8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27.0	73.0
3-5년	(17)	5.9	94.1
5-10년	(10)	60.0	40.0
10년이상	(10)	20.0	80.0
현근무지역			
서울	(10)	20.0	80.0
경기/인천	(21)	38.1	61.9
대전/세종/충청	(13)	38.5	61.5
대구/경북	(14)	0.0	100.0
부산/울산/경남	(9)	33.3	66.7
광주/전라	(17)	29.4	70.6
강원/제주	(16)	18.8	81.3

[표 17] 실제 조례 사례 위주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제공의 필요성

[문17] 실제 조례 사례 위주의 자치법규(조례) 입안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제공이 필요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Base=자치법규 매뉴얼 인지자	사례수 (명)	별로 필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Top2	Bot2	평 균
▣ 전체 ▣	(100)	1.0	6.0	46.0	47.0	93.0	1.0	4.4
성별								
남성	(67)	1.5	6.0	47.8	44.8	92.5	1.5	4.4
여성	(33)	0.0	6.1	42.4	51.5	93.9	0.0	4.5
연령								
30대	(24)	4.2	0.0	54.2	41.7	95.8	4.2	4.3
40대	(47)	0.0	4.3	42.6	53.2	95.7	0.0	4.5
50대 이상	(29)	0.0	13.8	44.8	41.4	86.2	0.0	4.3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0.0	8.6	34.3	57.1	91.4	0.0	4.5
교육	(6)	0.0	0.0	50.0	50.0	100.0	0.0	4.5
규제심사	(6)	0.0	0.0	50.0	50.0	100.0	0.0	4.5
입법지원	(53)	1.9	5.7	52.8	39.6	92.5	1.9	4.3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1.6	4.8	42.9	50.8	93.7	1.6	4.4
3-5년	(17)	0.0	0.0	58.8	41.2	100.0	0.0	4.4
5-10년	(10)	0.0	10.0	40.0	50.0	90.0	0.0	4.4
10년이상	(10)	0.0	20.0	50.0	30.0	80.0	0.0	4.1
현근무지역								
서울	(10)	0.0	10.0	60.0	30.0	90.0	0.0	4.2
경기/인천	(21)	0.0	0.0	47.6	52.4	100.0	0.0	4.5
대전/세종/충청	(13)	0.0	0.0	61.5	38.5	100.0	0.0	4.4
대구/경북	(14)	7.1	14.3	35.7	42.9	78.6	7.1	4.1
부산/울산/경남	(9)	0.0	0.0	33.3	66.7	100.0	0.0	4.7
광주/전라	(17)	0.0	5.9	41.2	52.9	94.1	0.0	4.5
강원/제주	(16)	0.0	12.5	43.8	43.8	87.5	0.0	4.3

[표 18] 희망하는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교육 방식

[문18]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개편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제공한다면 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단위 : %)

Base=자치법규 매뉴얼 인지자	사례수 (명)	법제처, 행정 자치부 주관 교육장 방문 교육	지자체 별 순회 교육	주기적인 조례 입안 실무 교육	온라인 교육 이수	온라인 질의 답변 활성화
■ 전체 ■	(100)	27.0	67.0	1.0	4.0	1.0
성별						
남성	(67)	23.9	71.6	1.5	1.5	1.5
여성	(33)	33.3	57.6	0.0	9.1	0.0
연령						
30대	(24)	33.3	58.3	0.0	8.3	0.0
40대	(47)	27.7	63.8	2.1	4.3	2.1
50대 이상	(29)	20.7	79.3	0.0	0.0	0.0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34.3	62.9	0.0	2.9	0.0
교육	(6)	0.0	66.7	16.7	16.7	0.0
규제심사	(6)	16.7	83.3	0.0	0.0	0.0
입법지원	(53)	26.4	67.9	0.0	3.8	1.9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27.0	68.3	0.0	4.8	0.0
3-5년	(17)	41.2	47.1	5.9	0.0	5.9
5-10년	(10)	10.0	80.0	0.0	10.0	0.0
10년이상	(10)	20.0	80.0	0.0	0.0	0.0
현근무지역						
서울	(10)	30.0	60.0	0.0	10.0	0.0
경기/인천	(21)	28.6	66.7	4.8	0.0	0.0
대전/세종/충청	(13)	30.8	69.2	0.0	0.0	0.0
대구/경북	(14)	35.7	57.1	0.0	7.1	0.0
부산/울산/경남	(9)	22.2	77.8	0.0	0.0	0.0
광주/전라	(17)	23.5	70.6	0.0	5.9	0.0
강원/제주	(16)	18.8	68.8	0.0	6.3	6.3

[표 19] 적당한 교육 시간

[문19]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개편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제공한다면
교육시간은 얼마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단위 : %)

Base=자치법규 매뉴얼 인지자	사례수 (명)	8시간 (1일)	16시간 (2일)	24시간 (3일)	3일 이상
▣ 전체 ▣	(100)	25.0	29.0	32.0	14.0
성별					
남성	(67)	25.4	26.9	29.9	17.9
여성	(33)	24.2	33.3	36.4	6.1
연령					
30대	(24)	16.7	16.7	45.8	20.8
40대	(47)	23.4	25.5	38.3	12.8
50대 이상	(29)	34.5	44.8	10.3	10.3
담당업무					
법제업무	(35)	20.0	28.6	40.0	11.4
교육	(6)	33.3	33.3	16.7	16.7
규제심사	(6)	33.3	50.0	0.0	16.7
입법지원	(53)	26.4	26.4	32.1	15.1
담당업무 종사기간					
3년미만	(63)	22.2	31.7	34.9	11.1
3-5년	(17)	5.9	23.5	41.2	29.4
5-10년	(10)	30.0	40.0	10.0	20.0
10년이상	(10)	70.0	10.0	20.0	0.0
현근무지역					
서울	(10)	40.0	0.0	40.0	20.0
경기/인천	(21)	23.8	28.6	33.3	14.3
대전/세종/충청	(13)	38.5	15.4	38.5	7.7
대구/경북	(14)	7.1	42.9	50.0	0.0
부산/울산/경남	(9)	44.4	33.3	0.0	22.2
광주/전라	(17)	11.8	41.2	29.4	17.6
강원/제주	(16)	25.0	31.3	25.0	18.8